

2020

기획연구 2020-03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 (I)

연구진 이수인 · 서미경 · 임현선 · 조경옥 · 이주연 · 전희진 · 황영모 · 김시백 · 장성화 · 이동기 · 전아람

Jeonbuk Institute



기획연구 2020-03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



연구진

연구책임 이수인 ·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공동연구 서미경 ·

임현선 ·

조경옥 ·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연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전희진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영모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시백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장성화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이동기 ·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아람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국주영은 · 전라북도의원

김경주 ·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김명화 · 원불교전국여성회장

김성숙 · 전북여성단체연합 이사

김혜경 · 전북대학교 교수

송경숙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

엄영숙 · 전북대학교 교수

이윤애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혜숙 ·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조선희 ·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연구관리 코드 : 20GI0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목 차 | Contents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2. 연구 방법	8
3. 연구 기대효과	11
 제2장 전라북도 여성가족 및 정책현황과 진단	13
1. 여성 및 가족 미래 트렌드와 환경변화	15
2. 전라북도 여성·가족 현황 분석 및 진단	27
3. 전라북도 여성·가족 정책 분석	66
 제3장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89
1. 도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	91
2. 여성가족정책 영역별 전문가 FGI	125
3. 요약 및 시사	138
 제4장 비전과 전략	143
1. 비전 및 전략체계	145
2. 추진전략별 과제	152
 참고문헌	159

표 목 차 | Contents

〈표 1-1〉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주요목표와 세부 영역 및 과제	6
〈표 2-1〉 미래 트렌드로 본 전북의 여건과 변화	26
〈표 2-2〉 시도별 인구 현황 (2020.03)	27
〈표 2-3〉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 인구 추이	28
〈표 2-4〉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 연령별 인구 및 구성비 (2020.03)	29
〈표 2-5〉 전국 및 전라북도 세대구성별 가구 현황	31
〈표 2-6〉 전국 및 전라북도 한부모 가구 현황 (2018)	32
〈표 2-7〉 전국 및 전라북도 다문화 가구 현황 (2018)	32
〈표 2-8〉 전국 및 전라북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33
〈표 2-9〉 전국 및 전라북도 초혼연령	34
〈표 2-10〉 전국 및 전라북도 합계출산율, 출생건수 및 조출생률	35
〈표 2-11〉 시도별 고령인구 현황 (2019)	36
〈표 2-12〉 전국 및 전라북도 노령화 지수 및 부양비	37
〈표 2-13〉 전국 및 전라북도 인구 및 고령인구 추계	38
〈표 2-14〉 전국 및 전라북도 경제활동 현황	39
〈표 2-15〉 전국 및 전라북도 취업자의 성별 산업 분포	40
〈표 2-16〉 전국 및 전라북도 취업자의 성별 직업 분포	42
〈표 2-17〉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2018)	43
〈표 2-18〉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 (2018)	44
〈표 2-19〉 시도별 경력단절여성 규모 (2018)	45
〈표 2-20〉 시도별 아동인구 (2019)	47
〈표 2-21〉 전국 및 전라북도 아동인구 추이	48
〈표 2-22〉 전라북도 시군별 아동인구 (2019)	49
〈표 2-23〉 시도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현황 (2019)	50
〈표 2-24〉 전라북도 시군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현황 (2019)	51
〈표 2-25〉 시도별 유치원 설치 및 운영 현황 (2019년 기준)	52

〈표 2-26〉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 (2018)	53
〈표 2-27〉 여성공무원 및 여성관리직(5급 이상) 현황	54
〈표 2-28〉 여성위원 참여율	54
〈표 2-29〉 자원봉사 연간 참여 횟수 및 1회당 평균 시간	55
〈표 2-30〉 사회복지 시설 수 및 생활인원	57
〈표 2-31〉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58
〈표 2-32〉 장애유형별 성별 장애인 수	58
〈표 2-33〉 자살률	59
〈표 2-34〉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	61
〈표 2-35〉 재난 등 긴급상황 대처수준	65
〈표 2-36〉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69
〈표 2-37〉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2020년 예산	72
〈표 2-38〉 전라북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대과제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사업 ..	73
〈표 2-39〉 전라북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대과제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보장 ..	74
〈표 2-40〉 전라북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대과제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74
〈표 2-41〉 전라북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대과제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75
〈표 2-42〉 전라북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대과제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	76
〈표 2-43〉 전라북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대과제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76
〈표 2-44〉 전라북도 성평등지수 수준 변화(통계생산 연도기준)	80
〈표 2-45〉 정책영역별 성평등 점수 및 순위	81
〈표 2-46〉 전라북도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83
〈표 2-47〉 지역의 양성평등 비전 관련 선행연구 검토	85
 〈표 3-1〉 응답자 특성	 92
〈표 3-2〉 성별 전복 정주 여건에 대한 인식 차이	94
〈표 3-3〉 여성과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 중요한 정책	95
〈표 3-4〉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대상 및 가족유형	96
〈표 3-5〉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97
〈표 3-6〉 구직활동 시 어려움	97
〈표 3-7〉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지원	98

〈표 3-8〉 여성이 조직 내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98
〈표 3-9〉 여성의 정치적 의사결정권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	99
〈표 3-10〉 자녀돌봄 관련 추진 사업에 대한 요구	100
〈표 3-11〉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101
〈표 3-12〉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 정도	102
〈표 3-13〉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103
〈표 3-14〉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한 정책	104
〈표 3-15〉 전라북도 아동을 위해 필요한 정책	104
〈표 3-16〉 전라북도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정책	105
〈표 3-17〉 가족 내에서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106
〈표 3-18〉 차세대리더 양성이 중요한 분야	108
〈표 3-19〉 전라북도의 희망하는 미래상	109
〈표 3-20〉 여성이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110
〈표 3-21〉 미래 전라북도의 당면 과제	111
〈표 3-22〉 미래 산업 분야의 여성 참여 증진 방안	111
〈표 3-23〉 이상적인 노후 돌봄 환경	112
〈표 3-24〉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114
〈표 3-25〉 여성이 조직 내에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115
〈표 3-26〉 여성의 정치적 의사결정권 강화를 위한 과제	116
〈표 3-27〉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117
〈표 3-28〉 10년 후 희망하는 전북의 미래상	118
〈표 3-29〉 미래 산업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119
〈표 3-30〉 이상적인 노후 돌봄 환경	120
〈표 3-31〉 전문가 FGI 참가자	126
〈표 3-32〉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여성대표성 영역 전문가 FGI 주요 내용 ·	127
〈표 3-33〉 일생활균형 및 돌봄 영역 전문가 FGI 주요 내용	128
〈표 3-34〉 사회적 약자의 권익 및 안전 영역 전문가 FGI 주요 내용	129
〈표 3-35〉 성평등 경제 기반과 여성 일자리 영역 전문가 FGI 주요 내용	132
〈표 3-36〉 성평등 문화와 청년여성 영역 전문가 FGI 주요 내용	134

〈표 4-1〉 3대 목표별 추진전략	147
〈표 4-2〉 목표 1.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 전략별 추진과제	152
〈표 4-3〉 목표 2. 인권 존중의 안심 공동체 - 전략별 추진과제	153
〈표 4-4〉 목표 3.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 전략별 추진과제	154
〈표 4-5〉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156
〈표 4-6〉 인권 존중의 안심 공동체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157
〈표 4-7〉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158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10
〈그림 2-1〉 지자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56
〈그림 2-2〉 전라북도 시군별 지자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56
〈그림 2-3〉 유병률	59
〈그림 2-4〉 10만 명당 자살률	60
〈그림 2-5〉 유형별 범죄 발생건수	60
〈그림 2-6〉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	61
〈그림 2-7〉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62
〈그림 2-8〉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	62
〈그림 2-9〉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62
〈그림 2-10〉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동네 각종 행사와 모임에 자주 참여)	63
〈그림 2-11〉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야간 혼자 있을 때)	63
〈그림 2-12〉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나 자신)	64
〈그림 2-13〉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64
〈그림 2-14〉 국가성평등지수 변화 추이	70
〈그림 2-15〉 분야별 성평등수준	71
〈그림 2-16〉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 수	77
〈그림 2-17〉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 상용일자리 연계	77
〈그림 2-18〉 전라북도 공공형 어린이집	78
〈그림 2-19〉 전라북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78
〈그림 2-20〉 전라북도 위원회 여성참여율(도본청)	79
〈그림 2-21〉 전라북도 여성공무원 비율(도본청)	79
〈그림 2-22〉 세부분야별 전라북도 성평등 순위	82
〈그림 2-23〉 지역별 성평등 지수	83
〈그림 3-1〉 전북 정주 여건	93

〈그림 3-2〉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 정도	101
〈그림 3-3〉 이상적인 지역사회 조건의 중요도	107
〈그림 4-1〉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 2030	146
〈그림 4-2〉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 2030 3대 정책목표	146
〈그림 4-3〉 비전 체계도	147
〈그림 4-4〉 단계별 로드맵	155

1

장

연구의 개요

Jeonbuk Institute

-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연구 방법
 3. 연구 기대효과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전라북도는 여성 및 가족 정책 등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 및 정책과제 등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 부재하다. 이에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혁명에 따른 사회변화와 함께 전라북도 여성의 사회적 가치 및 인식 확대, 양성평등 실현 요구 등이 증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진과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 및 가족 분야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전반적 영역을 검토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여성 및 가족 정책의 미래 전망을 예측하고, 전라북도 여성 및 가족 정책의 수요 등을 발굴하여 정책영역을 확장하고 그에 적합한 세부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전라북도 여성 및 가족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지방분권시대의 여성·가족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전라북도 도정의 경쟁력 있는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미래의 트렌드 및 정부의 정책방향, 전라북도 여성들의 정책수요 욕구 등을 충족시키면서, 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공동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여건을 성숙시켜 다음세대와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전라북도 차원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담은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지역(8,052.69㎢)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실시하며, 시간적 범위는 중기(5년, 정책과제) 및 장기(10년; 정책목표)로 구분하여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양성평등기본계획 시행계획 상의 여성 및 가족 등과 관련된 계획과 일관성 및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전라북도 여성 및 가족발전계획의 비전과 구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기본계획 상의 한계를 넘어 보다 포괄적인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전라북도 여성·가족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미래정책방향 설계 및 종합적인 성격의 과제로 계획 수립이 목적이거나 정책방향 진단, 계획수립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등이 도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1차와 2차년도 과제로 구분하여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은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보장, 일·생활 균형기반 조성 분야, 사회적 약자 및 여성인권·안전과 건강 분야에서의 전북 여성가족정책현황, 양성평등시행계획의 검토를 통해 확장, 변화된 정책영역과 추진전략, 핵심과제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추진하게 될 연구과제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차년도 과제 :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

- ① 전라북도의 여성가족정책현황, 양성평등시행계획 검토, 진단 및 방향설정 → 1차년도 연구영역 설정
- ② ①을 토대로 정책방향 진단, 계획수립을 위한 추진전략, 핵심과제 제시

- 2차년도 과제 :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I)

- ① 1단계에서 형성한 각 영역별 핵심과제에 따른 세부 정책과제/사업의 제안과 추진체계 구성, 세부 사업, 세부사업의 성인지 예산서 등 제안
- ② 2차년도 작업을 토대로 2차보고서 작성

나.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전라북도 여성·가족 정책현황과 진단, 전라북도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여성·가족 2030 미래비전 및 전략 수립의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여성·가족 정책현황과 진단을 위해 여성 및 가족에 대한 미래 트렌드와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전라북도 여성가족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전라북도 여성, 가족 등의 일반적 여건 및 현황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여성 및 가족 관련 인구구조, 경제활동, 산업구조의 여성참여정도, 취업구조, 양성평등지표 등 다양한 자원 및 정책여건,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안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여성·가족 정책관련 미래트렌드 및 타시도·전라북도의 정책방향 분석하였다. 최근 지방소멸, 디지털 혁명과 지방분권 등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가족 이슈의 변동과 전망을 다른 지역 정책방향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전라북도 여성·가족분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경제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양성평등 정책의 주요 방향성을 예측하고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 및 가족 관련 계획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20년도 시행계획」의 핵심목표, 목표별 세부과제와 사업을 성주류화시각에서 검토하고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주요 목표 “①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②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③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④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⑤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증진, ⑥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도정의 성주류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인 1차년도는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주요 목표 “①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②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③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④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⑤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증진, ⑥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도정의 성주류화 관점에서 검토하며 1차년도 연구영역은 여성 및 가족 관련하여 각 영역별 비전, 주요 전략, 전략에 따른 핵심과제 제시하고자 했다.

〈표 1-1〉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주요목표와 세부 영역 및 과제

정책목표	구분	정책영역	세부과제/사업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1a	결혼 및 가족	양성평등 결혼문화, 남녀가사, 육아분담문화 확산
	1b	성평등 의식제고와 교육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성평등 언어 사용 지원
			성평등 담론 활성화와 양성평등정책 홍보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보장	2a	농어업여성인 역량강화	농어업분야 여성후계자 육성
			농어촌 새일센터 운영
	2b	경력단절여성역량강화와 고용확대	경력단절여성 예방 및 취업지원
			새일센터 기능 강화
	2c	여성의 직장 처우 개선	직장 성희롱 예방강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활성화	3a	정치·사회적 역량강화와 참여 확대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 및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전략적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운영 및 여성관리자 DB 구축
일·생활균형 사회기반 조성	4a	아이돌봄 및 보육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4b	사회적 약자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자립 지원 강화
			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4c	위라벨 환경 조성	아버지를 위한 상담·교육지원 강화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의 확대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5a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공공기관 및 일반국민 대상 성희롱 및 폭력예방 교육 확대
			여성 폭력 피해자의 자립 등 통합서비스 지원 강화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
	5b	사회적 약자 건강 지원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확대 및 분만 인프라 구축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6a	양성평등 환경 조성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성별영향평가 실적 수준 제고 및 공무원대상 성인지 교육 내실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다음으로 전라북도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의 연구 내용은 도민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 FGI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여성·가족 정책 현황과 요구를 분석하고자 했으며, 조사 내용은 전라북도의 여성·가족 정책 현황과 요구, 전북의 미래상, 공유가치, 원하는 SOC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FGI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성주류화 시각에서 주요한 영역들을 선정하여, 학계·전문가·유관기관 담당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이다. 각 영역별 전북의 여성·가족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미래비전 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과 비전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여성·가족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은 여성가족 관련 정책전문가, 관련 도 의회의원,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세미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라북도 여성·가족 2030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정책목표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전략별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헌 및 자료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FGI,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의 방법을 활용했다.

가. 문헌 및 자료 분석

전라북도 여성가족 현황 및 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여성 및 가족 관련 인구, 경제, 산업 등 다양한 자료와 사회조사 결과, 양성평등지표 등의 자료를 분석했다. 또한 여성가족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미래사회 연구 및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각 영역에서 여성·가족의 변화 트렌드 분석했다. 다른 지역의 여성가족 비전 및 전략 수립 관련 문헌 검토했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역의 양성평등종합계획을 분석, 장기적 관점과 성주류화 확산 관점에서 개발되어야 할 분야와 정책과제를 검토했다.

나. 도민 대상 설문조사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의 수립을 위해 지역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전라북도민이 바라는 여성가족의 미래상과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라북도 거주자 601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내용은 여성일자리, 일·생활균형, 자녀 돌봄, 여성폭력, 안전, 건강, 노후 등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인식 등 종합 실태 파악하는 문항과 전라북도의 미래상과 주요 가치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 전문가FGI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성주류화 시각에서 주요한 영역들을 선정하여, 학계·전문가·유관기관 담당자 등 20~30명을 대상으로 전북 여성·가족 정책 현황과 미래비전 및 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FGI는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여성대표성, 일·생활균형 및 돌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및 안전, 성평등 경제 기반과 여성 일자리, 2030 청년여성의 5개 영역별로 5~6명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2~3시간 정도로 진행했다.

라. 전문가 자문 및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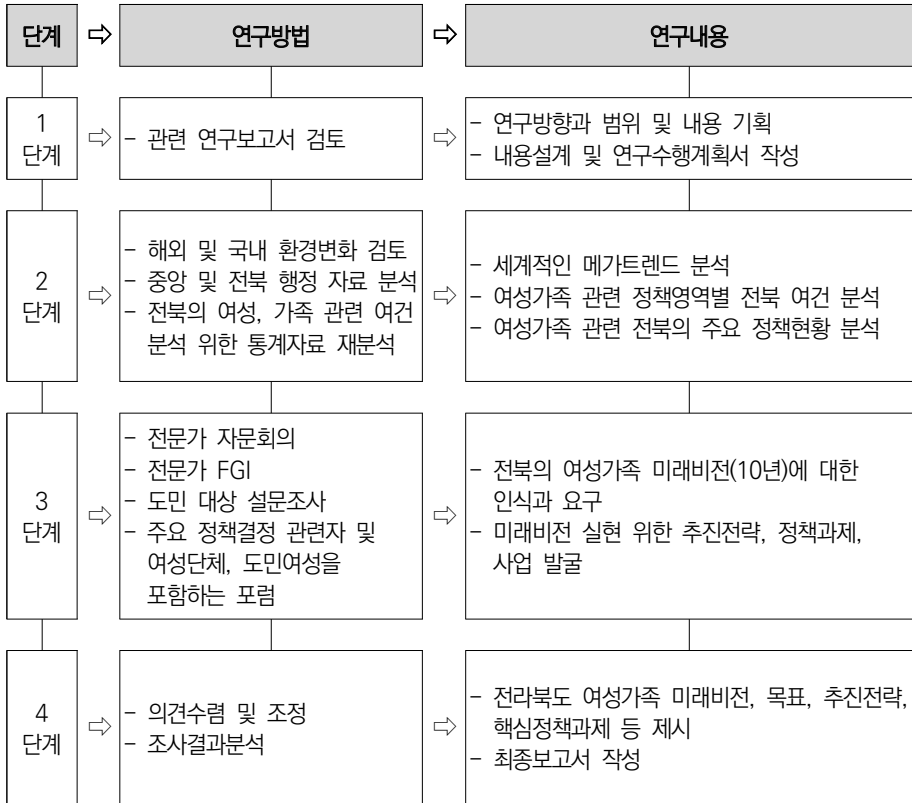
전문가 자문은 여성·가족 관련 정책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과 도민 의견조사를 위한 질문지 구성, 조사 방법과 포럼 운영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포럼은 전북 여성·가족 미래비전 수립 전략의 방향 설정을 위한 것으로 여성·가족 미래비전 수립의 진행 방향 구성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전북 여성·가족 정책현황과 정책 방향성을 도출했다. 여성 도의원, 여성가족미래비전 연구 자문위원, 전북의 주요 여성단체 대표 및 실무자, 도의 담당 공무원, 기타 여성가족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 도민들이 참여하여 전북차원의 중장기적인 여성 및 가족정책의 방향성과 정책목표를 놓고 토론하였다.

전반적으로 여성고용과 임금, 일가족양립, 여성폭력과 안전, 성평등의식과 문화 등 분야별 학계 전문가, 여성단체활동가, 여성계 주요 대표들, 전라북도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북여성가족정책을 진단하고 양성평등시행계획을 준거로 향후 발굴 요청되는 정책 영역 및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하여 전북여성과 가족의 미래상, 비전방향, 공유가치, 전라북도의 미래상 등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정책목표와 정책영역, 추진방안, 세부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마. 연구추진체계

이상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4단계를 통해 추진되었다.
연구추진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3. 연구 기대효과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하여 전라북도 미래세대가 주체가 되어 끌고나갈 미래의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지방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미래인재 육성과 역량 강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와 인권 감수성 증진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합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저출산 및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라는 전라북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증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취업과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여성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여성역량강화와 인재 발굴을 통한 여성인력 고급화와 여성인력 사회경제 참여의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라북도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전북지역의 새로운 여성·가족문화 창출을 통해 일·생활 양립으로 일상이 즐거운 지역사회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2

장

전라북도 여성가족 및 정책현황과 진단

Jeonbuk Institute

-
1. 여성 및 가족 미래 트렌드와 환경변화
 2. 전라북도 여성·가족 현황 분석 및 진단
 3. 전라북도 여성·가족 정책 분석

제2장 전라북도 여성가족 및 정책현황과 진단

1. 여성 및 가족 미래 트렌드와 환경변화

가. 국제적 환경변화와 미래 메가트렌드¹⁾

전라북도 여성가족 및 정책 수립 방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의 거시환경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미래예측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의 거시변화를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래예측에
많이 사용하는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ological), 경제적(Eco nomic),
생태적(Ecological), 정치적/법적(Political/Legal) 차원들을(국제미래학회,
2014) 고려하면서, 전북지역에서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의 거시환경변화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많은 보
고서에서 미래의 거시환경변화는 크게 8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와 지역화가 병존하는 세계에 살게 된다. 글로벌 경제집중이
더 커지고 세계경제가 다극화 되면서 미국과 OECD국가가 차지하는 세계
GDP 비중이 57%에서 39%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박영숙·제롬 글렌,
2016). 또한 2030년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연구개발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가 되면서 경제권력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이
동할 것으로 보인다(박영숙·제롬 글렌, 2016). 그에 따라 미국의 국제경찰 역
할이 소멸되고 다국적 리더십으로 권력이 이양될 것이며(박영숙·제롬 글렌·테
드 고든·엘리자베스 플로레스큐, 2013), 세계화가 심화되는 동시에 지역화가
강화됨으로써 세계화와 지역적 자부심의 대립적 힘이 병존할 것으로 예측된
다. 정부는 국가를 관리함으로써 불평등과 환경파괴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중요할 것이다.

1) 이 부분의 내용은 세계미래보고서 2050(박영숙·제롬 글렌, 2016)과 유엔미래보고서 2040(박영숙·제롬 글렌·엘리자베스 플로레스큐, 2013), 세계 미래보고서 2019(박영숙·제롬 글렌, 2018), (2020년 위기와 기회의 미래) 유엔미래보고서 2(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 2009)에서 가져온 것임.

둘째, 인구증가와 함께 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1804년에 10억명이었던 세계 인구는 2020년 현재 약 78억명이고, 2050년이면 83억명~109억명, 2100년에는 96억명~123억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박영숙·제롬 글렌, 2016). 또한 인간의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1950년 신생아 기대 수명은 46세였지만 2010년에는 67세, 2015년에는 71.5세가 되었고, 2017년 9억 6,200명이었던 60세 이상인구가 2050년에는 22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박영숙·제롬 글렌, 2018). 역사적으로 인구성장은 국가마다 달라서 매우 다양한 인구연령구조를 낳았고, 노령화 효과는 이런 연령구조가 미래로 나아가면서 나타나는 측면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의 불평등한 발전과 집행, 가족계획의 변화와 생식행동의 다양성, 전쟁과 질병, 가뭄으로 인한 대대적인 파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불균형하게 노령인구가 많아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와 은퇴자에 비해 어린이와 청년이 과도하게 많아졌다. 이로 인하여 노령인구가 많은 국가들은 노령인구를 부양하는데 필요한 노동력과 생산성에서 한계에 부딪칠 것이고, 어린이나 청년이 과도한 국가들에서는 고용과 더 나은 삶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게 되면서, 청년층은 좌절과 분노, 불안 등을 겪으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미래에는 불가피하게 저임금 지역, 즉 청년의 취업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고임금의 노령화 사회로 이주가 이뤄질 것이며 국경을 넘는 인구이동은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전망이다(박영숙·제롬 글렌, 2018). 고령화된 사회는 여성의 인구 비율이 더 높고, 선진국의 고령화는 노동가능 인구감소로 노동시장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사회보장 재원, 공공의료 시스템과 세금부분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박영숙·제롬 글렌, 2016). 반면에 미래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은퇴 이후에도 생산적인 일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원격근무, 재택근무, 파트타임근무, 교대 근무 등의 직무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자녀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것이다(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엘리자베스 플로레스큐, 2012).

셋째, 기술의 변화 측면에서 보면 기술은 현대 세계 변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일상의 모든 기기가 인터넷과 연계되어 상호 교신하고 정보를 저장하면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 수 있게 되어 산업은 물론 일상생활도 큰 변화가 예측된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시티는 교통과 주차정보, 안전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자동화된 범죄 감시시스템이 운영되며, 모바일 헬스기기를 이용한 건강진단과 건강관리, 원격 의사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홈, 교통상황을 스스로 감지하여 자율 주행하는 무인자동차 등이 상용화되어 일상의 풍경이 변화될 것이다. 또 프린터로 물체를 뽑아내는 기술인 3D 프린팅 기술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상품이 저렴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 할 것이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맞춤형 스탠드, 개인화된 치과제품, 항공기와 자동차 부품 및 센서 등을 개인이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산업을 넘어 도시공간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야기하며 여성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여성들의 주요 활동이 돌봄영역에서 생산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넷째, 산업과 일자리 변화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게 되면서 일자리는 소멸할 것이다. 일자리가 해외로 아웃소싱되면서 내수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고민했던 선진국들의 경우 다시 일자리를 자국으로 환원할 것이다. 이러한 인소싱이 활성화하면서 일자리는 일시적으로 되살아날 것이나 다만 이전과 같은 형태의 고용이라기보다는 일거리를 프로젝트 형태로 전문가인 개인에게 주는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고용이 될 전망이다(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엘리자베스 플로레스큐, 2013). 또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는 로봇과 3D 프린터의 연결로 인해 누구나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스마트 공장과 사물인터넷의 결합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돌발사고를 최소화한다. 사람들은 자동화 스마트 제조로 일자리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지만 기술융합과 대중화된 도구는 누구에게나 발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엘리자베스 플로레스큐, 2013). 새로운 제품 생산기회가 급증하고 신속하게 주문형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영업자와 발명가들이 얻는 경제적 기회가 전례 없이 증가하면서 개인은 자신이 잘하는 일을 시간당, 혹은 프로젝트당 맡게 되는 1인 기업, 1인 창업의 시대가 될 것이다(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엘리자베스 플로레스큐, 2013). 이렇듯 개방적이고 협력적이며 창의적·자기주도적 개입이 요구되는 시대에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자리 영

역에서도 여성들이 더 뛰어난 가능성을 보일 가능성이 생겨난다.

다섯째,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며, 이러한 문제의 해소 방안에 대한 측면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개발도상국 102개국을 대상으로 산출한 다면빈곤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건강, 교육, 생활수준 복합지수)에 의하면 빈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 15억에 이른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을 퇴치하자는 유엔 지속 가능 개발목표 달성에 합의했다. 부의 집중이 심화되어 수백억 달러를 가진 단 여덟 명의 부가 인류의 가난한 절반에 해당하는 36억 명의 사람들이 가진 부에 필적하고,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이어지면서 노동에 대한 투자수익률보다는 자본과 기술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대체로 더 높아지게 되었다(박영숙·제롬 글렌, 2018). 미래에는 기술이 인간노동의 많은 부분을 대체함에 따라, 경제와 노동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지 않는 한 구조적인 장기적 실업은 피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해결은 전쟁, 혁명, 부채감면, 법률제도의 개혁, 조세제도 개혁, 토지의 재분배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진화된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차세대 기술은 교육과 교통, 의료케어의 비용을 낮추고 로봇기술 등에 세금을 매기면 새로운 세원이 창출되어, 2030년이 되면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박영숙·제롬 글렌, 2018). 따라서 세계적 차원에서 평등한 경제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바람직한 경제개혁은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이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박영숙·제롬 글렌, 2016). 이를 위하여 OECD는 부자들과 다국적 기업이 취하는 부의 정도와 수준에 알맞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차세대 기술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자금조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조세 피난처를 불법화함으로써 연간 10조~15조 달러(세금의 약 30%)를 사회와 경제프로그램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박영숙·제롬 글렌, 2016). 또한 자격을 갖춘 노동자들이 기술적 요건에 부합하는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민이나 이주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글로벌 인적 자원 소싱 해결책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박영숙·제롬 글렌, 2018).

여섯째, 환경과 기후 변화 측면이다. 210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2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온실가스의 총량을 매년 약 440억 톤을 감축해야 한다.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연간 경제손실은 40년 전의 5,257억 달러에 대비해 대략 3배 높아진 1조 5,800억 달러로 추산된다. 대규모 재보험회사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0년 이내로 연간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엘리자베스 플로레스큐, 2013). 과학자들은 우주에 햇빛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바다에 철가루를 뿌려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지하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며,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를 재사용하는 방법까지 연구한다. 그 밖에도 탄소배출, 무역, 해외여행, 도심의 혼잡, 생태발자국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을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세금은 또 인기영화, 텔레비전, 음악, 게임, 콘테스트를 통한 대규모 공공교육 활동에 쓰여 기후변화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엘리자베스 플로레스큐, 2013). 기후변화로 물의 공급량이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2050년에는 물 부족을 겪는 인구가 수십 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관행 마련, 물 관리 정책변경, 선진적 물 관리 기술의 공유가 필요하고 물 공유를 위해 다른 지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엘리자베스 플로레스큐, 2012). 미래에 깨끗한 물의 확보는 각종 개발 및 기후변화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박영숙·제롬 글렌, 2016). 농업과 식량생산에서 변화가 없는 한 2030년까지 태어날 추가적인 22억 명을 살리는 일은 물론 현재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10억 명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일은 환경에 매우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엘리자베스 플로레스큐, 2012). 농업폐수는 강을 오염시키고 생물이 살지 않는 데드 존을 전 세계에 만들어 내고 있다. 공장형 농업으로 음식을 통해 전염되는 질병 또한 늘고 있다(박영숙·제롬 글렌, 2019).

일곱째, 건강과 질병의 측면에서 인류의 건강상태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전염병 질병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의 수명이 길어졌지만,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 인력이 줄어들면서 바이오칩 센서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자가진단이나 원격진료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박영숙·제롬 글렌, 2016).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비용이 낮아지고 게놈에 대한 연구가 향상되면서 대중은 맞춤형 의료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전염병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에볼라 바이러스는 FDA 승인을 받은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어 건강한 면역체계와 빠른 치료가 없는 죽음을 초래한다(박영숙·제롬 글렌, 2016). 다양한 형태의 인플루엔자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돌연변이를 비롯한 몇 건의 조류독감, 동유럽과 중동 HIV 양성환자의 다제내성결핵,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치료제 알테미니신에 내성을 가진 말라리아의 확산 등 이러한 전염성 질환을 통제하기 위해 치료시설, 실험실, 감시시스템을 비롯한 공공보건 시스템이 아주 중요하다(박영숙·제롬 글렌, 2016). 유행성 질환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탐지, 정확한 보고, 신속한 격리, 투명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며 이와 함께 의료기술 사용의 최적화와 깨끗한 식수, 위생시설, 손 씻기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박영숙·제롬 글렌, 2016). 기후변화를 비롯한 세계적 환경 변화가 위협의 규모와 패턴을 바꾸면서 모니터링과 감시에 대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HO의 E-의료시스템, 스마트폰 기술, 국제적 의료규정, 예방접종 프로그램, 유행성 질환 발생 시 경보, 대응 네트워크는 난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또 다른 요소이다. 세계 도처에는 기본적인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들이 여전히 많다(박영숙·제롬 글렌, 2016). 계속해서 발생하는 질병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격차 없는 1차 의료기반이 확립되고 세계적 질병 탐지, 감시, 치료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한다. 나아가 새로운 질병에 대한 백신과 약품이 적절한 시기에 개발될 때 질병이 극복될 것이다(박영숙·제롬 글렌, 2016). 질병 등 재난의 영향력은 불평등하여 남성보다는 여성,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취약성이 더 높고 피해가 크다. 그러나 회복과정은 기존의 질서를 변화시킬 기회를 제공하며, 기존질서 붕괴와 복구를 통한 자원의 유입이 해당 사회 여성과 빈자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한 변화의 기회로 사용될 수 있다(장은하, 2016).

마지막으로 여성의 지위 상승에 대한 변화이다. OECD 국가에서 남성의 수입은 여성의 수입보다 평균적으로 16% 많고, 급여 지표의 최상위층은 남성이 21% 더 많이 차지한다. OECD 국가에서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은 약 30% 정도이고, 자영업을 하는 여성은 수입이 남성보다 30~40% 적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기업이사회의 구성원 중 단 9%를 차지하고 있다(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엘리자베스 플로레스큐, 2013). 사회기관 성별지수가 높은 국가는 여성 고용률이 남성의 50%에 근접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국가는 20% 정도에 달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가족체계 지속과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은 경제적 활동에 기존의 가사까지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보육원 등의 복지는 여성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엘리자베스 플로레스큐, 2013). 빈민구호단체인 옥스팜은 15개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의 유급직 고용률이 남성과 동일하다면 202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4%, 2030년에는 20%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남녀 고용격차를 줄임으로써 미국 GDP의 9%, 유로존 GDP의 13%, 일본 GDP의 16%를 상승시킬 수 있다(박영숙·제롬 글렌, 2016). 건강상의 성격차는 줄어드는 반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재생산 권리인정과 효과적인 가족계획 제공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여성이 지속적으로 2등 시민으로 취급되며 여성할례 같은 비인도적인 관행은 해마다 수백만 명의 소녀들에게 이루어 말할 수 없는 폭력을 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추가적인 잠재적 희생자는 8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박영숙·제롬 글렌, 2016).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고가 될 되는 범죄로서 많은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처벌하는 법이 있는 국가가 119개국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물리적, 성적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의 거의 35%에 이른다. 6억 명이 넘는 여성들이 살고 있는 15개 국가에서는 아직 가정폭력이 범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박영숙·제롬 글렌, 2016).

나. 미래 트렌드에 따른 전북지역의 여건 분석

앞에서 논의한 세계의 메가트렌드에 비추어볼 때 전라북도를 둘러싼 환경적 여건과 이슈는 아래와 같이 예상된다.

첫째, 인구 및 가구형태 변화에 대한 전북의 여건은 다음과 같다. 인구구조 변화의 측면을 보면 전라북도는 2012년 이후 인구유입보다 유출이 더 커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다. 인구유출은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높은 마이너스 순이동을 보이고 있으며, 강원, 전남 등 다른 시도 지역에 비해 전북은 인구유출이 매우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계속 높아지고 있어(고령인구 비율의 전국 평균은 2020년 15.7%, 2030년 25.0%, 2040년 33.9%인데 비해 전라북도는 2020년 20.6%, 2030년 30.0%, 2040년 39.4%로 예상됨), 노인인구 부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2019년 간 전라북도 출산율은 전국 평균(2000년 대비 52.7% 감소)보다는 높았으나 감소율이 전국보다 빨라 2000년 대비 64.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전라북도의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는 2017년 기준 10.9천 명으로 2007년 대비 약 6.4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전국 평균 8.8%보다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경향성이 계속 확산되는 추세를 보인다. 가구규모를 보면 전북의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구성 비율은 전국의 수준보다 높으며, 3인 가구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고, 4인 가구 이상은 감소폭이 높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30년 전북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에서 주된 가구 유형은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측된다. 1인 가구가 주요 가구형태가 됨으로써 가족의 구성과 가족의 개념 변화는 물론 주택유형을 비롯해 소비시장의 광범한 변화가 예상된다.

둘째, 기술변화에 따른 사회변화 측면에서 보면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한·황해경제권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서해안 지역은 한·황해경제권의 중심지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종합개발이 완성되고, 새만금

지역은 첨단산업기능을 주축으로 하면서 교육, R&D, 주거, 상업, 관광, 레저 등 여러 기능이 조화를 이룬 자족적 복합도시로 조성될 것이다(전라북도, 2013). 새만금은 ‘스마트’개념을 포함한 디지털 도시로서, 녹색환경·상품·기술이 합쳐져 환황해경제권 비즈니스, 업무, 유통기능, 등을 구비한 스마트 수변 도시가 될 것이다. 전라북도의 도종합계획(2012~2020)에 따르면 새만금은 내륙의 연담도시권과 연계하여 전주·새만금 도시권으로서 미래사회 발전의 견인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스마트 시티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업무를 실행하는 모바일 오피스,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원격근무나 재택근무 등 스마트워크가 일상화되고, 사물인터넷이나 로봇의 확산으로 육체노동은 자동화되고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따라서 동등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여성의 일자리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구비한 홈케어 로봇이 상용화되어 가사와 돌봄을 수행하는 여성역할의 상당부분을 대체하면서 여성의 역할이 돌봄 중심에서 생산중심으로 이동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원격 진료, 촘촘한 돌봄과 안전망, 재난구호 시스템이 갖추어져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셋째, 경제와 일자리변화 측면에서 보면 전라북도는 정부가 구상하는 환황해 경제벨트의 일부에 속한다. 환황해 벨트의 핵심 내용은 제조업 중심 경제특구 산업단지 개발로서 북쪽지역의 개성, 평양 등과 남한의 수도권, 새만금지역과 중국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발전전략이다. 제조업 혁신은 ICT 기술을 통해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공장의 보급 확산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 공장은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공장을 지칭한다. 지능화, 유연화, 자율성, 연결, 최적화 등이 키워드가 되는 스마트공장의 확산은 지역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및 여성친화 제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생활균형이 가능한 환경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넷째, 빈부격차와 보편적 복지욕구의 확대 측면에서 보면 전북은 높은 빈곤율로 인해 소득상위 20%가 전라북도 소득의 약 38%를 점유하고 있어 소득불

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8년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고령인구 구성비가 3번째로 높은 실정이며, 향후 인구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정도는 전국 평균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인구의 빈곤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고령화율 또한 전북의 빈곤율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이며, 빈곤인구의 증가는 복지수요계층의 확장을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보편적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다섯째, 기후 및 환경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 등 지구의 생태적 용량이 임계점에 이르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다. 대규모 재보험회사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0년 이내에 연간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없이는 수십억 인류가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엘리자베스 플로레스큐, 2013). 전북연구원의 한 연구는 기후변화 등 지구생태용량 고갈에 따라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도시화의 진행으로 점점 도시에서 사는 인구가 늘어 도시 인구는 2030년까지 8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것은 시골의 거주민은 감소하면서 농업에 필요한 여분의 땅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 2009). 이러한 여건에서 전라북도의 농촌과 자연은 자연친화적 삶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지대, 공익적 가치 추구의 장소로서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한 토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팜을 이용한 농업생산방식의 변화와 생산량 증가로 자연과 보존과 함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문명의 모델링을 구축할 수 있다. 반면에 전통적 농업은 기후변화에 약하므로 관개수로 개선이나 스마트 팜을 이용한 농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재해 및 질병 측면에서 보면 미래는 자연적 재해나 인위적 재해, 질병에서 사람들의 취약성이 증대하므로 사람다운 삶의 최소한을 확보하도록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필요하다. 재난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취약한데 이는 여

성들의 생물학적 특성뿐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 역할, 사회문화적 요소 등이 여성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재난 직후 여성들은 강간, 성폭력 위협에의 노출도가 높아진다. 또한 피해복구의 경우 남성중심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이 전개되므로 여성이 배제되기 쉬우며,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구호물자 배분이 이루어지면서 가장이 생활비나 구호물자를 분배하지 않을 경우 빈곤 상태에 놓인다. 질병이나 재난의 시기 생리대, 피임약 등의 물자부족이 여성 취약성을 더욱 증대시키며 높아진 돌봄 의무 역시 여성들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질병이나 재난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인 사회안전망과 재난극복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성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계속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가족문화 분야는 2011년도 이래로 줄곧 성평등지수가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의사결정분야 역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여성의 지위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분야 역시 중하위권에 속하므로 질병의 대처나 건강을 위한 보건분야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2-1〉 미래 트렌드로 본 전북의 여건과 변화

	미래 트렌드	전북의 여건
세계화	Globalize+ Localize	다문화 가족과 이주민 노동의 지속적 유입
인구증가·고령화	인구증가 및 고령화 국경을 넘는 인구이동	인구감소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기술변화와 사회변화	사물인터넷 발전에 따른 도시공간과 일상생활 변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스마트 빌리지 등으로 삶의 질 향상 여성역할의 이동: 돌봄에서 생산으로
산업변화와 일자리변화	다양한 직무순환시스템 고용형태의 다양화 개방적, 협력적, 창의적, 자기주도적 일자리 일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환황해 비즈니스권 청년 및 여성일자리 창출 창의적, 협력적, 개방적인 여성일자리 창출 일과 생활관계의 조정
빈부격차	부의 집중심화 보편적 기본소득제도	고령인구의 빈곤문제
기후변화	기후변화 물 부족, 식량부족 신재생에너지개발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문명으로 전환 태양·풍력에너지 일상화
재난 및 질병과 위생보건	재난대응 및 공공보건시스템 강화	여성친화적 재난질병 대응체계 마련 고령사회 빈곤취약계층 여성 및 사회적 약자 안전 강화

2. 전라북도 여성·가족 현황 분석 및 진단

가. 인구 및 가구현황

전북의 인구 및 가구현황을 전국 현황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 3월 기준 전국의 인구는 51,843,195명, 전라북도의 인구는 1,812,936명이며 그 중 남성 인구는 901,252명, 여성 인구는 911,684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다. 전라북도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3.5% 정도로 17개 시도 중 8번째로 인구수가 적다. 전라북도의 성비는 101.2로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많다. 17개 시도 중 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남성 100명당 여성은 94.6명에 불과하며 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성비가 105.3인 서울특별시이다.

〈표 2-2〉 시도별 인구 현황 (2020.03)

(단위 : 명, %)

시도	총 인구	남성 인구	여성 인구	성비
전국	51,843,195	25,858,743	25,984,452	100.5
서울특별시	9,733,655	4,742,217	4,991,438	105.3
부산광역시	3,409,932	1,672,252	1,737,680	103.9
대구광역시	2,433,568	1,202,273	1,231,295	102.4
인천광역시	2,952,689	1,479,839	1,472,850	99.5
광주광역시	1,455,705	720,460	735,245	102.1
대전광역시	1,471,858	735,179	736,679	100.2
울산광역시	1,144,563	588,127	556,436	94.6
세종특별자치시	344,792	171,951	172,841	100.5
경기도	13,288,975	6,684,759	6,604,216	98.8
강원도	1,538,577	773,983	764,594	98.8
충청북도	1,597,639	809,369	788,270	97.4
충청남도	2,119,749	1,080,705	1,039,044	96.1
전라북도	1,812,936	901,252	911,684	101.2
전라남도	1,859,290	933,896	925,394	99.1
경상북도	2,653,418	1,336,289	1,317,129	98.6
경상남도	3,355,341	1,689,137	1,666,204	98.6
제주특별자치도	670,508	337,055	333,453	98.9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20년도 3월

전국 인구는 2000년 47,732,588명에서 2020년 3월 기준 51,843,195명으로 8.6% 증가하였으나 전라북도 인구는 2000년 1,999,255명에서 2020년 3월 1,812,936명으로 9.3% 감소하였다. 전국의 성별 인구는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율이 더 높는데 남성은 2000년 23,962,088명에서 2020년 3월 기준 25,858,743명으로 약 7.9%가 증가하였으며 여성 역시 2000년 23,770,470명에서 2020년 3월 25,984,452명으로 9.3%가 증가하였다. 반면 전라북도의 경우 남성은 2000년 993,967명에서 2020년 3월 901,252명으로, 여성은 2000년 1,005,288명에서 2020년 3월 911,684명으로 각각 9.3%씩 감소하였다. 전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라북도의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 감소세는 인구의 자연감소보다는 타 지역 등으로의 인구유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3〉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 인구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00	2005	2010	2015	2020.03	증감률
전국	47,732,558	48,782,274	50,515,666	51,529,338	51,843,195	8.6
남자	23,962,088	24,456,234	25,310,385	25,758,186	25,858,743	7.9
여자	23,770,470	24,326,040	25,205,281	25,771,152	25,984,452	9.3
전북	1,999,255	1,885,335	1,868,963	1,869,711	1,812,936	-9.3
남자	993,967	938,746	931,481	930,255	901,252	-9.3
여자	1,005,288	946,589	937,482	939,456	911,684	-9.3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전국과 전라북도 인구의 연령별 구성비를 비교해본 결과, 전라북도는 전국에 비해 20~30대 청장년층 구성비가 낮고, 60대 이상 노년층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경우 50~59세 구성비가 16.7%로 가장 높고, 40~49세 16.2%, 30~39세 13.5%, 20~29세 13.1% 순으로 구성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전라북도는 50~59세가 16.7%, 40~49세가 15.1%로 40~50대 중장년층 인구 구성비가 높은 것은 전국과 동일하였으나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60~69세, 13.5%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유소년층 비중은 전국과 전라북도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20~30대 청장년층은 전국이

26.6%, 전라북도가 22.4%로 전국이 4.2%p 높게 나타났으며 중장년층 역시 전국(32.9%)이 전라북도(31.8%)보다 1.1%p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비중은 전국이 23.1%, 전라북도가 28.5%로 전라북도 전체 인구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의 비중보다 5.4%p 높았다.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 비중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20~29세 청년의 비중은 여성보다 남성이, 80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비중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국의 경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성별 비중의 차이가 1%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20~29세 비중은 13.8%, 여성의 20~29세 비중은 12.4%로 약 1.4%p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라북도 역시 해당 연령층 남성의 비중은 12.7%, 여성의 비중은 10.7%로 약 2.0%p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70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높았고, 특히 80세 이상의 경우 남성 비중보다 여성 비중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0~79세 비중은 전국의 경우 남성 6.3%, 여성 7.7%로 여성이 남성보다 1.4%p 높았으며 전라북도는 남성 8.1%, 여성 10.2%로 여성이 남성보다 2.1%p 높았다. 80세 이상 연령대 비중은 전국의 경우 남성 2.5%, 여성 5.0%로 여성이 남성보다 2.5%p 높았으며 전라북도는 남성 3.6%, 여성 7.7%로 여성이 남성보다 4.1%p 높게 나타났다.

〈표 2-4〉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 연령별 인구 및 구성비 (2020.03)

(단위 : 명, %)

		남성		여성		총 인구 연령별 구성비
		N	%	N	%	
전국	전체	25,858,743	100.0	25,984,452	100.0	100.0
	0 ~ 9세	2,113,237	8.2	2,006,238	7.7	7.9
	10~19세	2,538,510	9.8	2,363,499	9.1	9.5
	20~29세	3,573,013	13.8	3,226,225	12.4	13.1
	30~39세	3,604,008	13.9	3,402,741	13.1	13.5
	40~49세	4,256,517	16.5	4,118,912	15.9	16.2
	50~59세	4,367,750	16.9	4,294,650	16.5	16.7
	60~69세	3,141,575	12.1	3,284,431	12.6	12.4
	70~79세	1,624,362	6.3	1,999,537	7.7	7.0
	80세 이상	639,771	2.5	1,288,219	5.0	3.7

		남성		여성		총 인구 연령별 구성비
		N	%	N	%	
전북	전체	901,252	100.0	911,684	100.0	100.0
	0 ~ 9세	68,995	7.7	65,589	7.2	7.4
	10~19세	93,186	10.3	86,470	9.5	9.9
	20~29세	114,357	12.7	97,865	10.7	11.7
	30~39세	100,439	11.1	94,444	10.4	10.7
	40~49세	141,379	15.7	132,146	14.5	15.1
	50~59세	156,052	17.3	146,471	16.1	16.7
	60~69세	121,274	13.5	124,798	13.7	13.6
	70~79세	72,676	8.1	93,266	10.2	9.2
	80세 이상	32,894	3.6	70,635	7.7	5.7

주 : 1)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

2)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통계는 주민등록 신고에 따른 것으로 실제 연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20년도 3월

전국과 전라북도의 가구 구성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과 전라북도 모두 세대구성별 가구에서 2세대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1인 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국의 가구 구성은 2세대 가구가 48.8%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27.2%, 1세대 가구 17.4%, 3세대 가구 5.4%, 비친족 가구 1.1%, 4세대 이상 가구 0.1%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세대구성별 가구 구성은 전국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 2세대 가구가 42.0%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31.7%, 1세대 가구 20.4%, 3세대 가구 4.4%, 비친족 가구 1.4%, 4세대 이상 가구 0.1%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대비 2018년의 총 가구수는 전국과 전라북도 모두 증가하였으며 전국은 39.6%, 전라북도는 21.8%가 증가하였다. 총 가구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1인 가구 및 2인 세대 이하의 가구가 증가하는 핵가족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2000년 대비 2018년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는 각각 13.8%p, 3.8%p 증가한 반면 2세대 가구는 14.3%p, 3세대 가구는 3.7%p, 4세대 이상 가구는 0.2%p 감소하였으며 비친족 가구는 0.6%p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라북도는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가 각각 14.3%p, 2.1%p 증가하였으며 2세대 가구는 12.2%p, 3세대 가구는 4.4%p, 4세대 이상 가구는 0.2%p 감소하였고 비친족 가구는 0.3%p 감소하였다.

〈표 2-5〉 전국 및 전라북도 세대구성별 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총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이상 가구	1인 가구	비친족 가구
전국	2000	14,311,807 (100.0)	2,033,763 (14.2)	8,696,082 (60.8)	1,176,337 (8.2)	21,961 (0.2)	2,224,433 (15.5)	159,231 (1.1)
	2005	15,887,128 (100.0)	2,574,717 (16.2)	8,807,326 (55.4)	1,092,562 (6.9)	15,902 (0.1)	3,170,675 (20.0)	225,946 (1.4)
	2010	17,339,422 (100.0)	3,027,394 (17.5)	8,892,224 (51.3)	1,062,607 (6.1)	12,769 (0.1)	4,142,165 (23.9)	202,263 (1.2)
	2015	19,111,030 (100.0)	3,324,418 (17.4)	9,328,293 (48.8)	1,029,196 (5.4)	11,262 (0.1)	5,203,440 (27.2)	214,421 (1.1)
	2018	19,979,188 (100.0)	3,600,264 (18.0)	9,288,450 (46.5)	893,501 (4.5)	8,012 (0.0)	5,848,594 (29.3)	340,367 (1.7)
전북	2000	601,965 (100.0)	110,318 (18.3)	326,249 (54.2)	53,177 (8.8)	1,184 (0.2)	104,780 (17.4)	6,257 (1.0)
	2005	619,958 (100.0)	128,000 (20.6)	303,695 (49.0)	44,029 (7.1)	836 (0.1)	136,754 (22.1)	6,644 (1.1)
	2010	659,946 (100.0)	142,318 (21.6)	296,116 (44.9)	39,902 (6.0)	555 (0.1)	175,026 (26.5)	6,029 (0.9)
	2015	717,311 (100.0)	142,173 (19.8)	314,324 (43.8)	38,684 (5.4)	540 (0.1)	213,750 (29.8)	7,840 (1.1)
	2018	732,980 (100.0)	149,507 (20.4)	307,884 (42.0)	32,268 (4.4)	337 (0.0)	232,587 (31.7)	10,397 (1.4)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한부모 가족 유형으로는 ‘모+미혼자녀’ 유형이 과반 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부+미혼자녀’, ‘모+미혼자녀+기타가구원’, ‘부+미혼자녀+기타가구원’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의 유형별 비중은 전국 평균과 전라북도가 매우 비슷한데, ‘모+미혼자녀’ 유형이 전국 62.6%, 전라북도 62.3%로 과반 이상 가장 많고 ‘부+미혼자녀’ 유형이 전국 18.4%, 전라북도 18.8%로 뒤를 이으며 ‘모+미혼자녀+기타가구원’ 전국 12.0%, 전라북도 11.8%, ‘부+미혼자녀+기타가구원’ 전국 7.0%, 전라북도 7.1%로 나타난다.

〈표 2-6〉 전국 및 전라북도 한부모 가구 현황 (2018)

(단위 : 가구, %)

	전국		전북	
	N	%	N	%
전체	1,539,362	100.0	52,186	100.0
부 + 미혼자녀	283,293	18.4	9,829	18.8
모 + 미혼자녀	962,894	62.6	32,499	62.3
부 + 미혼자녀 + 기타가구원	108,141	7.0	3,723	7.1
모 + 미혼자녀 + 기타가구원	185,034	12.0	6,135	11.8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8

2018년 기준 전국의 다문화 가구는 334,856가구이며, 전라북도의 다문화 가구는 12,103가구이다. 다문화 가구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원은 다문화 가구에서 출생한 내국인이다. 전국의 다문화 가구원은 1,008,520명으로 한 가구 당 평균 약 3명의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는 41,235명으로 한 가구 당 평균 약 3.4명의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다문화 가구원 중 내국인은 793,444명(78.7%), 외국인인 215,076명(21.3%)이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원은 다문화 가구에서 출생한 내국인(61.3%)임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내국인이 34,360명(83.3%), 외국인이 6,875명(16.7%)인데 다문화 가구에서 출생한 내국인이 70.7%로 가장 많고, 외국인인 결혼이민자가 14.3%로 뒤를 이으며 귀화한 내국인이 12.6%, 기타 외국인이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전국 및 전라북도 다문화 가구 현황 (2018)

(단위 : 가구, 명, %)

구 분	다문화 가구	다문화 가구원	내국인		외국인	
			출생	귀화	결혼이민자	기타
전국	334,856	1,008,520 (100.0)	617,785 (61.3)	175,659 (17.4)	165,919 (16.5)	49,157 (4.9)
전북	12,103	41,235 (100.0)	29,163 (70.7)	5,197 (12.6)	5,915 (14.3)	960 (2.3)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8

나. 전라북도 저출산·고령화 현황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전국보다 전라북도의 혼인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혼인건수는 2000년 332,090건에서 2019년 239,159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대비 2019년의 혼인건수 감소율은 28.0%이다. 조혼인율 역시 2000년에는 인구 1,000명 당 7.0건의 혼인이 이루어졌으나, 2010년에는 6.5건, 2019년에는 4.7건으로 2000년 대비 2.3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혼인율은 전국의 혼인율보다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었는데 2000년 11,362건의 혼인이 이루어졌으나 2019년에는 7,005건에 불과하여 2019년 전라북도의 혼인건수는 2000년 대비 38.3%가 감소한 수준이다. 조혼인율의 경우 2000년 5.7%에서 2019년 3.9%로 2000년 대비 1.8%이 감소하여 전국보다 감소 정도가 낮는데 그 이유는 전라북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8〉 전국 및 전라북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단위 : 명, %, %p)

		2000	2005	2010	2015	2019	증감률
전국	혼인건수	332,090	314,304	326,104	302,828	239,159	-28.0
	조혼인율	7.0	6.5	6.5	5.9	4.7	-2.3
전북	혼인건수	11,362	10,196	10,525	9,060	7,005	-38.3
	조혼인율	5.7	5.4	5.7	4.9	3.9	-1.8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전국과 전라북도의 성별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전라북도보다 전국의 초혼연령이 높은 편이나 전라북도 남성의 초혼연령은 2015년 이후 전국 남성의 초혼연령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다. 2000년 남성 29.28세, 여성 26.49세였던 전국의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남성 30.87세, 여성 27.72세, 2010년에는 남성 31.84세, 여성 28.91세, 2015년에는 남성 32.57세, 여성 29.96세였으며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남성 33.37세, 여성 30.59세로 2000년 대비 남성은 4.09세, 여성은 4.1세

증가하였다. 전라북도의 초혼연령은 2000년 남성 28.81세, 여성 25.72세로 전국에 비해서 초혼연령이 낮은 편이었으나 전국과 마찬가지로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에는 남성 30.76세, 여성 27.19세였고 2010년에는 남성 31.77세, 여성 28.48세, 2015년에는 남성 32.58세, 여성 29.40세였으며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남성의 초혼연령 33.67세, 여성의 초혼연령 30.34세로 2000년 대비 남성은 4.86세, 여성은 4.62세 증가하여 전국(남성 4.09세, 여성 4.1세)보다 증가수준이 높다. 이러한 초혼연령의 증가는 출산에 영향을 미쳐 저출산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2-9〉 전국 및 전라북도 초혼연령

(단위 : 세)

		2000	2005	2010	2015	2019
전국	남성	29.28	30.87	31.84	32.57	33.37
	여성	26.49	27.72	28.91	29.96	30.59
전북	남성	28.81	30.76	31.77	32.58	33.67
	여성	25.72	27.19	28.48	29.40	30.34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전국과 전라북도의 합계출산율과 출생건수, 조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의 감소폭보다 전라북도의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2018년 처음으로 1명대가 깨진 후 2019년 0.92명으로 2000년 대비 0.56명이 감소하였다. 전라북도 역시 2000년 1.60명에서 2019년 0.97명으로 2000년 대비 0.63명이 감소하였다. 전라북도의 합계출산율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왔으나 전국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향후 전국의 합계출산율보다 전라북도의 합계출산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출생건수는 2000년 640,089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그에 반절도 못 미치는 303,054건으로 2000년 대비 52.7%가 감소하였다. 전라북도의 출생건수는 2000년 25,173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8,978건에 불과하여 2000년 대비 64.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20여년의 시간 동안 출생건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전라북도의 출생건수 감소율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11.6%p나 더 높아 감소세가 심각하다. 조출생률 역시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2000년 조출생률은 전국 13.5%, 전라북도 12.6%로 인구 1천 명 중 전국은 13.5명, 전라북도는 12.6명이 신생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에는 전국 5.9%, 전북 4.8%로 각각 7.6%p, 7.7%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과 전라북도의 저출산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 전반의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2-10〉 전국 및 전라북도 합계출산율, 출생건수 및 조출생률

(단위 : 명, %, %p)

		2000	2005	2010	2015	2019	증감률
전국	합계출산율	1.48	1.09	1.23	1.24	0.92	-0.56
	출생건수	640,089	438,707	470,171	438,420	303,054	-52.7
	조출생률	13.5	9.0	9.4	8.6	5.9	-7.6
전북	합계출산율	1.60	1.18	1.37	1.35	0.97	-0.63
	출생건수	25,173	15,745	16,100	14,087	8,978	-64.3
	조출생률	12.6	8.3	8.7	7.6	4.9	-7.7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2019년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는 8,026,91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 구성비는 15.5%이며, 전라북도는 전국 평균보다 고령인구 구성비가 높아 고령화 진행률이 높은 지역이다. 전라북도의 고령인구는 2019년 기준 370,676명으로 총 인구 1,818,917명 중 20.4%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고령인구 구성비(20.4%)는 전국 고령인구 구성비(15.5%)보다 4.9%p 높으며 전라북도는 전라남도(22.6%), 경상북도(20.6%) 다음으로 고령인구 구성비가 높은 지역이다. 고령인구 구성비가 가장 낮은 세종특별자치시(9.4%)와 비교할 때는 두 배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가 높다.

〈표 2-11〉 시도별 고령인구 현황 (2019)

(단위 : 명, %, 위)

	총인구수	고령인구수	고령인구 구성비	순위
전국	51,849,861	8,026,915	15.5	
서울특별시	9,729,107	1,478,664	15.2	10
부산광역시	3,413,841	620,123	18.2	6
대구광역시	2,438,031	379,277	15.6	9
인천광역시	2,957,026	384,548	13.0	14
광주광역시	1,456,468	195,479	13.4	13
대전광역시	1,474,870	198,691	13.5	12
울산광역시	1,148,019	132,565	11.5	16
세종특별자치시	340,575	31,949	9.4	17
경기도	13,239,666	1,651,341	12.5	15
강원도	1,541,502	302,886	19.6	4
충청북도	1,600,007	273,425	17.1	7
충청남도	2,123,709	386,674	18.2	5
전라북도	1,818,917	370,676	20.4	3
전라남도	1,868,745	422,548	22.6	1
경상북도	2,665,836	549,415	20.6	2
경상남도	3,362,553	548,257	16.3	8
제주특별자치도	670,989	100,397	15.0	11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

2000년 대비 2019년의 노령화 지수는 3~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총부양비에서 유소년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노령화 지수는 2000년 33.7%에서 2019년 124.1%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전라북도의 노령화 지수 역시 2000년 51.5%에서 2019년 168.7%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노령화 지수(124.1%)보다 전라북도의 노령화 지수(168.7%)가 약 44.6%p 높아 전라북도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비생산가능인구 몇 명을 부양해야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총 부양비는 전국의 경우 2000년 38.7%, 2019년 38.8%로 차이가 없으나 전라북도는 2000년 43.4%에서 2019년 48.1%로 4.7%p가 증가하였

으며 2019년 기준 전국보다 총부양비가 9.3%p 높다. 총부양비에서 유소년 부양비는 점점 낮아지는 반면 노년 부양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의 2000년 총 부양비 38.7% 중 유소년 부양비는 28.9%, 노년 부양비는 9.7%로 나타났으나 2019년에는 총 부양비 38.8% 중 유소년 부양비 17.3%, 노년부양비 21.5%로 유소년 부양비는 10%p 이상 감소하였고, 노년 부양비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라북도 역시 2000년 총 부양비 43.4% 중 유소년 부양비는 28.6%, 노년 부양비는 14.8%였으나 2019년 총 부양비 48.1% 중 유소년 부양비는 17.9%, 노년 부양비는 30.2%로 나타난다.

〈표 2-12〉 전국 및 전라북도 노령화 지수 및 부양비

(단위 : %)

	전국				전북			
	노령화 지수	총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총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2000	33.7	38.7	28.9	9.7	51.5	43.4	28.6	14.8
2005	46.7	38.6	26.3	12.3	69.4	46.1	27.2	18.9
2010	68.7	36.6	21.7	14.9	95.6	45.2	23.1	22.1
2015	95.9	36.7	18.7	18.0	131.8	45.7	19.7	26.0
2019	124.1	38.8	17.3	21.5	168.7	48.1	17.9	30.2

주 : 1) 노령화 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X 100

2) 총부양비 = 유소년 부양비 + 노년 부양비

3) 유소년 부양비 = (0~14세 인구 / 15~64세 인구) X 100

4) 노년 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X 100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향후 전국과 전라북도의 인구 및 고령인구를 추계해본 결과, 전국과 전라북도 모두 총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전국의 총 인구수는 51,780,579명, 고령 인구수는 8,125,432명으로 고령 인구의 구성비가 전체 인구의 15.7%일 것으로 예측된다. 2030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5.0%를, 2040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3.9%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2045년에는 총 인구 49,574,038명 중 고령인구가 18,329,352명으로 전체 인구의 37.0%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일 것으로 추계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2020년 총 인구수

1,792,292명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369,17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6%를 차지할 것이며 2030년에는 30.0%, 2040년에는 39.4%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45년에는 총 인구수 1,606,635명 중 고령인구가 683,327명으로 전체 인구 중 42.5%가 고령인구일 것으로 추계된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고령화됨에 따라 노년 부양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은 2020년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21.7명을 부양해야하나 2045년에는 노년 부양비가 3배 이상 증가하여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69명을 부양해야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라북도의 노년부양비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 노년 부양비는 30.5%로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30.5명의 고령인구를 부양해야하지만 2045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87.4명의 고령인구를 부양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전국 및 전라북도 인구 및 고령인구 추계

(단위 : 명, %)

구 분		2020	2030	2040	2045
전국	총 인구수	51,780,579	51,926,953	50,855,376	49,574,038
	고령 인구수	8,125,432	12,979,573	17,223,537	18,329,352
	고령인구 구성비	15.7	25.0	33.9	37.0
	노년 부양비	21.7	38.2	60.1	69.0
전북	총인구수	1,792,292	1,718,458	1,654,350	1,606,635
	고령 인구수	369,170	516,342	651,827	683,327
	고령인구 구성비	20.6	30.0	39.4	42.5
	노년 부양비	30.5	49.4	76.7	87.4

주: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X 10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년도

다. 전라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전국과 전라북도의 성별 경제활동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국과 전라북도 모두 과거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대비 2019년의 경제활동인구는 전국과 전라북도 모두 증가하였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남성은 2000년 499천명에서 2019년 543천명으로, 여성은 2000년 372

천명에서 2019년 410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전라북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70.8%, 여성 51.5%로 전국 평균(남성 73.5%, 여성 53.5%)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9년 기준 남성 73.5%, 여성 53.5%로 여성보다 남성이 약 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남성 70.8%, 여성 51.5%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약 1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보다 높지만 2000년 대비 증감률을 비교하면 전국은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0.9%p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우 4.7%p 증가하였고, 전라북도는 남성의 증가율은 0.7%p에 그친데 반해 여성은 3.8%p가 증가하였다.

〈표 2-14〉 전국 및 전라북도 경제활동 현황

(단위 : 천명, %, %p)

		2000		2005		2010		2015		2019		연평균 증감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국	15세 이상 인구	17,526	18,667	18,539	19,580	19,978	20,846	21,222	22,018	21,886	22,618	1.31	1.11
	경제활동인구	13,047	9,104	13,876	9,842	14,622	10,335	15,728	11,426	16,000	12,097	1.23	1.73
	비경제활동인구	4,478	9,563	4,663	9,738	5,357	10,511	5,494	10,592	5,797	10,521	1.55	0.53
	경제활동참가율	74.4	48.8	74.8	50.3	73.2	49.6	74.1	51.9	73.5	53.5	-0.06	0.51
	고용률	70.8	47.0	71.9	48.6	70.3	47.9	71.4	50.1	70.7	51.6	-0.01	0.52
	실업률	5.0	3.6	4.0	3.4	4.0	3.3	3.6	3.5	3.9	3.6	-1.16	0.00
	15~64세 고용률	73.2	50.1	75.0	52.6	74.0	52.7	75.9	55.7	75.7	57.8	0.18	0.81
전북	15세 이상 인구	712	780	683	749	706	767	762	797	766	796	0.40	0.11
	경제활동인구	499	372	484	360	494	365	540	399	543	410	0.46	0.54
	비경제활동인구	213	408	199	389	212	403	222	399	224	386	0.27	-0.28
	경제활동참가율	70.1	47.7	70.9	48.0	70.0	47.5	70.9	50.0	70.8	51.5	0.05	0.42
	고용률	67.6	46.5	68.5	47.4	68.2	46.6	69.9	48.9	68.7	50.4	0.09	0.44
	실업률	3.5	2.5	3.3	1.4	2.5	1.9	1.4	2.1	3.1	2.2	-0.60	-0.63
	15~64세 고용률	69.6	50.4	72.0	53.2	71.1	52.2	73.5	55.3	72.7	55.8	0.23	0.5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전국의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순으로 많으며, 전라북도의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은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순이다. 전국 취업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산업은 26,461천 명 중 4,432천명이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으로 전체 취업자 중 약 16.8%가 해당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도소매업’ 14.0%, ‘숙박 및 음식점업’ 8.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9% 순으로 높은 비중이 나타났다.

〈표 2-15〉 전국 및 전라북도 취업자의 성별 산업 분포

(단위 : 천명)

	전국			전북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합계	26,461	15,212	11,249	929	517	412
농림어업	1,158	733	425	168	98	70
광업	15	13	2	1	1	0
제조업	4,432	3,144	1,289	120	85	35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67	61	6	3	2	1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28	107	22	4	3	0
건설업	1,970	1,771	199	88	79	10
도소매업	3,692	2,022	1,671	88	43	45
운수업	1,411	1,254	157	38	37	1
숙박 및 음식점업	2,251	846	1,405	61	20	4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74	613	261	14	10	4
금융 및 보험업	802	359	443	22	10	13
부동산업 및 임대업	525	333	192	14	10	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47	740	408	15	10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80	744	536	22	14	8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030	630	401	56	30	26
교육서비스업	1,848	616	1,233	73	25	4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85	379	1,706	88	13	7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51	238	214	14	8	6
협회 및 단체,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1,238	605	633	40	20	19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46	2	44	1	0	1
국제 및 외국기관	9	6	3	0	0	0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2019년 1/2분기

위 표와 같이 전국의 취업자 중 남성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산업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으로 나타나는데, ‘제조업’은 전체 남성 취업자의 20.7%가 종사하고 있으며, ‘도소매업’ 13.3%, ‘건설업’ 11.6% 순으로 종사 비중이 높다. 여성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종사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는 전체 여성 취업자 중 15.2%가 종사하고 있으며, ‘도소매업’ 14.9%, ‘숙박 및 음식점업’ 12.5% 순으로 종사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전라북도의 취업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산업은 ‘농림어업’으로 전체 취업자 중 18.1%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종사자가 12.9%, ‘건설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9.5%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취업자 중 남성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산업은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으로 전라북도의 남성 취업자 중 19.0%는 ‘농림어업’에, 16.4%는 ‘제조업’에 15.3%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농림어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전라북도 전체 여성 취업자의 18.2%로 비중이 가장 많으며 ‘농림어업’ 종사자가 17.0%로 뒤를 이었다.

취업자의 직업분포는 전국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순으로 많았으며 전라북도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사무 종사자’ 순으로 많았다. 전국 취업자의 직업 유형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20.8%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 종사자’ 17.9%, ‘단순노무 종사자’ 12.5%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6.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4.9%, ‘단순노무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가 각각 13.5%, 13.4% 순으로 종사자가 많았다.

전국의 남성 취업자의 직업 분포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18.6%로 가장 많으며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7.3%, ‘사무 종사자’ 15.9%,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취업자의 직업 분포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3.9%, ‘사무 종사자’ 20.6%, ‘서비스 종사자’ 1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남성 취업자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19.7%로 가장 많았으며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17.5%로 뒤를 이었고, 여성 취업자의 직업 분포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20.8%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종사자’ 16.2%, ‘사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각각 15.3%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6〉 전국 및 전라북도 취업자의 성별 직업 분포

(단위 : 천명)

	전국			전북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합계	26,461	15,212	11,249	933	519	413
관리자	416	349	67	16	12	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511	2,821	2,690	139	53	86
사무 종사자	4,729	2,417	2,313	125	62	63
서비스 종사자	3,014	1,014	2,000	95	28	67
판매 종사자	3,056	1,536	1,519	81	36	45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102	724	379	155	91	63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322	2,017	305	81	68	1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001	2,638	363	114	102	12
단순노무 종사자	3,309	1,696	1,613	126	66	60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2019년 1/2분기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고, 자영업, 임시근로자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국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51.3%로 절반 이상이며 자영업 21.0%, 임시근로자 18.1%, 일용근로자 5.4%, 무급가족종사자 4.1%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동일하나 42.2%로 전국(51.3%)보다 8.9%p 낮으며 자영업 26.1%, 임시근로자 16.9%, 무급가족종사자 7.7%, 일용근로자 7.0% 순으로 나타나 전국에 비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았다.

전국 남성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54.3%, 자영업자 26.1%, 임시근로자 12.6%, 일용근로자 6.1%, 무급가족종사자 0.9% 순이며, 여성은 상용근로자 47.4%, 임시근로자 25.5%, 자영업자 14.2%, 무급가족종사자 8.4%, 일용근로자 4.5%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각각 11.9%p, 6.9%p, 1.6%p 남성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급가족종사자와 임시근로자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7.5%p, 12.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남성은 상용근로자가 44.9%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도 34.2%, 임시근로자는 11.6%, 일용근로자는 7.6%, 무급가족종사자는 1.9%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여성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38.9%로 남성보다 6.0%p 낮았으며, 자영업자 역시 15.2%로 남성보다 19.0%p 낮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24.2%로 전라북도 남성보다 12.6%p 높았으며, 무급가족종사자 역시 15.5%로 전라북도 남성의 비중보다 13.6%p 높았다.

〈표 2-17〉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2018)

(단위 : 천명, %)

		전체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전국	전체	26,822 (100.0)	5,638 (21.0)	1,101 (4.1)	13,772 (51.3)	4,851 (18.1)	1,460 (5.4)
	남성	15,372 (100.0)	4,007 (26.1)	139 (0.9)	8,347 (54.3)	1,936 (12.6)	943 (6.1)
	여성	11,450 (100.0)	1,631 (14.2)	961 (8.4)	5,425 (47.4)	2,916 (25.5)	517 (4.5)
전북	전체	915 (100.0)	239 (26.1)	70 (7.7)	386 (42.2)	155 (16.9)	64 (7.0)
	남성	526 (100.0)	180 (34.2)	10 (1.9)	236 (44.9)	61 (11.6)	40 (7.6)
	여성	388 (100.0)	59 (15.2)	60 (15.5)	151 (38.9)	94 (24.2)	24 (6.2)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2018

전라북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18시간으로 전국 평균(41.73시간)보다 1.55시간 적게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상용근로자 286.33만원, 임시근로자 131.83만원, 일용근로자 157.70만원으로 전국 평균(상용 308.69만원, 임시 146.93만원, 일용 153.07만원)보다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의 임금은 낮고,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73시간이고 전국 남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10시간, 여성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8.55시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주당 근로시간이 5.55시간 더 길었으며 전라북도 역시 남성의 주당 근로시간이 42.50시간으로 여성의 주당 근로시간(37.08시간)보다 5.42시간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전국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여성(237.74만원)보다 남성(355.54만원)이 117.80만원 더 많고, 임시 근로자의 임금도 여성(125.28만원)보다 남성(179.52만원)이 54.24만원 더 많았으며, 일용근로자의 임금도 여성(93.49만원)보다 남성(183.92만원)의 임금이 90.43만원 더 많았다. 전라북도 역시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높게 나타났는데, 상용근로자는 남성 323.11만원, 여성 229.03만원으로 남성이 94.08만원 더 많았으며, 임시근로자는 남성 151.02만원, 여성 119.03만원으로 남성이 31.99만원 많았고, 일용근로자 역시 남성 183.76만원, 여성 98.30만원으로 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85.46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 (2018)
(단위 : 시간, 만원)

		주당 평균 근로시간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전국	전체	41.73	308.69	146.93	153.07
	남성	44.10	355.54	179.52	183.92
	여성	38.55	237.74	125.28	93.49
전북	전체	40.18	286.33	131.53	157.70
	남성	42.50	323.11	151.02	183.76
	여성	37.08	229.03	119.03	98.30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8 하반기), 원자료 분석

2018년 기준 전국으로 경력단절여성은 1,847천명으로 15~54세 기혼여성(9,005천명)의 20.5%, 15~54세 기혼 비취업여성(3,457천명)의 53.4%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력단절여성은 48천명으로 15~54세 기혼여성(296

천명)의 16.0%, 15~54세 기혼 비취업여성(107천명)의 44.3%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로 경력단절여성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544천명의 경력단절여성이 있는 경기도로 전체 경력단절여성(1,847천명)의 29.5%가 경기도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울산광역시로 각각 15~54세 기혼여성의 25.4%, 25.1%가 경력단절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11.3%)였다. 전라북도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이 약 48천명으로 나타났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에 이어 네 번째로 경력단절여성의 규모가 작았다. 전라북도의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16.0%, 15~54세 기혼 비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44.3%로 제주특별자치도(각각 11.3%, 43.7%) 다음으로 비중이 적게 나타난다.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4.5%p, 15~54세 기혼 비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9.1%p 낮게 나타났다.

〈표 2-19〉 시도별 경력단절여성 규모 (2018)

(단위 : 천명, %)

	15~54세 기혼여성	비취업여성	경력단절 여성	15~54세 기혼여성 대비 비취업여성 비중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	비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
계	9,005	3,457	1,847	38.4	20.5	53.4
서울특별시	1,635	629	324	38.5	19.8	51.5
부산광역시	550	232	114	42.2	20.7	49.1
대구광역시	433	159	90	36.7	20.7	56.5
인천광역시	530	202	101	38.1	19.1	50.2
광주광역시	273	103	55	37.6	20.0	53.2
대전광역시	273	99	54	36.3	19.6	54.1
울산광역시	219	101	55	46.3	25.1	54.1
세종특별자치시	61	25	16	40.8	25.4	62.4
경기도	2,416	959	544	39.7	22.5	56.8

	15~54세 기혼여성	비취업여성	경력단절 여성	15~54세 기혼여성 대비 비취업여성 비중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	비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
강원도	247	86	47	35.0	19.1	54.6
충청북도	273	97	57	35.7	20.7	58.1
충청남도	367	134	75	36.4	20.3	55.8
전라북도	296	107	48	36.2	16.0	44.3
전라남도	288	104	54	36.2	18.8	51.9
경상북도	434	156	84	36.0	19.4	53.8
경상남도	596	234	118	39.2	19.8	50.5
제주특별자치도	114	30	13	25.9	11.3	43.7

자료 : 통계청, 2018.11.29.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 현황 보도자료

라. 전라북도 보육·돌봄 현황

2019년 기준 전국의 아동인구는 8,639,564명으로 총인구(51,337,424명) 대비 1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총인구(1,816,001명) 대비 아동인구(303,635명)의 비율이 16.7%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동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399,046명의 아동이 분포되어 있어 전체 아동인구의 27.8%가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80,874명의 아동인구가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아동인구 자체는 적으나 총인구 대비 아동인구의 비율은 24.8%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특별자치도 19.2%, 광주광역시 19.0%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총인구 대비 아동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로 아동인구 비율이 각각 14.6%, 14.7%로 나타났다.

〈표 2-20〉 시도별 아동인구 (2019)

(단위 : 명, %, 위)

	총인구	아동인구	아동인구 비율	순위
계	51,337,424	8,639,564	16.8	
서울특별시	9,578,975	1,399,986	14.6	17
부산광역시	3,390,160	498,793	14.7	16
대구광역시	2,431,140	403,481	16.6	12
인천광역시	2,927,320	498,620	17.0	9
광주광역시	1,448,843	275,555	19.0	3
대전광역시	1,471,770	262,166	17.8	6
울산광역시	1,145,705	210,732	18.4	4
세종특별자치시	326,245	80,874	24.8	1
경기도	13,043,732	2,399,046	18.4	5
강원도	1,528,656	238,817	15.6	14
충청북도	1,589,355	268,703	16.9	10
충청남도	2,110,584	371,009	17.6	8
전라북도	1,816,001	303,635	16.7	11
전라남도	1,863,279	298,339	16.0	13
경상북도	2,653,916	413,238	15.6	15
경상남도	3,348,258	589,255	17.6	7
제주특별자치도	663,489	127,319	19.2	2

주 : 아동인구는 만 0~18세 인구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년

전국의 경우 총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아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전라북도는 총인구와 아동인구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전라북도의 총인구 감소는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아동인구는 2000년 12,950,610명에서 2019년 8,639,564명으로 약 33.3% 감소하였으며, 총인구에서 아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0년 27.2%에서 2019년 16.8%로 10.4%p 감소하였다. 전라북도는 2000년 기준 536,106명의 아동인구가 있었으나, 2019년에는 303,635명에 불과하여 2000년 대비 43.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아동인구 감소 정도 (33.3%)보다 10% 이상 높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전라북도의 아동인구 중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90,786명, 초등학생은 100,152명, 중고등학생은 112,697명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아동인구의 29.9%, 33.0%, 37.1%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경우 영유아가 전체 아동인구의 32.6%, 초등학생이 32.8%, 중고등학생이 34.7%를 구성하고 있어 전라북도는 전국보다 영유아의 비중이 낮고, 중고등학생의 비중이 높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표 2-21〉 전국 및 전라북도 아동인구 추이

(단위 : 명, %)

구 분		총인구	아동인구				아동인구 비율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전국	2000	47,534,117	12,950,610	4,692,590	4,007,936	4,250,084	27.2
	2005	48,683,040	11,862,253	3,791,955	4,183,314	3,886,985	24.4
	2010	49,879,812	10,979,932	3,218,442	3,535,298	4,226,192	22.0
	2015	50,951,719	9,739,769	3,197,860	2,828,178	3,713,732	19.1
	2019	51,337,424	8,639,564	2,814,879	2,829,619	2,995,066	16.8
전북	2000	2,004,381	536,106	188,478	158,749	188,879	26.7
	2005	1,896,039	455,357	143,470	161,632	150,256	24.0
	2010	1,854,957	408,900	114,175	135,279	159,447	22.0
	2015	1,858,352	357,143	109,975	104,207	142,961	19.2
	2019	1,816,001	303,635	90,786	100,152	112,697	16.7

주 : 아동인구는 중 영유아는 만 0~6세, 초등학생은 만 7~12세, 중고등학생은 만 14~18세임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전라북도에서 아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동인구가 120,748명으로 나타난 전주시이며, 아동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장수군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인구가 2,74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아동인구는 전라북도 전체 아동인구의 40.8%를 차지하며, 군산시와 익산시가 각각 46,975명, 46,484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아동인구수가 가장 적은 장수군은 아동인구가 2,744명으로 전라북도 전체 아동인구의 1% 미만을 차지하며, 진안군 2,896명, 무주군 2,929명 역시 아동인구가 3,000명 이하로 나타났다. 총인구 대비 아동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주시로 전체 인구의 18.5%가 아

동인구이며, 군산시 17.4%, 완주군 16.3%, 익산시 16.2% 순으로 아동인구의 비율이 높다. 총인구 대비 아동인구의 비율이 낮은 지역은 임실군이 11.0%로 가장 낮으며, 진안군이 11.3%, 부안군이 11.6%로 뒤를 이었다.

〈표 2-22〉 전라북도 시군별 아동인구 (2019)

(단위 : 명, %)

	총인구	아동인구	아동인구 구성			아동인구 비율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계	1,818,917	295,903	86,986	100,359	108,558	16.3
전주시	654,394	120,748	35,879	40,690	44,179	18.5
군산시	270,131	46,975	14,335	16,217	16,423	17.4
익산시	287,771	46,484	13,174	15,676	17,634	16.2
정읍시	110,541	15,845	4,301	5,355	6,189	14.3
남원시	81,441	12,020	3,371	3,963	4,686	14.8
김제시	83,895	10,349	2,908	3,618	3,823	12.3
완주군	92,220	15,077	4,824	5,401	4,852	16.3
진안군	25,697	2,896	920	918	1,058	11.3
무주군	24,303	2,929	777	1,057	1,095	12.1
장수군	22,441	2,744	754	1006	984	12.2
임실군	28,902	3,188	1026	1,060	1,102	11.0
순창군	28,382	3,711	1133	1,188	1390	13.1
고창군	55,504	6,759	1,813	2,204	2,742	12.2
부안군	53,295	6,178	1,771	2,006	2,401	11.6

주 : 아동인구는 만 0~18세 인구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년

2019년 기준 전라북도의 어린이집은 총 1,288개소로 전국의 37,371개소의 어린이집 중 3.5%의 어린이집이 전라북도에 위치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1,288개소의 어린이집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가정 어린이집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40.6%(523개소)가 가정 어린이집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민간 어린이집 33.3%(429개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0.6%(137개소),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6.8%(88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6.4%(82개소), 직장 어린이집 2.2%(28개소) 순으로 나타나며 협동 어린이집은 전라북도에 1개소에 불과하

였다. 전라북도의 어린이집 유형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비중이 적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국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에 11.6% 비중을 차지하나 전라북도는 6.4%에 불과하여 전국보다 5.2%p 낮으며 가정 어린이집은 전국(45.8%)보다 4.8%p 낮았다. 반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3.6%에 불과하나 전라북도에는 10.6%가 분포되어 있어 전국보다 7.0%p 높으며,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역시 전국(1.9%)보다 전라북도(6.8%)가 4.9%p 높았다.

〈표 2-23〉 시도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현황 (2019)

(단위 : 개소)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계	37,371	4,324	1,343	707	12,568	17,117	159	1,153
서울	5,698	1,661	28	101	1,512	2,098	33	265
부산	1,848	211	81	35	715	739	12	55
대구	1,322	137	113	23	573	435	5	36
인천	2,049	213	11	13	733	1,002	6	71
광주	1,122	48	107	21	389	519	6	32
대전	1,288	53	40	12	357	761	7	58
울산	842	72	13	5	412	300	5	35
세종	359	51	9	4	107	173	0	15
경기	11,305	924	66	116	3,642	6,222	67	268
강원	1,036	109	107	40	342	393	4	41
충북	1,130	81	104	31	435	440	4	35
충남	1,812	128	114	47	582	887	2	52
전북	1,288	82	137	88	429	523	1	28
전남	1,147	147	160	49	364	394	2	31
경북	1,844	160	82	36	752	758	1	55
경남	2,777	209	98	47	1,003	1,358	4	58
제주	504	38	73	39	221	115	0	18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9년

전라북도 내 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전주시이며, 어린이집이 가장 적은 지역은 진안군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내 어린이집은 전주시 545개소, 군산시 206개소, 익산시 201개소, 완주군 73개소 순으로 나타나며, 그 뒤를 정읍시(68개소), 남원시(58개소), 김제시(46개소) 등 시지역이었다. 반면 군지역은 어린이집이 적게 위치하고 있는 편이었는데, 진안군이 6개소로 가장 적었고, 장수군 7개소, 무주군 9개소, 임실군 10개소, 순창군 11개소 순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부안군과 고창군은 각각 23개소, 25개소로 다른 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표 2-24〉 전라북도 시군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현황 (2019)

(단위 : 개소)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계	1,288	82	137	88	429	523	1	28
전주시	545	16	38	16	198	266	1	10
군산시	206	16	20	12	74	78	0	6
익산시	201	11	22	13	60	90	0	5
정읍시	68	7	12	5	16	27	0	1
남원시	58	1	10	8	22	17	0	0
김제시	46	4	9	6	11	15	0	1
완주군	73	7	13	6	24	21	0	2
진안군	6	2	0	4	0	0	0	0
무주군	9	4	1	2	2	0	0	0
장수군	7	2	4	0	0	1	0	0
임실군	10	0	2	6	1	0	0	1
순창군	11	6	1	3	0	1	0	0
고창군	25	4	5	5	6	4	0	1
부안군	23	2	0	2	15	3	0	1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9년

2019년 기준 전라북도의 유치원은 519개소로 그 중 공립이 362개소로 가장 많고, 사립이 157개소이며 국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총 유치원은 8,837개소로 그 중 국립은 3개소에 불과하며, 공립이 4,856개소로 가장 많고, 사립이 3,978개소이다. 전체 유치원 중 공립 유치원이 55.0%로 과반을

넘고, 사립 유치원이 45.0%이며 국립 유치원은 0.1% 미만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유치원 중 공립 유치원이 69.7%를 차지하여 전국 전체 비중(55.0%)보다 14.7%p 높으며, 사립은 30.3%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공립 유치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체 유치원 중 95.0%가 공립 유치원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82.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사립 유치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전체 유치원 중 75.0%가 사립 유치원이며 서울특별시가 71.6%, 대구광역시가 68.7%로 뒤를 이었다.

〈표 2-25〉 시도별 유치원 설치 및 운영 현황 (2019년 기준)

(단위 : 개소)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8,837	3	4,856	3,978
서울	830	0	236	594
부산	408	0	102	306
대구	355	0	111	244
인천	403	0	169	234
광주	312	0	130	182
대전	260	0	99	161
울산	200	0	89	111
세종	60	0	57	3
경기	2,237	0	1,200	1,037
강원	368	1	266	101
충북	328	1	245	82
충남	499	1	370	128
전북	519	0	362	157
전남	542	0	432	110
경북	707	0	470	237
경남	686	0	417	269
제주	123	0	101	22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2019년

2018년 기준 전국에는 총 4,211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그 중 전라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285개로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6.8%를 차지한다.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로 789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454개소, 전라남도가 378개소 순으로 많이 위치하고 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에 불과하여 울산광역시 56개소, 제주특별자치도 66개소 순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적었다. 전라북도의 경우 아동인구수는 전국 아동인구수의 3.5% 수준에 불과하나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6.8% 수준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아동인구수 대비 높은 편이다. 일일 이용 아동은 7,247명으로 그중 미취학 아동 127명, 초등학생 6,043명, 중고등학생 1,074명, 학교 밖 청소년 3명이다. 전라북도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는 하루 평균 25.4명으로 전국 평균(26.0명)보다 약간 적으며, 평균 이용 아동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하루 평균 27.6명이 이용하는 경기도이고 평균 이용 아동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하루 평균 23.2명이 이용하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이다.

〈표 2-26〉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 (2018)

(단위 : 개소, 명)

	지역아동센터	일일 이용 아동	미취학 아동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교 밖
계	4,211	109,610	1,798	87,501	20,223	88
서울	454	11,774	66	8,443	3,257	8
부산	212	4,916	69	3,644	1,196	7
대구	200	5,029	52	4,053	920	4
인천	178	4,397	24	3,530	842	1
광주	308	7,901	73	6,611	1,212	5
대전	144	3,822	55	2,831	933	3
울산	56	1,300	27	1,162	110	1
세종	13	334	9	284	41	0
경기	789	21,790	216	16,985	4,564	25
강원	172	4,535	87	3,643	802	3
충북	184	4,966	105	4,086	771	4
충남	238	6,378	252	5,194	923	9
전북	285	7,247	127	6,043	1,074	3
전남	378	9,946	325	8,314	1,296	11
경북	271	6,830	143	5,671	1,015	1
경남	263	6,678	136	5,515	1,024	3
제주	66	1,767	32	1,492	243	0

자료 : 보건복지부,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마. 전라북도 여성 대표성과 사회참여 현황

행정 및 정책결정에서 여성의 참여 현황을 보면 2016년 이후 여성공무원 비율 및 여성관리직(5급 이상) 인원은 꾸준히 확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15.4%이며, 2019년 9월 기준으로는 19.1%로서 본래 목표였던 12.3%를 상회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를 도부 평균 2020년 13.8%에서 2021년 15.6%로 제시하였는데, 전북의 경우 2020년 13.1%, 2021년 14.8%로 나타나 전국 기준보다 약간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7〉 여성공무원 및 여성관리직(5급 이상)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1,809	530	29.3%	1,778	538	30.3%	1,791	569	31.8%	1,774	592	33.4%
5급 이상	426	35	8.2%	414	42	10.1%	415	64	15.4%	429	82	19.1%

자료 : 전라북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안), 2020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4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 말 정부위원회의 여성비율은 37.8%, 지자체위원회는 32.3%로 지자체위원회의 여성비율이 정부위원회보다 5.5%p 낮았다. 전라북도의 경우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살펴보면 전체 위원회 891개, 위원 수 8,811명 중에 여성위원이 3,093명을 차지하여 35.1%로 나타났다.

〈표 2-28〉 여성위원 참여율

(단위 : 명, %)

구분	전체 위원회수	전체 위원수 (위촉직)	여성 위원수	여성위원 비율	비고
계	891개	8,811명	3,093명	35.1%	
도	105개	1,452명	604명	41.6%	19년 말 기준
시군	786개	7,359명	2,489명	33.8%	18년 말 기준

자료 : 전라북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안), 2020년

전국 평균으로는 광역단위가 39.4%, 기초단위 37.6%(18년 기준)인데 전북은 도위원회 여성위원 41.4%, 시군 33.8%로 광역단위의 여성위원 비율은 2%p 높고, 시군 기초지자체는 0.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9년 사회조사에 나타난 자원봉사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 연간 참여횟수를 보면 교육 및 상담이 가장 많아 8.94회, 사회복지시설 및 보호시설은 연간 6.07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횟수가 많은 자원봉사 활동은 교육 및 상담분야(10.28회)와 사회복지시설 분야(6.62회)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행사 및 지역행사,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영역은 여성의 참여횟수가 남성보다 낮았으며 국제봉사활동은 횟수는 비슷하였다. 봉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횟수에 비해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9〉 자원봉사 연간 참여 횟수 및 1회당 평균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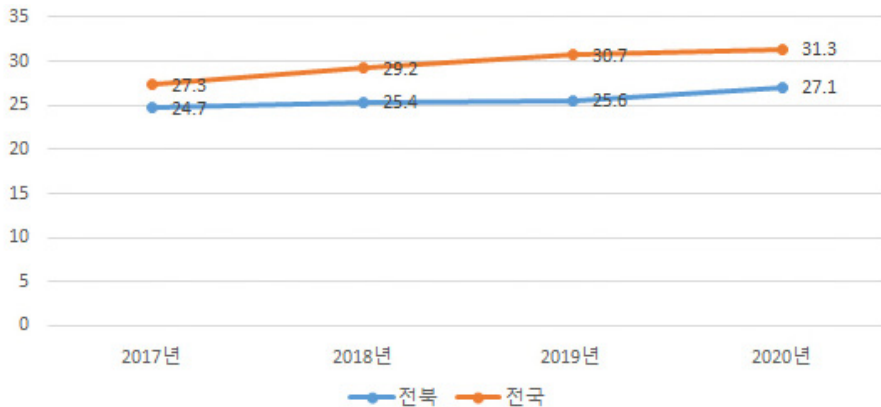
(단위 : 회, 시간)

	2018 전북		남성		여성	
	참여횟수 (연간)	1회 평균시간	참여횟수 (연간)	1회 평균시간	참여횟수 (연간)	1회 평균시간
사회복지시설 및 보호시설	6.07	3.52	5.50	3.53	6.62	3.51
환경보전, 범죄예방	4.89	2.98	5.15	3.15	4.49	2.71
교육 및 상담	8.94	3.40	6.90	3.27	10.28	3.48
국제행사 및 지역행사	2.94	4.43	3.59	4.06	2.23	4.83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4.69	4.86	5.29	4.74	3.79	5.0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4.88	5.07	4.99	5.55	4.75	4.48
기타 공공행정 분야	4.42	4.00	4.37	3.80	4.48	4.25

자료 : 전라북도, 2018 전라북도 사회조사보고서, 2018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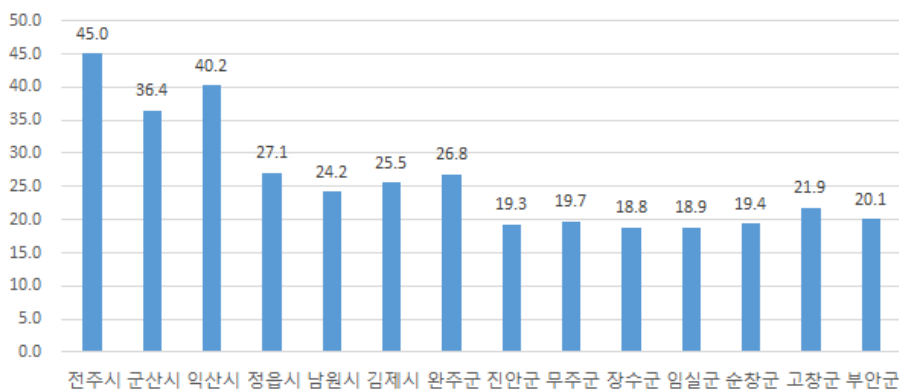
바. 전북여성의 복지 현황

전북여성의 복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전라북도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27.1%로 전국(31.3%)보다 4.2%p 낮았다. 전북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전년(25.6%)대비 1.5%p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국 대비 예산 비중이 낮다.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에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45.0%로 전북보다 17.9%p 많고, 익산 40.2%, 군산 36.4%, 정읍 27.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계,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2020.

〈그림 2-1〉 지자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계,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2020.

〈그림 2-2〉 전라북도 시군별 지자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2017년 기준 전북의 사회복지시설 수는 14,449개소, 생활인원은 32,137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수 14,449개소 중 노인복지 시설이 14,370개소, 생활인원 29,9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라북도의 사회복지 시설은 전국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수 71,228개소의 20.3%를 차지하며, 생활인원은 전국 337,979명의 9.5% 차지한다.

〈표 2-30〉 사회복지 시설 수 및 생활인원

(단위 : 개소, 명)

		합계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정신질환요양	
		시설	생활 인원	시설	생활 인원	시설	생활 인원	시설	생활 인원	시설	생활 인원	시설	생활 인원
2013	전국	61,250	268,196	838	27,303	58,704	190,150	1,336	29,584	261	5,355	65	9,681
	전북	7,119	15,726	29	991	7,019	11,667	50	1,869	15	308	4	752
2014	전국	60,665	280,569	458	15,073	58,356	213,356	1,455	29,942	260	5,826	78	9,817
	전북	7,135	14,902	58	506	7,003	11,218	51	1,859	14	341	4	758
2015	전국	78,680	298,853	447	14,233	75,504	233,281	1,324	28,016	268	5,172	1,025	9,377
	전북	7,196	15,826	62	998	7,061	11,776	51	1,752	13	333	4	750
2016	전국	58,219	484,264	438	13,656	55,946	225,558	1,405	22,815	272	4,751	47	7,813
	전북	7,199	16,656	16	743	7,109	12,922	51	1,753	14	291	4	726
2017	전국	71,228	337,979	450	12,207	68,726	275,544	1,604	29,949	285	4,647	45	7,989
	전북	14,449	32,137	0	0	14,370	29,924	61	1,769	13	230	0	0

자료 :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2017년 기준 전북의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94,639명으로 전북의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전국 수급자 1,851,646명의 6.0%를 차지하였다. 전북의 일반수급자는 전국 1,581,646명의 6.0%를 차지하며 전년 99,708명 대비 5.1% 감소하였다.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94,639명 중 일반수급자는 89,275명이고, 시설 수급자는 5,364명이다.

〈표 2-31〉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단위 : 가구, 명, %)

구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비율	가구	인원	
2015	전국	1,014,177	1,646,363	3.2	1,014,177	1,554,484	91,879
	전북	60,655	103,248	5.6	60,655	97,750	5,498
2016	전국	1,035,435	1,630,614	3.1	1,035,435	1,539,539	91,075
	전북	60,394	99,708	5.4	60,394	94,387	5,421
2017	전국	1,122,922	1,581,646	3.0	1,032,996	1,491,650	89,996
	전북	64,251	94,639	5.1	58,887	89,275	5,364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주 : 수급자비율=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주민등록인구×100

2018년 전북의 장애인 수는 131,746명으로 전국 2,585,876명의 5.1%를 차지하였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의 수가 66,299명으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순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 장애인이 60,061명으로 전국 여성 장애인 1,089,578명의 5.5%이며, 전북 장애인의 45.6%를 차지하였다.

〈표 2-32〉 장애유형별 성별 장애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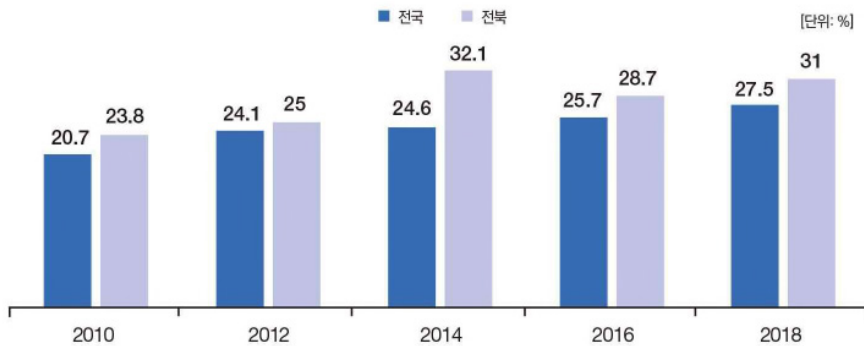
(단위 : 명)

장애 유형		2016			2017			2018		
		전체	여자	남자	전체	여자	남자	전체	여자	남자
전국	총계	2,511,051	1,053,463	1,457,588	2,545,637	1,070,087	1,475,550	2,585,876	1,089,578	1,496,298
	지체	1,267,174	534,507	732,667	1,254,130	528,746	725,384	1,238,532	521,744	716,788
	시각	252,794	102,042	150,752	252,632	102,268	150,364	252,957	102,642	150,315
	청각	271,843	124,094	147,749	302,003	139,684	162,319	342,582	160,342	182,240
	언어	19,409	5,509	13,900	20,321	5,731	14,590	20,744	5,835	14,909
	지적	195,283	77,558	117,725	200,903	79,736	121,167	206,917	82,171	124,746
	기타	504,548	209,753	294,795	515,648	213,922	301,726	524,144	216,844	307,300
전북	총계	130,345	59,325	71,020	131,303	59,860	71,443	131,746	60,061	71,685
	지체	68,350	32,454	35,896	67,516	32,077	35,439	66,299	31,435	34,864
	시각	11,772	4,946	6,826	11,693	4,928	6,765	11,583	4,886	6,697
	청각	14,426	6,679	7,747	15,677	7,379	8,298	17,200	8,187	9,013
	언어	1,146	348	798	1,181	343	838	1,190	345	845
	지적	11,702	4,859	6,843	11,974	4,984	6,990	12,140	5,052	7,088
	기타	22,949	10,039	12,910	23,262	10,149	13,113	23,334	10,156	13,178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사. 전북여성의 안전과 건강 현황

전북여성의 안전과 건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북 도민의 유병률은 31%로 2016년(28.7%)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성별로는 여성의 유병률이 34%로 남성 27.9% 대비 6.1%p 더 높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2016년(여성 33.6%, 남성 23.5%) 대비 각각 0.4%p, 4.4%p 증가하였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주) 지난 2주일 동안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

〈그림 2-3〉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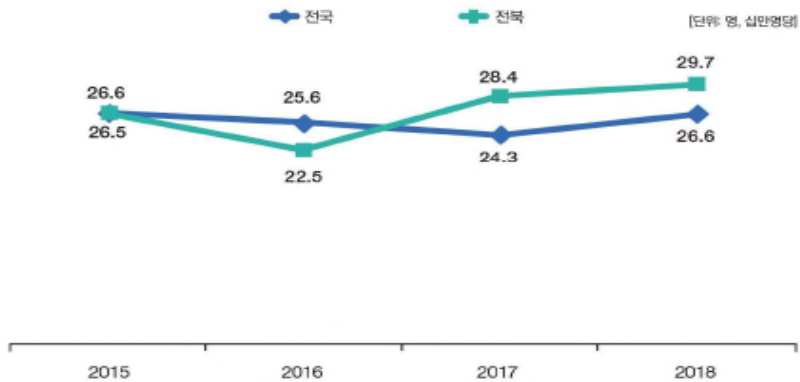
전북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7명으로 전년(28.4명) 대비 1.3명 증가하였다. 전북지역의 자살률은 전국(26.6명) 대비 3.1명 높으며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33〉 자살률

(단위 : 명, 십만 명당)

구분		계	남자	여자
2016	전국	25.6	36.2	15.0
	전북	22.5	41.8	15.2
2017	전국	24.3	34.9	13.9
	전북	28.4	44.9	12.0
2018	전국	26.6	38.5	14.8
	전북	29.7	43.7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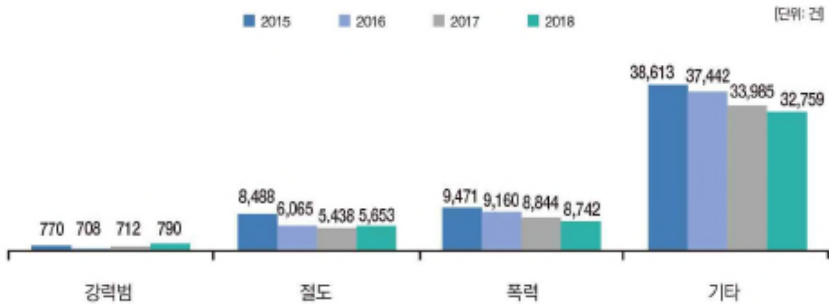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2-4〉 10만 명당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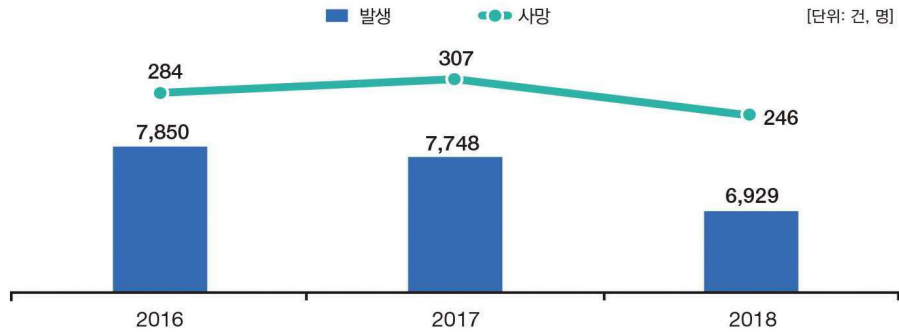
2018년 전북의 유형별 범죄 발생건수는 기타 32,759건, 폭력 8,742건, 절도 5,653건, 강력범 790건으로 폭력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범죄 발생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2-5〉 유형별 범죄 발생건수

전라북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8년 6,929건이며 사망자 246명, 부상자는 10,452명이다. 발생건수는 전년(7,748건) 대비 819건(10.6%) 감소하였고 전국(217,148건)의 3.2%를 차지하였으며 사망자수는 전년(307명) 대비 61명(19.9%) 감소하였고, 부상자 수는 전년(11,948명) 대비, 1,496명(12.5%) 감소하였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그림 2-6〉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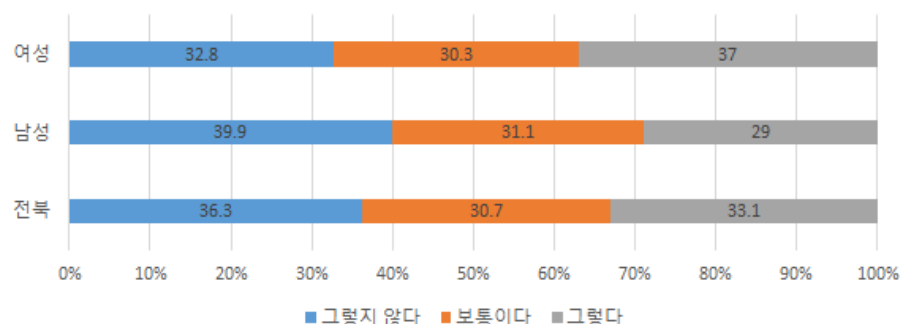
〈표 2-34〉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

(단위 : 건, 명)

구분		발생	사망	부상
2016	전국	220,917	4,292	331,720
	전북	7,850	284	12,261
2017	전국	216,335	4,185	322,829
	전북	7,748	307	11,948
2018	전국	217,148	3,781	323,037
	전북	6,929	246	10,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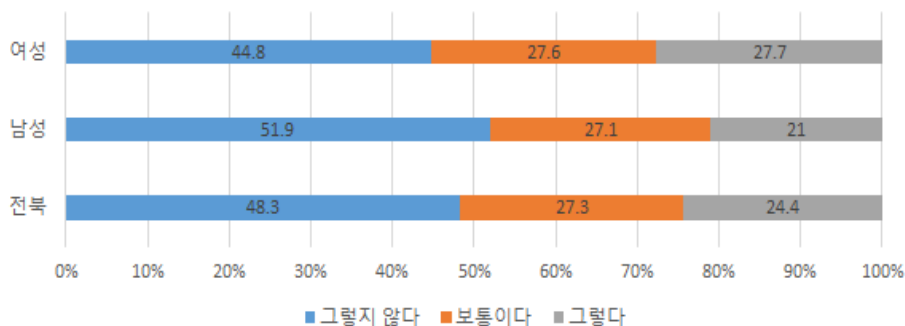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안전 환경에 대한 평가는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사정에 처했을 때 지역사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밀도와 개방성을 알 수 있는 항목으로 사회조사 지표에는 ‘안전’분야에 해당된다. ‘지역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동네 각종 행사와 모임에 자주 참여한다’ 등 4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보면 대체적으로 남성 보다 여성의 경우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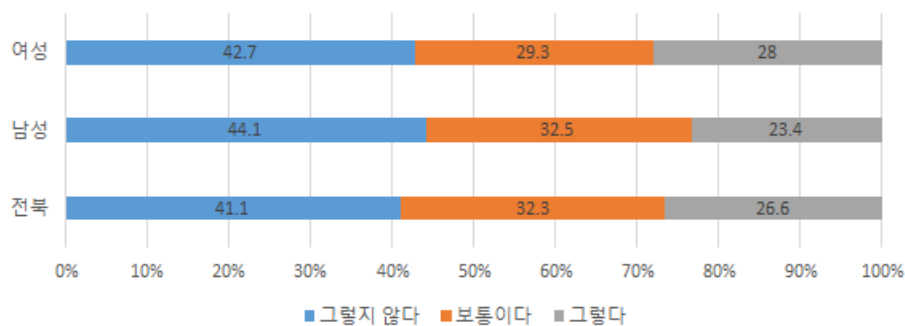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2-7〉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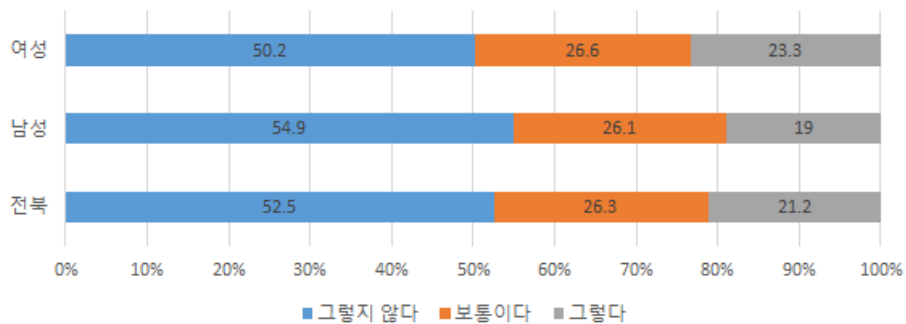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2-8〉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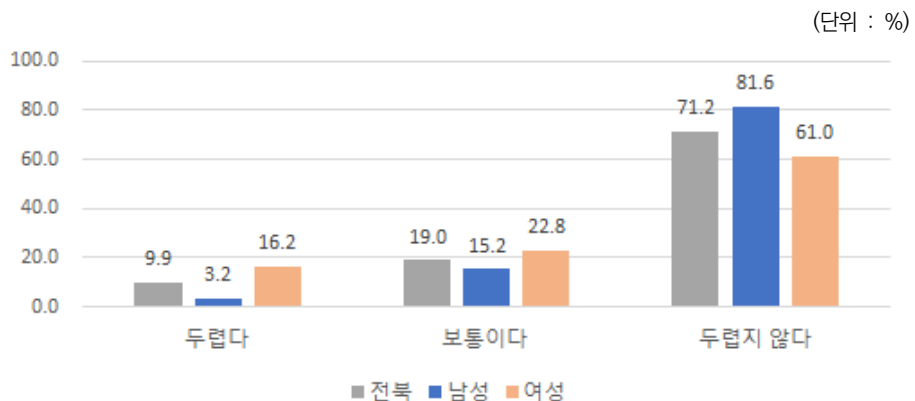
〈그림 2-9〉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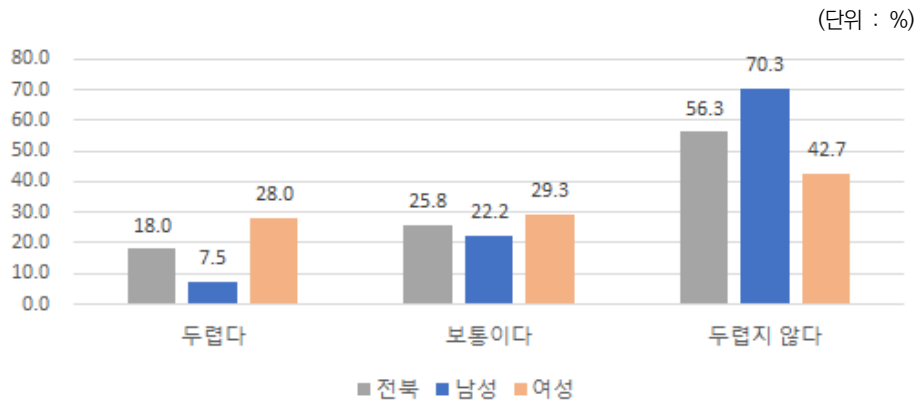
〈그림 2-10〉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동네 각종 행사와 모임에 자주 참여)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야간 혼자 있을 때,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나 자신 및 가족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 3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응답을 보면 대체적으로 남성 보다 여성의 경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43.5%, 42.7%로 나타나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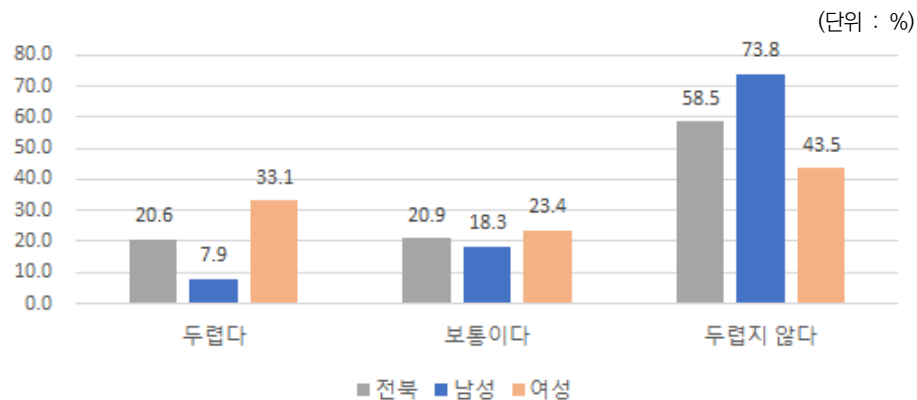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2-11〉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야간 혼자 있을 때)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2-12〉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나 자신)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2-13〉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여성의 재난에 대한 대응 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긴급상황 시 신고번호, 재난 행동요령(지진, 화재, 폭염), 소화기 사용법,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이 남성보다 대부분의 재난 등 긴급상황 대처 방안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2-35〉 재난 등 긴급상황 대처수준

(단위 : %)

	2018 전북				남자				여자			
	아주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잘 모른 다	전혀 모른 다	아주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아주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번호	73.3	23.7	2.5	0.5	77.7	0.5	1.5	0.3	69.1	26.8	3.5	0.6
재난 행동요령(지진)	33.1	48.3	16.5	2.1	38.8	47.9	12.0	1.3	27.6	48.7	20.9	2.8
재난 행동요령(화재)	34.2	48.7	15.1	2.0	39.7	48.4	10.6	1.3	28.8	49.1	19.5	2.7
재난 행동요령(폭염)	33.1	47.7	16.9	2.3	38.4	47.2	13.0	1.5	28.0	48.3	20.8	3.0
소화기 사용법	28.0	38.4	25.4	8.3	37.6	40.4	17.4	4.7	18.6	36.4	33.3	11.8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18.5	33.5	31.6	16.4	23.9	37.5	27.3	11.3	13.2	29.6	35.7	21.4

자료 : 전라북도, 2019년 전라북도 사회조사보고서

3. 전라북도 여성·가족 정책 분석

가. 우리나라 여성정책 현황

여성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이며, 우리사회는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이 평등한 기회와 존엄을 누릴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2017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4대 목표, 6대 대과제, 22개 중과제, 70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범부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4대 목표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이고, 6대 대과제는 "①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②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③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④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⑤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증진, ⑥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이다.

정부는 2020년 시행계획에서 2018년의 주요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부처 성평등 정책 추진 및 관리체계를 정비 : '18년 정부업무평가(혁신)에 각 부처의 성평등 개선 노력 반영
- 부문별 성평등 교육 및 일상 속 성평등 문화 확산 : 공무원, 사회복지사, 근로감독관 등 공공부문 전달체계 종사자의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대중매체, 교과서 모니터링, 양성평등 교육 시행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및 고용시장 성별 격차 완화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전사업장에 적용,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대체인력 지원 등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확대, 새일센터 확충 및 훈련 인센티브 신규 도입으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연계 강화
- 자녀 돌봄지원 강화 및 일·생활 균형 확산 : 아동수당을 도입(소득하위 90%, 월10만원) 및 다함께 돌봄센터(12개소) 등 보육 지원 인프라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 인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소득대체율을 상향(통상임금 60%→80%) 등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강화 등

-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대책 이행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범정부 민·관 협의체 운영 및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설치 운영 등 여성폭력 대책 총괄·조정 및 이행 점검을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등
-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건강증진 정책 강화 :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성별 모니터링, 여성건강통계집 발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활성화,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3개소)으로 여성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 및 바우처지원 등

정부가 제시하는 양성평등기본계획 시행상의 개선 필요사항은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대표성, 일생활 균형, 여성폭력 부문에서 제시된다. 성차별·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제도 개선, 특히 2030세대의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며 성차별 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성 대표성 문제에서는 민간부문의 여성 고위직 비율이 매우 저조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일자리 질이 낮고 30대 여성의 이용률이 낮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여성 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과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정부의 시행 계획상의 다양한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주무부처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성인지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중앙 및 지자체에 대한 여성대표성, 여성폭력 및 인권에 관한 사업 운영, 새일센터로 대표되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사업, 그리고 성평등 교육 및 문화 관련 사업 기획, 운영 등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상의 사업 대부분이 여성가족부 단독의 권한과 전달체계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며, 협업을 이끌어내는 작업은 권한뿐 아니라 사업시행으로 얻는 효과성 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다시 성주류화 기반을 다지는 정책인프라 강화와 사회문화 인식 개선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한편 신종 성폭력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N번방 사건이나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10대 미성년, 20대 여성들의 불안과

분노가 극대화되고 있는 반면, 여성가족부 등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미흡함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잔인하고 여성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신종 범죄가 온라인에서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모니터링 작업과 함께 적극적 처벌, 피해자보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과제는 타 정책과제보다 꾸준히 재원을 확대하며 실행되고 있다. 최근 지자체마다 방과 후 돌봄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시설 등의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방향은 피해자지원을 촘촘하고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할 만한 성과로 보인다.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다 열악한 여성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지자체마다 개선되고 있는 추세도 긍정적이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일자리 연계와 경력개발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면서 158개소에 이르는 양적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일자리의 질은 낮아 제조, 단순판매, 시간제강사, 사회서비스 일자리, 조리요양보호사 등 저임금의 한정된 여성 직종에 몰려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2017년부터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예방 사업을 운영하고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는 등 일자리 질과 여성경력개발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새일센터는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운영 인프라에 위탁되는 ‘사업’으로 종사자 처우문제, 낮은 훈련단가, 운영주체의 다양성과 성과의 큰 편차 등의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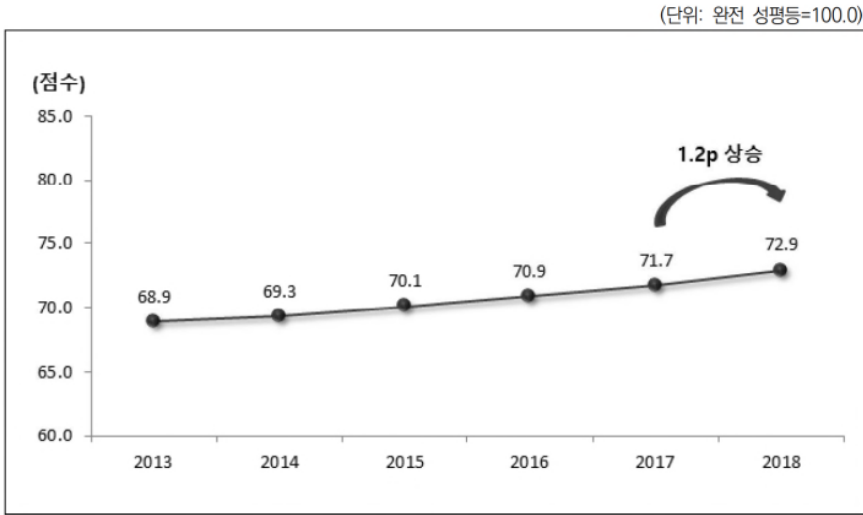
나. 우리나라 성평등 현황

2009년 우리나라 성평등 실태와 개선정도, 성불평등이 심각한 분야와 그 원인을 파악할 목적으로 개발된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대 영역에,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등 8개 분야 2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36〉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비빈곤인구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장애인 고용률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비율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가사노동 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성별 정보화 격차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소, 2019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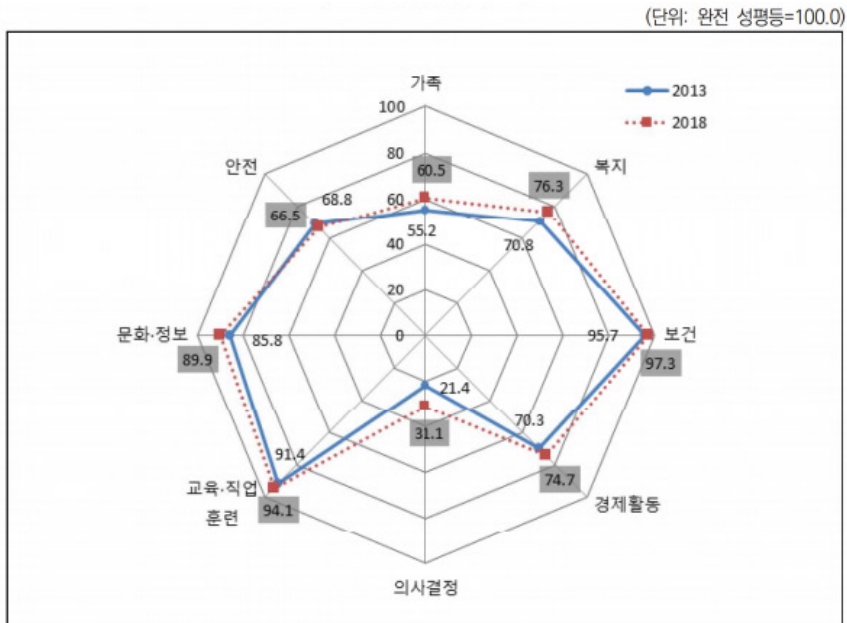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소, 2019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2-14〉 국가성평등지수 변화 추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는 72.9로 연도별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책 영역별로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중 가장 성평등지수 값이 높은 분야는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94.1%였고, 경제활동 분야 74.7점, 의사결정 분야 31.1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인식·문화’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70.3점, 2016년 72.3점, 2018년 75.2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78.4점에서 2018년 80.4점으로 소폭 상승하였고 보건분야와 복지 분야가 2013년에 비해 각각 1.6p, 5.5p 상승한 데 비해, 안전분야는 2.3p 하락하였다. 분야별 성평등 수준은 2018년 기준 보건 분야가 97.3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직업훈련 분야(94.1점), 문화·정보 분야(89.9점), 복지 분야(76.3점), 경제활동 분야(74.7점) 순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았다. 반면 의사결정 분야가 31.1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족분야 60.5점, 안전분야 66.5점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소. 2019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그림 2-15〉 분야별 성평등수준

국제수준과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을 비교해 보면, GDI(인간개발지수)는 한국 189개국 109위로 3그룹으로 분류되었고, GII 경우는 189개국 중 10위 (0.058)이며, GGI의 경우 2019년 발표 기준 153개국 중 108위(0.672)로 전년 대비 7계단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장관 비율 성비 개선, 유사 업무임금, 추정소득,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 개선에 있다. 국제 비교의 경우 우리나라 성평등 순위 폭이 큰 이유는 주관기관의 지수별 측정 지표분야나 지수화과정 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우리 사회는 여성의 교육정도가 높고, 모자보건 등 보건 수혜율이 높고, 정치경제 분야 대표성이 크게 낮기 때문에 국제 기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다. 전라북도 여성정책 현황

전북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복지여성국 내의 5개 과 중, '여성청소년과'이다. 한국 전체의 2020년 예산 2조 8,993억 원 중 일반회계는 2조 3,757억 원으로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198,339(백만 원)원으로 복지여성국 예산의 8%를 차지한다. 노인장애인과의 예산 비중이 가장 커서 51%를 차지하며(1,218,862백만 원), 사회복지과가 35%(840,038백만 원)이다. 2019년에 비해 여성청소년과의 예산은 10.8% 증가하였다.

〈표 2-37〉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2020년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년 본예산			2019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계	2,375,732	1,859,271 (78.3%)	516,461 (21.7%)	2,092,667	1,635,309 (78.1%)	457,358 (21.9%)	283,065	13.5
사회 복지과	840,038	590,598	249,440	779,553	538,381	241,172	60,485	7.8
여성 청소년과	198,339	142,960	55,379	179,056	132,094	46,962	19,283	10.8
노인 장애인과	1,218,862	1,046,183	172,679	1,031,733	891,946	139,787	187,129	18.1
보건 의료과	88,307	58,890	29,417	74,629	52,022	22,607	13,678	18.3
건강 안전과	27,228	20,640	6,588	26,640	20,866	5,774	588	2.2
도립여성 중고등학교	1,140	0	1,140	1,029	0	1,029	111	10.8
어린이 창의체험관	1,818	0	1,818	27	0	27	1,791	6,6

자료 :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내부자료

전북 여성정책 담당 주무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는 8개의 여성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실시하는 구직상담, 취업지원, 직업훈련과정 운영 등의 사업은 연간 취업지원 7,320명, 새일여성인턴 380명, 직업훈련과정 수료생 상용일자리 창출 300명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여성역량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은 39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성평등기금을 운영하거나 단

체 사업을 지원하며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등을 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강화 사업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상담·치료, 성매매피해여성 사회 복귀 지원 등의 사업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취약 위기가족을 위한 시설 운영지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통합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청소년 권리증진 및 활동 활성화 사업, 청소년 보호·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사업, 아동에 대한 보호책임 강화, 아동수당 지급과 다함께 돌봄사업 등을 수행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에서 시·도지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전북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0) 상의 2020년도 시행계획(안)에 의하면, 중앙계획에 맞춰 6개 대과제, 22개 중과제, 56개 세부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56개 과제 집행 예산은 166,996백만 원이다. 대과제별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과제 1영역인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7개 사업으로, 다른 5개 대과제에 비해 신규 사업이 3개로 가장 많다. 신규 사업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담론 활성화, 성인지 감수성을 공유하는 양성평등정책 홍보, 지역 기반의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다.

〈표 2-38〉 전라북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대과제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사업

연번	과제명	예산(백만원)	비고
	소계	3,092	
1	양성평등 결혼 문화 및 남녀 가사육아 분담 문화 확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220	
2	양성평등 결혼 문화 및 남녀 가사육아 분담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포스터 전시전)	10	
3	성평등 언어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언어 사용 지원		
4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담론 활성화	73	신규
5	양성평등주간 계기 성평등 의식제고	31	
6	성인지 감수성을 공유하는 양성평등정책 홍보	379	신규
7	지역 기반의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379	신규

대과제 2영역인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보장 분야의 사업은 농업 분야 경영자 및 후계자 양성, 농어촌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사업, 전북 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이다.

〈표 2-39〉 전라북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대과제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보장

대과제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보장	예산(백만원)	비고
	소계	1,943	
1	농업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전문 농업경영인 및 후계농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183	
2	농업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농어촌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338	
3	어업 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54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	5	
5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36	
6	대상별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개발·운영	187	
7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962	
8	경력단절 여성 고용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120	
9	새일센터의 기능 강화	58	

대과제 3영역인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의 사업은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여성관리자 DB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 4개사업이며, 3개가 비예산 사업이다.

〈표 2-40〉 전라북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대과제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대과제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예산(백만원)	비고
	소계	21	
1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확대 목표 수립 관리	-	
2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질적 수준 제고	-	
3	전략적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운영 계획 수립	21	
4	여성관리자 DB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	

대과제 4영역인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은 아이돌보미,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한부모가족 지원 등 14개 사업으로 6개 대과제 중 두 번째로 많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10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편적 수당 지급 사업이 가장 예산 비중이 커 91,337백만원이며 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사업 11,194백만원이 소요된다.

〈표 2-41〉 전라북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대과제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대과제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예산(백만원)	비고
	소계	145,891	
1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5,900	
2	보육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 질 제고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평가인증 의무화)	6,857	
3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676	
4	장애인 지원 서비스 확대	1,845	
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양육비 이행 지원 확대	13,935	
6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강화	3,832	신규
7	아동 양육비용 등에 대한 지원 확대	91,937	
8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다함께돌봄)	2,394	
9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03	
10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확충	1,194	
11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12	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11,194	
13	아버지를 위한 상담·교육 지원 강화	1,824	
14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의 확대	-	

대과제 5영역인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여성폭력 예방 교육, 피해자 자립시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이주 여성 폭력 피해지원 사업 등 대과제 6개중 가장 많은 15개 사업이 해당된다.

〈표 2-42〉 전라북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대과제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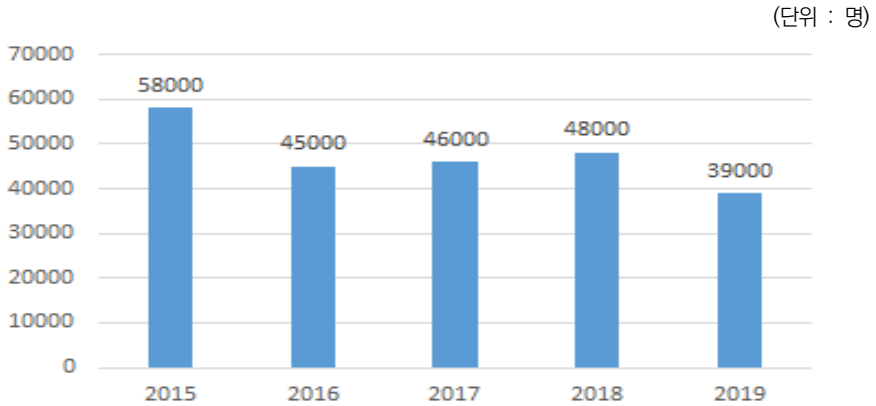
대과제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예산(백만원)	비고
	소계	16,017	
1	공공기관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5	
2	일반국민에 대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78	
3	일반국민에 대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618	
4	공공부문 성희를 방지 강화	5	
5	피해자 발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연계 강화	7,128	
6	통합서비스 지원 강화	1,718	
7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 지원	398	
8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2,103	
9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 확대	1,226	
10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234	
1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활성화	10	
12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808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1,321	
14	안전한 분만 인프라 구축	350	
15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	15	

마지막으로 대과제 6영역인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사업은 성별영향
평가사업 지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성인지교육 등 4개 사업이다.

〈표 2-43〉 전라북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대과제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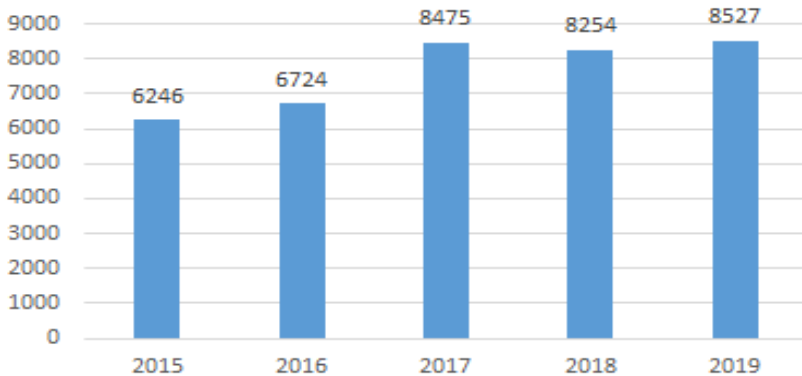
대과제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예산(백만원)	비고
	소계	32	
1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	
2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 및 업무 분야별 성인지 교육 내실화	29	
3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	
4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턴트 역량 강화	3	

전라북도는 2018년 시행계획의 추진 주요 성과로 첫째 ‘여성 취업자 수 증가 및 여성 고용률 상승’을 꼽고 있다. 전북 내부자료에 의하면 경력단절 여성수가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58,000명에서 2019년 39,000명으로 줄었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상용 일자리 연계 건수가 2015년 6,246건에서 2018년 8,527건으로 늘었다.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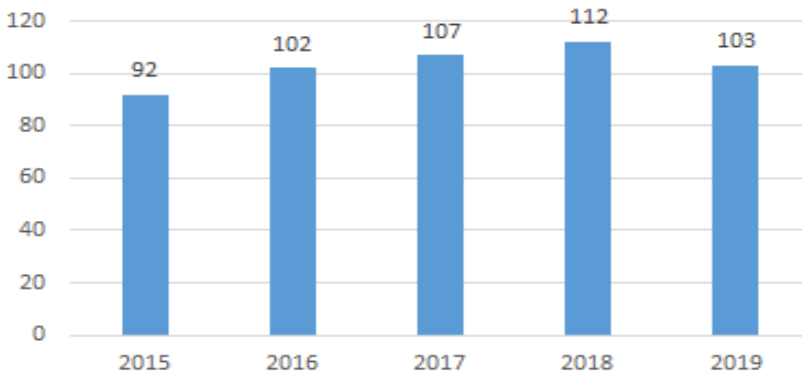
〈그림 2-16〉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 수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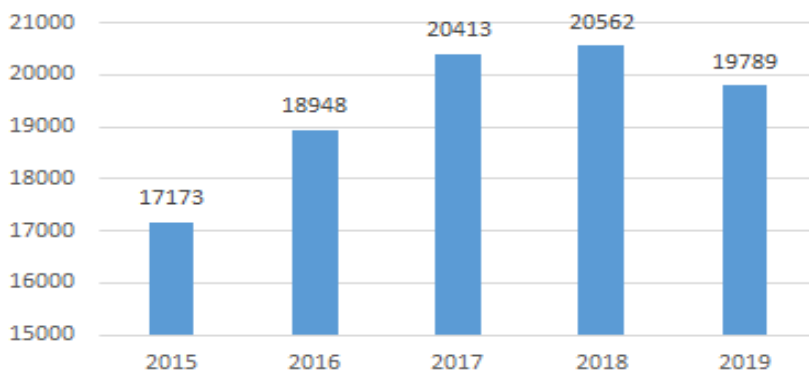
〈그림 2-17〉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 상용일자리 연계

두 번째 성과로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자 확대 및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증가, 여성친화기업 협약 확대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를 꼽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은 ‘15년 92개소에서 ’19년 103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15년 17,173가구에서 ’19년 19,789가구로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15년 18개소였는데, ’18년 기준 103개소로 대폭 늘었다.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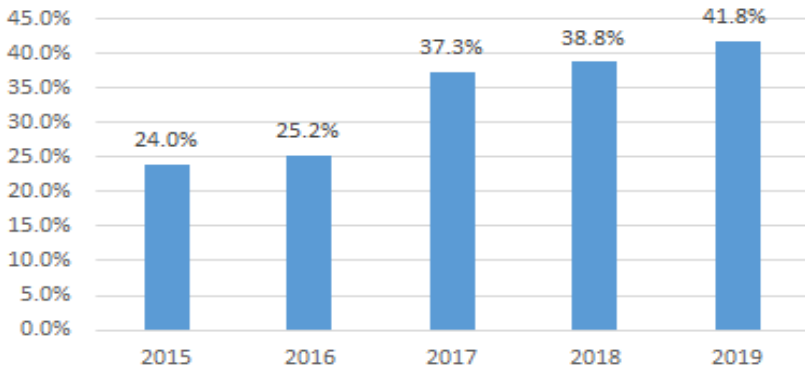
〈그림 2-18〉 전라북도 공공형 어린이집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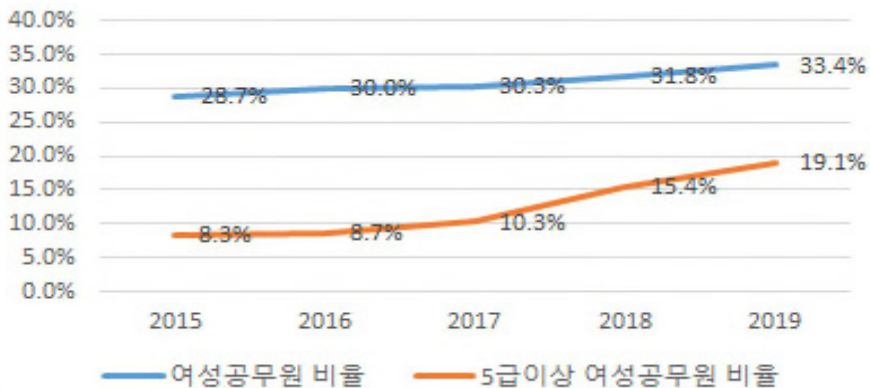
〈그림 2-19〉 전라북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세 번째 성과는 ‘여성대표성 제고 및 여성인재 발굴·확충을 통한 미래 여성인재 양성이다.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역대 최고치(41.8%)이며 여성공무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이 제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16년에는 25.2%였는데, '17년에는 37.3%, '18년에는 38.8%, '19년에는 41.8%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공무원 비율도 '16년에는 30.0%, '17년에는 30.3%, '18년에는 31.8%, '19년에는 33.4%로 증가하였다. 특히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16년에는 8.7%였는데, '17년 10.3%, '18년 15.4%, '19년에는 19.1%로 증가하였다.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그림 2-20〉 전라북도 위원회 여성참여율(도본청)



〈그림 2-21〉 전라북도 여성공무원 비율(도본청)

라. 전라북도 성평등 현황

여성가족부는 지역의 양성평등 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2011년부터 시·도별로 성평등 수준을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지역성평등지수는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역성평등지수는 국가성평등지수와 영역별, 정책분야별 분류체계와 지표 구성이 거의 같은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의사결정’분야에서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이 ‘지방자치단체위원회 비율’로 바뀌었다. 또한 2개 지표가 지역성평등지수 지표에서 삭제되었는데, ‘교육·직업훈련’분야에서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과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복지’분야에서 ‘비빈곤인구 비율’이다. 전라북도의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은 2014년 중하위권에서 2015년 중상위권, 2016년 상위권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으나 2017년부터 다시 한 계단씩 떨어지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중하위권 수준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표 2-44〉 전라북도 성평등지수 수준 변화(통계생산 연도기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위권					
중상위권					
중하위권					
하위권					

자료 : 2019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전북의 전년 대비 정책영역별 성평등 점수 및 순위를 비교한 결과,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점수는 높아졌으나 순위가 12위에서 13위로 하락하였고,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순위는 지속적으로 1순위이나 점수가 낮아졌으며 ‘성평등 의식·문화’는 점수와 순위 모두 떨어져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성평등 수준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5〉 정책영역별 성평등 점수 및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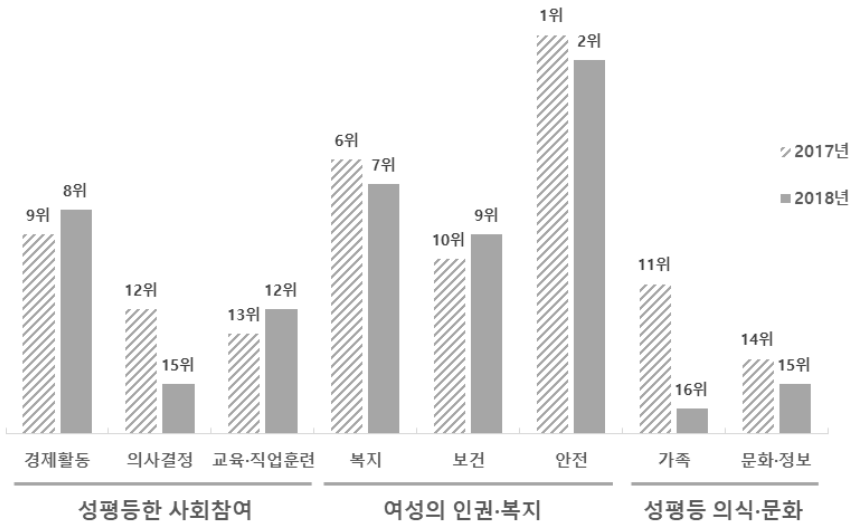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7년	64.7	12	91.2	1	71.5	14
2018년	65.5	13	89.0	1	69.7	16

주 : 각 연도는 통계생산연도 기준임

자료 : 2019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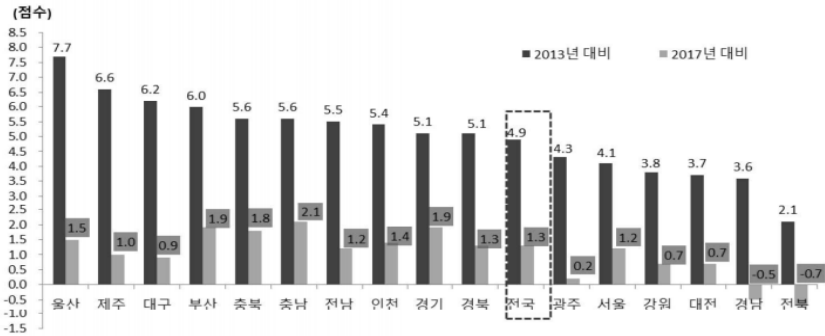
전년 대비 세부분야별 성평등 순위를 비교한 결과, 8개의 분야 중 5개 분야가 전년 대비 순위의 하락을 보였으며, 특히 ‘가족’ 분야의 경우 2017년 11위에서 2018년 16위로 4계단 하락하였다. ‘경제활동’ 분야는 2017년 9위(72.1점)에서 2018년 8위(73.6점)로 한 계단 상승했으며 이는 ‘경제활동 분야’의 구성지표 중 ‘성별 임금격차’가 2017년 12위에서 2018년 2위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의 경우 7위에서 12위로 하락하여 전북 내 성별 고용시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의사결정’ 분야는 2017년 12위에서 2018년 15위로 세 계단 하락하였다. 이는 ‘전라북도 관리자 비율의 성비’가 34.2점, 3위에서 20.0점, 14위로 크게 하락함에 따른 것이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17년 13위에서 2018년 12위로 한 계단 상승하였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구성지표의 점수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복지’ 분야는 앞선 세부분야보다 높은 순위를 보였으나 2017년 6위에서 2018년 7위로 한 계단 하락하였다. 구성지표 중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전체 2위로 높은 수준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16위로 최하위권이다. ‘보건’ 분야는 2017년 10위에서 2018년 9위로 한 계단 상승하였다. 구성지표 중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비’가 2017년 16위에서 2018년 14위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안전’ 분야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 2위로 한 단계 하락하였다.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와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격차’ 모두 상위권이나 작년 대비 1순위씩 하락하였다. ‘가족’ 분야는 2017년 대비 네 계단 하락하여 2018년 16위로 최하위권이다. ‘가족’ 분야를 구성하는 구성지표 전반의 점수가 좋지 않은 편이며 ‘가사노동 시간 성비’,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가 하위

권에 안착하였다. 특히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는 2017년 100점으로 완전 평
 등한 수준에서 2018년 14위로 크게 악화되었다. ‘육아휴직자 성비’도 전체
 16개 시·도 중 15위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 ‘문화·정보’ 분야의 경우 2017년 14위에서 2018
 년 15위로 한 계단 하락하였으며 ‘여가 시간 성비’와 ‘여가 만족도 성비’가
 2017년과 동일하게 각각 15위, 16위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5
 위에서 9위로 네 계단 하락하였으며 특히 ‘여가 만족도 성비’의 점수는 작년
 대비 약 5점이 감소하여 여가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 2-22〉 세부분야별 전라북도 성평등 순위

2013년과 2017년의 지역성평등지수를 비교했을 때 전북의 경우 각각
 3.1p, 0.5p로 개선도가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
 이 개선된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지난 5년간 총 7.7p의 상승 폭을 보여줘 전
 국 평균 4.9p 보다 높은 상승 수준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6.6p, 대구광역시
 6.2p, 충청남도 5.6p, 전남 5.5p 상승하였다. 2017년과 비교하면 충청남도
 1.6p, 인천광역시 1.4p 등 상대적으로 높은 개선이 나타났다.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그림 2-23〉 지역별 성평등 지수

2018년 지역성평등지수가 중하위권인 전라북도도 영역별로 볼 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상위권이며,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안전, 가족, 문화·정보 분야는 전년 대비 성평등이 하락했고 이외 분야는 성평등이 개선되었다.

〈표 2-46〉 전라북도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8년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으로 하락함. - 경제활동 분야는 2018년 중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재진입함. 구성지표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개선되어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개선을 견인함.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전년 대비 2.0p 하락하여 중하위권으로 떨어짐. 고용시장에 대한 성별 분석과 정책을 점검하며, 더불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현행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의사결정 분야는 2018년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낮아짐. 구성지표 중 자자체위원회 위원 성비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개선되었지만 관리자 비율 성비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함에 따라 개선정도가 미미하게 나타남. 관리자 비율 성비 하락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함.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5년 이래 상위권 유지 - 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성평등이 악화되지만 중상위권을 유지함. 성비 하락 원인은 기초 생활수급자 성비의 악화에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가 심화된 원인을 파악하고 빈곤 여성 정책 개발과 점검 필요함. - 보건 분야는 중하위권을 유지.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성평등 수준의 차이는 크지 않음. 기존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안전 분야는 성평등 개선이 매우 높은 분야이지만, 전년 대비 성비 악화로 2위로 한 단계 하락함. 악화 원인은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격차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모두가 나빠졌기 때문임. 기존 안전정책을 재점검하고 안전한 전복의 이미지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7년 이래 하위권에 위치 - 가족 분야는 성평등이 점차 악화하여 하위권 추락함. 하락 원인은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와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악화 때문이며 여기에 육아휴직자 성비의 개선이 다른 시도에 비해 너무 낮았기 때문임. 향후 가족 분야 개선은 성평등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 홍보 강화, 남성 육아휴직 참여 방안에 대한 점검과 정책들이 투입되어야 할 것임. - 문화·정보 분야는 하위권에 위치함. 인터넷 이용률 성비와 여가관련 지표의 성비가 모두 악화되어 이 분야 성비 하락을 가져옴. 여가문화 개선 정책과 여가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과 관리 필요함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마. 타 지자체 여성정책 비전 관련 연구 검토

부산, 충남, 경북, 경기도는 지자체 특성에 맞춘 성평등 여성정책 연구를 수행하여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중장기적 여성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계획 혹은 성평등지수 정책 영역별 현황분석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여성정책 현황을 평가, 분석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특정 부서를 넘어 도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제언하였다. 광역지자체별 양성평등 비전 제시 및 성평등 목표 수립을 위한 문헌들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47〉 지역의 양성평등 비전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경기도 성평등 목표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도가족 여성연구원, 2019)	경기도는 ‘도정의 실질적 성주류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성주류화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성평등 목표 수립이 강조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정책 환경을 분석하여 경기도 성주류화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의 성평등 목표를 제안하고 실·국 단위의 성평등 실행 목표를 제안하고자 함	- 대전광역시 사례 조사를 통하여 성평등 목표 수립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 - 제 1차 경기도 양성평등기본계획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정책 현황 분석 -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분석을 통하여 실·국 단위의 세부 실행목표 제안	- 조사방법 : 전문가 자문회의 - 조사내용 : ‘성평등한 공동체’, ‘고용격차 해소’, ‘일·생활 균형’, ‘여성안전 보장’ 4대 영역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6회 실시
경상북도 양성평등 비전 2030 (경북여성정책 개발원, 2018)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북의 여성이 나아가야할 미래의 비전을 모색하고 실질적 관점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경북의 핵심 과제 및 정책을 연구하여 제안하고자 함	- 인구 특성 및 인구 구조를 통한 충청북도의 결혼·출산 여건 분석 - 충청북도의 출산장려 정책 및 상위 정책과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 충청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저출산 인식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조사방법 :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 조사대상 : 〈설문조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20~50대 남녀 경북도민 600명 〈심층면접조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20~50대 남녀 경북도민 30명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부산 여성 비전 2030 (부산여성가족 개발원, 2015)	부산시는 부산시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적 시정 계획인 '부산발전 2030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 이러한 '부산발전 2030 비전과 전략'과 연계하여 부산 여성의 상황에 맞는 핵심이슈 중심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부산 여성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고 부산 여성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함	• STEEP 기법, 국내외에서 표방하는 여성 미래비전 및 전략을 다각도로 분석 • 부산의 정확한 현실 진단을 위하여 현재 부산의 여성가족 관련 여건과 현황을 분석 • 부산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부산 여성에 대한 여론 분석 및 다양한 의견 도출	• 조사방법 :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 조사대상 : <설문조사> 부산지역 내 20세 이상 시민 950명 <전문가 의견조사> 여성활동가, 여성가족유관기관, 시의원, 연구자, 공무원, 언론 등 50명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충청남도, 2016)	충남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비전으로 현재 충남의 성평등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 충남의 지역 성평등 수준 및 각 영역별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분야별 미래 전망과 과제를 도출 • 전문가 및 도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도민의 정책 욕구와 충남의 양성평등 미래상에 대하여 제시 •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의 양성평등 비전을 위한 영역별 핵심가치와 목표, 추진과제 제시	• 조사방법 : 전문가 및 도민 의견수렴 • 조사대상 : <전문가 의견수렴> 비전위원회 자문, 전문가위원회 자문 <도민 의견조사> 연령별 집담회, 시군토론회, 도민원탁회의, 전문가 집담회

경기도(2018) 연구는 실·국 단위의 실질적인 성평등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성주류화뿐 아니라 정책 실행의 효과성도 제고할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평가, 분석하고 ‘성평등한 공동체’, ‘고용격차 해소’, ‘일·생활 균형’, ‘여성안전 보장’ 등 4대 영역별 심도 있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실·국 성평등 실행목표 수립에 앞서 2019년 21개 본청 및 의회사무처 성인지예산 185개 사업에 대한 성평등 목표 연계성 분석을 한 결과 성평등한 공동체 구현이 29.7%로 가장 높았고, 고용격차 해소 24.2%, 여성안전 보장 20.3%, 일·생활균형 7.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인지 대상 사업 분석은 자칫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는 성평등 목표를 다양한 부서에서 보다 실질적인 당면 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적 접근으로 전북 여성정책 비전 수립 연구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상북도 양성평등 비전 2030(2018)은 장기비전 수립을 통해 미래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나 간다는 의미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경북의 낮은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리는 대응 전략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경북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를 병행했고, ‘일·삶·쉼이 조화로운 양성평등 경북’을 비전 제시하고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성숙한 양성평등 공동체라는 4개 목표를 설정하였다. 경북 양성평등 비전 수립 연구과정에서 시사하는 바는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al, Ecological, Political/Legal) 분석으로 여성정책과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트렌드에 대한 거시분석을 현황분석과 연계한 점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영역별 미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고, 비전과 전략, 사업과제들이 도출될 수 있었다.

부산 여성비전 2030 연구(2015)는 지자체 여성 비전수립 관련 연구로 일찍이 수행되었다. 2030의 거시 환경 변화와 트렌드에 대한 STEEP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여성이슈로 정리하였다. 부산시 연구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성평등지수를 정책 분석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면서 인구

변화, 고용, 출산과 보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시민 대상 조사는 ‘도시정책 수요조사’로 진행되어 시민이 바라는 미래 발전상의 맥락에서 여성정책 수요와 정책과제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가 의견조사 과정에서는 시민활동가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정책요구를 수렴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있었다.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2016) 연구는 복지, 건강, 젠더폭력, 경제 등 기존 여성정책의 영역에 ‘환경과 농업’, 특별분야(이주여성, 청소년, 장애여성) 범주를 설정하여 현황 분석을 하였다. 현황분석과 함께 미래 전망과 과제의 영역별 분석을 토대로 비전과 주요 과제가 도출되었다. 2016년 당시 도정계획과 민선 공약 내용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강화’, ‘성평등 확산’ 관련 과제들을 포착하여 비전체계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비전수립과 과제 도출 과정에서 충남은 일반 시민부터 도지사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착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보여주었다. ‘비전수립위원회’, ‘전문가위원회’, ‘도민원탁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설문조사보다 분석하는 데 실질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10대 추진전략 도출 과정에서 대표과제를 선정한다든지, 대표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타운홀미팅 형식을 빌려 100명의 시민의견이 반영된 과제가 선정될 수 있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양성평등 비전수립 과정이 도정 계획과 핵심 목표와 연계되고 그 내용 속에서 ‘성평등 이슈’를 찾아내는 부단한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타부서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내는 과정 또한 어렵지만 중요한 과제이다.

3

장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Jeonbuk Institute

-
1. 도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
 2. 여성가족정책 영역별 전문가 FGI
 3. 요약 및 시사

제 3 장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1. 도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

가. 조사 개요

본 조사의 목적은 2030 전라북도 여성·가족 비전 수립을 위하여 전라북도 여성·가족 정책 전반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를 활용했으며, 조사기간은 2020년 9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다.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내용은 여성일자리, 일·생활균형, 자녀 돌봄, 여성폭력, 안전, 건강, 노후 등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인식 등 종합 실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전부를 위한 여성·가족 비전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는 총 601명이며, 성별로는 남성이 41.60%, 여성이 58.40%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보면 시거주자가 66.72%, 군거주자가 33.28%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46.8세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23.7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50세~59세 이하가 23.13%, 30세~39세 이하가 20.47%, 40세~49세 이하가 18.47%, 18세~29세 이하가 14.1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32.78%로 가장 많고, 대졸 31.61%, 전문대졸 21.13%, 중졸하가 8.82%, 대학원졸 5.49%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를 보면 기혼이며 유배우자가 67.5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미혼 24.96%, 이혼, 사별 등 기혼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7.49%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직종을 보면 사무/관리/영업직 36.45%, 농/임/어업 12.37%, 자영업 10.54%, 판매/영업/서비스직 9.70%, 생산/기능/노무직 9.03%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이 없는 주부 8.36%, 학생 7.02%, 무직/퇴직/기타가 6.52%로 나타났다. 기혼 가족의 경우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가족 유형을 조사한 결과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44.76%로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경우 22.13%에 비해 더 많았다.

월평균 가구 총소득을 보면 300만원 미만이 48.08%로 가장 많았고, 300~500만원 21.63%, 500만원 이상 16.31%, 모름/무응답으로 응답한 사람이 13.98%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를 조사한 결과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9.22%,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 30.2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거가족의 수는 평균 1.98명으로 나타났는데, 혼자 사는 경우가 전체의 15.8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동거가족 1명은 20.30%, 2명 25.29%, 3명 25.62%, 4명 8.82%, 5명 1.66%, 6명 0.5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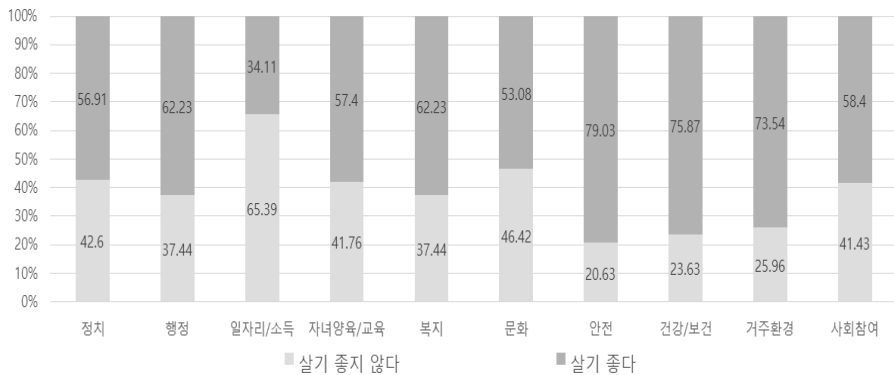
〈표 3-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50	41.6	직업 종류	농/임/어업	74	12.37
	여성	351	58.4		자영업	63	10.54
지역	시	401	66.72		임금근로자	330	55.18
	군	200	33.28		주부	50	8.36
연령	18세~29세 이하	85	14.14		학생	42	7.02
	30세~39세 이하	123	20.47		무직/퇴직/기타	39	6.52
	40세~49세 이하	111	18.47	맞벌이 유형	유	269	44.76
	50세~59세 이하	139	23.13		무	133	22.13
	60세 이상	143	23.79		비해당	195	32.45
	평균	46.80	(14.2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89	48.08
교육 수준	고졸 이하	250	41.6		300~500만원 미만	130	21.63
	대졸	317	52.74		500만원 이상	98	16.31
	대학원졸	33	5.49	자녀 유무	유	416	69.22
혼인 상태	기혼유배우	406	67.55		무	181	30.22
	기혼무배우	45	7.49	동거 가족	없음(1인 가구)	95	15.81
	미혼	150	24.96		있음	494	82.19
					평균	1.98	(1.31)

나. 전라북도 지역 현황에 대한 인식

전라북도가 얼마나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지 전라북도의 정주 여건을 살펴본 결과, 일자리/소득 분야를 제외하고 전 영역에서 정주 여건이 좋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안전(79.03%), 건강/보건(75.87%), 거주환경(73.54%)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살기 좋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자리/소득은 65.39%가 살기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림 3-1〉 전북 정주 여건

전북 정주 여건에 대한 성별 차이를 보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살기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중 행정, 자녀양육/교육, 복지, 건강/보건 영역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분야는 남성의 67.07% 여성의 59.14%가 살기 좋다고 응답하였고, 자녀양육/교육은 남성은 63.41%, 여성은 54.00%가 살기 좋다고 응답하였다. 복지는 남성이 67.07%, 여성이 59.14%, 건강/보건은 남성의 80.32%, 여성의 73.35%가 살기 좋다고 응답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 성별 전복 정주 여건에 대한 인식 차이

(단위: 명, %)

구분		성별		
		남성	여성	χ^2
정치	살기 좋지 않다	104(41.77)	152(43.55)	0.19
	살기 좋다	145(58.23)	197(56.45)	
행정	살기 좋지 않다	82(32.93)	143(40.86)	3.90*
	살기 좋다	167(67.07)	207(59.14)	
일자리/소득	살기 좋지 않다	156(62.90)	237(67.71)	1.49
	살기 좋다	92(37.10)	113(32.29)	
자녀양육/교육	살기 좋지 않다	90(36.59)	161(46.00)	5.25*
	살기 좋다	156(63.41)	189(54.00)	
복지	살기 좋지 않다	82(32.93)	143(40.86)	3.90*
	살기 좋다	167(67.07)	207(59.14)	
문화	살기 좋지 않다	105(42.51)	174(49.57)	2.91
	살기 좋다	142(57.49)	177(50.43)	
안전	살기 좋지 않다	51(20.48)	73(20.86)	0.01
	살기 좋다	198(79.52)	277(79.14)	
건강/보건	살기 좋지 않다	49(19.68)	93(26.65)	3.90*
	살기 좋다	200(80.32)	256(73.35)	
거주환경	살기 좋지 않다	62(24.90)	94(26.93)	0.31
	살기 좋다	187(75.10)	255(73.07)	
사회참여	살기 좋지 않다	99(39.76)	150(42.74)	0.53
	살기 좋다	150(60.24)	201(57.26)	

여성·가족 정책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가 여성과 가족에게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조사한 결과, 일·생활균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4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차별 없는 양성평등의식과 문화 확산이 25.12%, 일자리에서의 남녀평등이 19.6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 정치·경제·사회분야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 확대가 11.15%, 취약여성(결혼이주,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장애 등) 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7.65%, 가족 내 양성평등과 민주적 문화 확산 4.49%,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예방)이 3.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여성과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 중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일자리에서의 남녀평등	118	19.63
차별 없는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151	25.12
정치·경제·사회분야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 확대	67	11.15
일·생활 균형	165	27.45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예방)	19	3.16
취약여성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결혼이주, 1인가구, 한부모가족, 장애 등)	46	7.65
가족 내 양성평등과 민주적 문화 확산	27	4.49
무응답	8	1.33

여성·가족 정책 지원이 가장 필요한 대상과 가족유형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정책 지원 대상의 경우 청년여성이 24.6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여성 24.13%이었다. 청년과 아동·청소년 여성 간의 격차가 크지 않고, 응답 비중이 높아 응답자의 다수가 청년 이하의 여성에 대한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뒤를 이어 경력단절여성 12.81%, 자녀양육여성 10.65%, 중고령여성 7.49%, 임신출산여성 6.16%, 농어촌여성 4.33%, 독거노인여성 3.99%, 귀농·귀촌여성이 2.83%, 장애여성이 2.50%, 결혼이주여성이 0.50%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가족 정책 지원이 가장 필요한 가족유형은 맞벌이가족이 35.61%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한부모가족 13.98%, 노인부부가족 12.65%, 한부모가족 8.65%, 조손가족 6.66%, 독거노인가구 4.33%, 비혼 1인가구 4.16%, 귀농·귀촌가구 3.83%, 농어촌가구 3.49%, 장애인가족 2.66%, 다문화가족 2.33%, 재혼가족 1.33%, 기타 0.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족에 대한 지원이 취약 및 소외계층으로 알려진 가구에 대한 지원보다 앞섰는데 이는 그만큼 일생활균형에 대한 도민들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4〉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대상 및 가족유형

(단위: 명, %)

대상	빈도	비율	가족 유형	빈도	비율
아동·청소년여성	145	24.13	맞벌이가족	214	35.61
청년여성	148	24.63	노인부부가족	76	12.65
임신출산기여성	37	6.16	한부모가족	52	8.65
자녀양육기여성	64	10.65	청소년한부모가족	84	13.98
경력단절여성	77	12.81	조손가족	40	6.66
중고령여성	45	7.49	다문화가족	14	2.33
농어촌여성	26	4.33	재혼가족	8	1.33
귀농·귀촌여성	17	2.83	비혼 1인가구	25	4.16
결혼이주여성	3	0.50	독거노인가구	26	4.33
장애여성	15	2.50	귀농·귀촌가구	23	3.83
독거노인여성	24	3.99	농어촌가구	21	3.49
			장애인가족	16	2.66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조사하기 위하여 취업, 창업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2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구직상담,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강화’,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확대’, ‘지역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유연근무제(시차근무제, 재택근무 등) 확대, 공공보육시설 확대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강화와 같은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직접 서비스에 대한 요구 외에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확대’, 유연근무제(시차근무제, 재택근무 등) 확대,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요구도 많아 일생활균형을 위한 제도마련 요구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 정책으로는 직접적인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 활성화나 유연근무제 확대 등 경제활동 분야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3-5〉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점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174	71	209.5
구직상담,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 강화	94	132	160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확대	108	48	132
공공보육시설 확대	45	72	81
유연근무제(시차 근무제, 재택근무 등) 확대	49	72	85
창업지원(공간, 자금, 컨설팅 등)	20	38	39
노인 간병 및 돌봄지원 서비스 제공	31	37	49.5
지역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65	90	110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개선	14	38	33

여성이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할 때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는지 구직 활동에서 느끼는 여성 취업의 장애물에 대해 우선순위 2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원하는 형태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장애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일자리 자체가 없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다’,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 순으로 구직활동에서 장애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응답 결과는 주로 기술, 능력이나 자신감 등 개인적 한계보다는 여성일자리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장애로 인식하고 있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구직활동 시 어려움

(단위: 명)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점수
일자리 자체가 없다	152	69	186.5
원하는 형태의 일자리가 없다	146	117	204.5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다	99	88	143
임금수준이 너무 낮다	66	93	112.5
기술, 기능, 경력이 부족하다	50	47	73.5
사회적응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11	42	32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12	14	19
취업정보가 부족하다	10	76	48
가사·양육·돌봄의 책임으로 시간이 없다	55	55	82.5

다음으로 일·생활균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의무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가정 내 자녀 돌봄을 위한 근로 조건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표 3-7〉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명)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점수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의무화	180	73	216.5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	165	119	224.5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91	94	138
장시간 노동환경 개선	56	95	103.5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강화	46	98	95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인식의 확산	60	118	119

여성이 조직 내에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리더십 교육’과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에 대한 요구, ‘여성관리자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여성이 조직 내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명)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점수
관리자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교육	152	86	195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지원	114	74	15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118	111	173.5
여성이 출산, 육아로 경력단절 되지 않도록 일·가정양립지원 강화	149	135	216.5
부서배치, 승진, 근무성적평가 등에서 차별 해소	41	98	90
기업 내 여성위원회 등 양성평등 촉진기구 설치·운영	19	50	44
여성임원 비율 확대	7	43	28.5

다음으로 여성이 정치분야에서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회비례대표 수 증가를 통한 여성의원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여성정치 후보자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구 선출직 의원의 30% 여성 후보 할당의 법적 의무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자 공천확대’ 등 지역사회 안에서 여성 정치인 진출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표 3-9〉 여성의 정치적 의사결정권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

(단위: 명)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점수
국회 비례대표 수 증가를 통한 여성의원 확대	176	108	230
지역구 선출직 의원의 30% 여성 후보할당을 법적으로 의무화	126	89	170.5
여성의원후보자 다수 추천 정당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확대	79	53	105.5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자 공천 확대	82	170	167
여성정치 후보자 발굴 및 육성	134	160	214

자녀돌봄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2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자녀를 함께 돌보는 육아공동체 활성화’, ‘방과 후 교실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돌봄 관련 추진 사업의 우선순위는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시설의 확충’이나,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확대’였으나,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자녀를 함께 돌보는 육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표 3-10〉 자녀돌봄 관련 추진 사업에 대한 요구

(단위: 명, %)

	1 순위	2 순위	우선순위 점수	성별		
				남성	여성	χ^2
보육시설의 확충	166	65	198.5	77 (31.17)	89 (25.50)	14.5*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117	101	167.5	44 (17.81)	73 (20.92)	
방과 후 교실 활성화	86	63	117.5	36 (14.57)	50 (14.33)	
자녀를 함께 돌보는 육아공동체 활성화	84	130	149	28 (11.74)	55 (15.76)	
놀이, 문화, 체험학습 공간 확충	72	73	108.5	38 (15.38)	34 (9.74)	
학부모 교육 및 정보교류 기회제공	15	56	43	8 (3.24)	7 (2.01)	
돌봄에 대한 남녀 모두의 책임강화	49	91	94.5	12 (4.86)	37 (10.60)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7	17	15.5	3 (1.21)	4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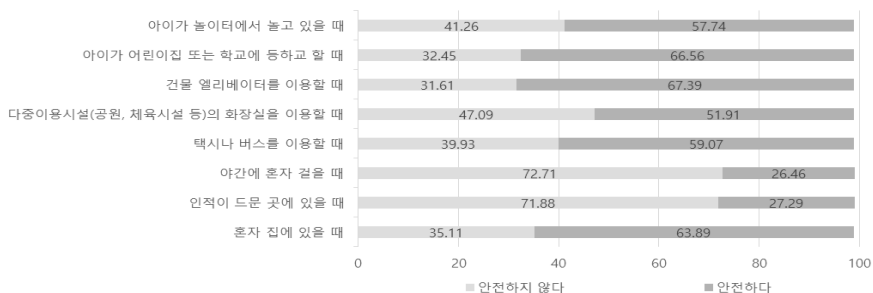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폭력발생시 신속대응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자 및 재범자 처벌 단속 강화’,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처벌 및 단속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폭력발생시 신속대응시스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가 개선’에 대해서는 일치했으나, 남성은 여성보다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처벌 및 단속강화’를 중요하게 보고, 여성은 남성보다 ‘가해자 및 재범자 처벌단속강화’를 중요하게 보았다. 이러한 응답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 = 13.95$, $p < .01$).

〈표 3-11〉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1 순위	2 순위	우선순위 점수	성별		
				남성	여성	χ^2
폭력발생시 신속대응시스템 개선	203	76	241	93 (37.65)	110 (31.34)	13.9*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143	143	214.5	53 (21.46)	90 (25.64)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처벌 및 단속강화	75	57	103.5	35 (14.17)	40 (11.40)	
가해자 및 재범자 처벌 단속 강화	109	161	189.5	33 (13.36)	76 (21.65)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	29	78	68	15 (6.07)	14 (3.99)	
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9	52	55	11 (4.45)	18 (5.13)	
직장 내 성희롱 방지	10	30	25	7 (2.83)	3 (0.85)	

전북의 지역사회가 여성과 아동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전한지 조사한 결과, 도민들은 대체로 전북을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집에 있을 때(63.89%), 택시나 버스를 이용할 때(59.07%), 건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67.39%), 아이가 어린이집 또는 학교에 등하교할 때(66.56%), 아이가 놀이터에 놀고 있을 때(57.74%) 모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을 이용할 때(51.91%)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야간에 혼자 걸을 때(72.71%)와 인적이 드문 곳에 있을 때(71.88%)에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3-2〉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 정도

〈표 3-12〉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 정도

(단위: 명, %)

구분		지역별		
		시	군	χ^2
혼자 집에 있을 때	안전하지 않다	122(30.81)	89(44.72)	11.21**
	안전하다	274(69.19)	110(55.28)	
인적이 드문 곳에 있을 때	안전하지 않다	273(68.77)	159(79.90)	8.24**
	안전하다	124(31.23)	40(20.10)	
야간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지 않다	282(71.03)	155(77.89)	3.19
	안전하다	115(28.97)	44(22.11)	
택시나 버스를 이용할 때	안전하지 않다	151(38.13)	89(44.72)	2.39
	안전하다	245(61.87)	110(55.28)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을 이용할 때	안전하지 않다	169(42.57)	114(57.58)	11.92**
	안전하다	228(57.43)	84(42.42)	
건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안전하지 않다	118(29.80)	72(36.18)	2.48
	안전하다	278(70.20)	127(63.82)	
아이가 어린이집/ 학교에 등하교할 때	안전하지 않다	110(27.78)	85(42.71)	13.41***
	안전하다	286(72.22)	114(57.29)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안전하지 않다	140(35.35)	108(54.27)	49.50***
	안전하다	256(64.65)	91(45.73)	

전북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었으나, 지역별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집에 있을 때에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시 지역에서는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중(69.19%)이 군 지역(55.28%)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chi^2 = 11.21$, $p < .05$). 인적이 드문 곳에서의 안전하다는 응답은 시 지역 31.23%, 군 지역 20.10%로 나타났다($\chi^2 = 8.24$, $p < .05$). 다중이용시설에 있을 때는 시 지역은 안전하다(57.43%)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군지역은 안전하다(42.42%)고 응답한 경우가 낮았다($\chi^2 = 11.92$, $p < .05$). 아이가 어린이집/학교에 등하교 할 때는 시 지역은 72.22%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반면, 군 지역은 57.29%만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다($\chi^2 = 13.41$, $p < .001$).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에는 시 지역은 안전하다가 64.65%였으나, 군 지역은 45.73%로 차이가 있었다($\chi^2 = 49.50$, $p < .001$).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공공의료지원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는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지원’이 뒤를 이었다. 뒤이어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 및 상담’, ‘성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한 건강 연구 및 정보제공(온·오프라인)’에 대한 정책 요구가 있었다.

〈표 3-13〉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점수
성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한 건강 연구 및 정보제공	97	65	129.5
공공의료지원 확대	174	108	228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 및 상담	94	99	143.5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 지원	127	100	177
전 생애주기 여성건강 관리	68	114	125
여성친화적인 의료체계의 구축	32	85	74.5
건강자조모임(건강관련정보교환 상부상조를 위한 자발적 모임) 활성화 지원	7	28	21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소득보장’에 대한 정책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보장’,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보장과 일자리, 의료보장에 대한 요구는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년기가 길어진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응답자의 다수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유지하고 길어진 노후를 건강하게 영위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정책에 대해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보다 군 지역에서 소득보장,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농촌을 중심으로 군지역의 요구는 소득, 일자리, 의료에 거의 쏠려 있었음.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풍요로움에 대한 욕구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들의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표 3-14〉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점수	지역별		
				시	군	χ^2
소득보장	237	108	291	137 (34.25)	100 (50.00)	32.24***
의료보장	152	134	219	113 (28.25)	39 (19.50)	
주거보장	53	106	106	44 (11.00)	9 (4.50)	
일자리	101	125	163.5	59 (14.75)	42 (21.00)	
사회참여	34	51	59.5	27 (6.75)	7 (3.50)	
돌봄 확대	14	45	36.5	13 (3.25)	1 (0.50)	
사회네트워크 (이웃관계망지원)	8	31	23.5	7 (1.75)	1 (0.50)	

2030년까지 아동들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과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한 지원 확대’가 가장 높았고, ‘학교·교통·범죄·식품 등 아동안전에 대한 체계구축 강화’, ‘취약아동(빈곤·장애·이주·나홀로 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아동의 참여권 및 놀 권리(놀이정책) 보장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아동에 대한 정책 요구를 보면 안전과 취약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아동 권리 등 공동체 가치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3-15〉 전라북도 아동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점수
아동의 신체 정신적 건강과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한 지원 확대	207	66	240
아동의 참여권 및 놀권리(놀이정책) 보장 확대(소프트웨어차원)	74	78	113
학교·교통·범죄·식품 등 아동안전에 대한 체계구축 강화	112	78	151
취약아동(빈곤·장애·이주·나홀로 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80	88	124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조성 확대	31	56	59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점수
부모교육강화와 가정양육 기반 조성 마련	34	63	65.5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정책 확대	30	102	81
아동의 문화여가 체험 등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확충(하드웨어차원)	30	66	63

다음으로 2030년까지 전라북도의 청소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성폭력 등의 폭력과 범죄피해의 예방과 보호정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의 참여활동 및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 확대’, ‘소외·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원격수업 및 가정 내 교육시간 증대로 인한 교육편차에 대한 대책마련’ 순으로 정책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요구도 마찬가지로 폭력으로부터의 피해 예방과 보호, 청소년 권리증진, 소외·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코로나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등 안전과 공동체 가치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표 3-16〉 전라북도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점수
학교폭력·성폭력 등의 폭력과 범죄피해의 예방과 보호정책	203	50	228
전북지역 청소년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 구축	66	51	91.5
청소년의 참여활동 및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 확대	118	87	161.5
소외·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63	101	113.5
코로나19로 원격수업 및 가정 내 교육시간 증대로 인한 교육편차 심화에 대한 대책마련	62	71	97.5
대인관계문제나 스트레스, 코로나블루 등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지원의 확대	28	84	70
시군별 청소년이용시설의 지역격차 해소	19	73	55.5
청소년의 문화·여가활동 및 진로·직업체험 활동증진을 위한 정책 확대	39	83	80.5

전라북도의 가족 내 성평등 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가족에서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가사, 아이돌봄, 노인돌봄이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양육과 가사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 '양성평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식개선'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에 많은 응답자가 동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도민의 인식 전환과 실질적인 남성의 가사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가족 내 성평등 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시보다 군 지역에서 '가사, 아이돌봄, 노인돌봄이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높은 반면, 양성평등 인식개선이나 가사에 남성의 적극 참여, 가족 문제에서의 의사결정권 증대 등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아직까지 농촌지역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도민의 인식 전환과 실질적인 남성의 가사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표 3-17〉 가족 내에서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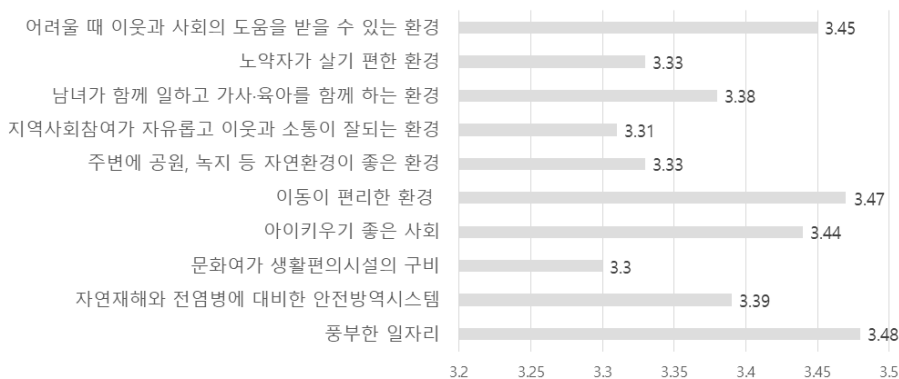
(단위: 명)

	1 순위	2 순위	우선순위 점수	지역별		
				시	군	χ^2
가사, 아이돌봄, 노인돌봄이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	156	81	196.5	96 (24.00)	60 (30.00)	17.87*
양성평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식개선	114	79	153.5	79 (19.75)	35 (17.50)	
양육과 가사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	116	96	164	81 (20.25)	35 (17.50)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부족하다는 인식의 변화	62	65	94.5	47 (11.75)	15 (7.50)	
실질적으로 여성이 가계를 부양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	58	70	93	36 (11.75)	22 (11.00)	
실질적으로 여성이 직업경력을 유지할 수 없는 현실	31	64	63	14 (3.50)	17 (8.50)	
중요한 가족문제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 증대	16	47	39.5	14 (3.50)	2 (1.00)	
시가와 며느리 간의 수직적 관계의 변화	13	22	24	7 (1.75)	6 (3.00)	
부부 상호간의 존중감 증대	33	72	69	25 (6.25)	8 (4.00)	

다. 미래 전라북도 여성가족 비전에 대한 인식

미래 전라북도의 여성·가족 비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상적인 지역사회의 조건, 차세대 리더 양성분야, 10년 후 희망하는 전북의 미래상, 여성이 살기 좋은 농어촌의 요건, 미래 전라북도의 당면 위험, 미래 산업 분야에서 여성 참여 증진을 위한 요건, 이상적인 노후 돌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북 도민에게 이상적인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중요한지 10개 영역에 대해 4점 척도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영역에 대해 3.3점 이상으로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중 풍부한 일자리와 이동이 편리한 환경,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과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가 3.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 이상적인 지역사회 조건의 중요도

전라북도에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경제가 28.12%로 가장 중요한 분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교육이 23.13%, 복지 13.81%, 환경 9.32%, 문화예술 8.65%, 과학기술 7.15%, 정치 6.66%, 인권 3.00%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경제와 교육 분야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앞선 이상적인 지역사회 조건에 대한 일자리, 아동양육 등의 환경조성을

강조한 응답과도 상통하는 결과이다. 즉, 응답자의 다수가 전라북도에 경제/교육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이끌기 위한 차세대 리더의 양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남성은 경제, 교육, 복지, 문화예술, 정치 등의 순으로 차세대 리더 양성이 필요한 분야로 꼽았으며, 여성은 경제, 교육, 복지, 환경, 과학기술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차이가 있었다($\chi^2 = 15.73$, $p < .01$).

〈표 3-18〉 차세대리더 양성이 중요한 분야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여성	χ^2
정치	40	6.66	22(8.80)	18(5.13)	15.73*
경제	169	28.12	80(32.00)	89(25.36)	
문화예술	52	8.65	26(10.40)	26(7.41)	
교육	139	23.13	52(20.80)	87(24.79)	
복지	83	13.81	29(11.60)	54(15.38)	
인권	18	3.00	6(2.40)	12(3.42)	
환경	56	9.32	23(9.20)	33(9.40)	
과학기술	43	7.15	11(4.40)	32(9.12)	

10년 후 전라북도를 떠올렸을 때 희망하는 미래상을 어떤 단어를 통해 그려낼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라북도의 희망하는 미래상의 가치로 ‘풍요로움’ 가장 높았고, ‘안전’, ‘인권/존엄’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 지역은 ‘안전’, ‘풍요로움’, ‘인권/존엄’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한 반면, 군 지역은 ‘풍요로움’, ‘인권/존엄’, ‘안전’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차이가 있었다($\chi^2 = 26.89$, $p < .05$).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3-19〉 전라북도의 희망하는 미래상

(단위: 명, %)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점수	지역별		
				시	군	χ^2
소통	66	54	93	49(12.34)	17(8.54)	26.89**
풍요로움	154	73	190.5	83(20.91)	71(35.68)	
인권/존엄	104	50	129	74(18.64)	30(15.08)	
안전	118	105	170.5	90(22.67)	28(14.07)	
다양성	26	44	48	18(4.53)	8(4.02)	
사회적 돌봄	21	37	39.5	14(3.53)	7(3.52)	
연대/통합	9	15	16.5	8(2.02)	1(0.50)	
신뢰	19	31	34.5	13(3.27)	6(3.02)	
형평성	13	26	26	10(2.52)	3(1.51)	
조화/균형	28	76	66	15(3.78)	13(6.53)	
성평등	6	17	14.5	5(1.26)	1(0.50)	
공동체	11	19	20.5	5(1.26)	6(3.02)	
생태적 환경	21	44	43	13(3.27)	8(4.02)	

여성이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일자리 및 소득’이 가장 높았고, ‘의료 및 교통접근권 강화’, ‘사회적 안전망(범죄로부터의 안전 등)’,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타파(성평등 문화 확산)’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및 소득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응답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의 소득과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일지라도 농업이나 어업 외에 자유롭게 자신의 관심이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며 최근 농어업의 경우 자연재해나 산지 가격폭락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의 창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안정적인고, 다양한 소득원을 갖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타파 - 성평등 문화 확산 역시 많은 응답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이는 현재 농어촌 지역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순돌 외(2018)의 연구에서도 농촌지역의 심각한 가부장적인 문화와 수동적인 여성노인의 어려움을 제시한 결과와 상통한다.

〈표 3-20〉 여성이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단위: 명)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점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타파-성평등 문화 확산	129	58	158
사회적 안전망(범죄로부터의 안전 등)	111	98	160
의료 및 교통접근권 강화	124	93	170.5
일자리 및 소득	161	160	241
문화 및 여가생활 향상	51	88	95
인터넷 등 정보화기기 접근 용이성 향상	6	37	24.5
생활편의시설(상점, 세탁소, 체육관, 은행 등)확충	9	44	31
마을의 공동체성 증진	8	20	18

머지않은 미래에 전라북도가 당면할 가장 심각한 위협을 확인한 결과, ‘인구 감소’가 가장 높았고, ‘저출산/고령화’, ‘환경오염/기후변화’, ‘지방소멸’, ‘일자리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구감소,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일자리의 문제는 주로 현재 농어촌 지역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회문제이다. 전라북도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등 새로운 젊은 인구를 끌어들이거나 유출을 막을 수 없는 유인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호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 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환경오염/기후변화’ 순으로 당면 과제를 선정한 반면, 군 지역은 ‘인구감소’, ‘환경오염/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의 순으로 당면 과제를 인식하고 있어, 지역별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chi^2 = 16.29$, $p < .01$).

〈표 3-21〉 미래 전라북도의 당면 과제

(단위: 명)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점수
환경오염/기후변화	96	64	128
인구감소	261	106	314
지방소멸	71	98	120
일자리부족	52	135	119.5
저출산/고령화	88	110	143
전염병	7	13	13.5
사회양극화(빈부격차/도시농촌격차)	17	55	44.5
에너지 부족	2	5	4.5
세대갈등/성별갈등	4	13	10.5

미래 산업 분야에서 여성 참여 증진을 위하여 탄소산업, 재생에너지, 미래형 수소기계산업(상용차 산업), 첨단 농업 등의 발전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 스스로의 역량강화 노력’이 가장 높았으며, ‘미래산업 관련 직업 훈련 강화’, ‘여성인력에 대한 성 고정관념의 변화’, ‘관련 기업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 ‘이공계여성의 역량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 미래 산업 분야의 여성 참여 증진 방안

(단위: 명)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점수
이공계여성의 역량강화	87	64	119
여성인력에 대한 성 고정관념의 변화	114	72	150
여성 스스로의 역량강화 노력	132	62	163
관련 기업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	88	99	137.5
미래산업 관련 직업훈련 강화	104	104	156
미래산업에 여성참여를 장려하는 지역여론의 형성	30	88	74
미래산업에 대한 지방정부차원의 여성참여증진 정책마련	43	106	96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적인 노후의 돌봄 환경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31.61%가 이웃과 활발한 네트워크가 구성된 마을공동체라 답하였다. 다음으로 시설 좋은 요양원이 21.13%,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 실버타운이 20.30%, 조합주택(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을 매개로 한 돌봄공동체가 12.48%, 다문화, 비혼 가구 등 다양한 가구형태가 모여 사는 공공주택을 매개로 한 돌봄공동체가 6.66%, 자녀들에 의한 돌봄이 5.82%, 기타가 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거주(Ageing in Place)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외에 요양원, 실버타운, 조합주택 등 공적/사적 자원 등의 투입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의 거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네트워크가 활발한 마을공동체나 유사한 사람들끼리의 조합주택을 매개로 한 돌봄공동체, 공공주택을 매개로 하는 돌봄공동체 등 소통과 연대가 있는 공동체에 대한 욕구가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것과 공동체기반의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3-23〉 이상적인 노후 돌봄 환경

(단위: 명, %)

	빈도	비율
자녀들에 의한 돌봄	35	5.82
시설 좋은 요양원	127	21.13
이웃과 활발한 네트워크가 구성된 마을공동체	190	31.61
조합주택(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을 매개로 한 돌봄공동체	75	12.48
다문화, 비혼 가구 등 다양한 가구형태가 모여 사는 공공주택을 매개로 한 돌봄공동체	40	6.66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 실버타운	122	20.30

라. 여성 연령대별 정책 요구 특성

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가정 및 사회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요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생애주기가 반드시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령은 여성의 생애주기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정책 요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20-30대, 40-50대, 60대 이상으로 연령을 구분하여 연령대별 정책요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가족 정책 현황과 요구와 관련하여 ‘여성 경제활동 지원 정책’, ‘조직 내 여성리더 양성에 대한 지원 정책’, ‘여성의 정치적 의사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 과제’, ‘여성 건강 증진 정책’에서 연령대별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전복의 여성가족 비전과 관련해서는 ‘10년 후 희망하는 전복의 미래상’과 ‘미래 산업 분야의 여성 참여 증진 방안’, ‘이상적인 노후 돌봄 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차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 경제활동 지원 정책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연령대별 요구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생애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20-30대는 출산 및 육아의 문제, 40-50대는 자녀 양육, 가사, 돌봄의 문제, 60대 이상은 노인 돌봄의 문제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30대 여성의 경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확대, 구직상담,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구직상담,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낮은 편이고, 지역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요구는 높은 편이었다. 60대 이상 중고령 여성들은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와 노인 간병 및 돌봄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30대와 60대 이상에서 구직상담,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20대는 노동시장 입직의 어려움과 60대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낮아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표 3-24〉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연령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χ^2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30 24.19%	43 27.92%	27 37.50%	32.49**
구직상담,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강화	22 17.74%	18 11.69%	12 16.67%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확대	26 20.97%	27 17.53%	7 9.72%	
공공보육시설 확대	11 8.87%	15 9.74%	5 6.94%	
유연근무제(시차근무제, 재택근무 등) 확대	13 10.48%	17 11.04%	1 1.39%	
창업지원(공간, 자금, 컨설팅 등)	6 4.84%	7 4.55%	3 4.17%	
노인 간병 및 돌봄 지원 서비스 제공	2 1.61%	4 2.60%	9 12.50%	
지역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13 10.48%	19 12.34%	5 6.94%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개선	1 0.81%	4 2.60%	3 4.17%	

2) 조직 내 여성리더 양성에 대한 지원

조직 내 여성리더 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조사한 결과 20-30대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알·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요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40-50대 여성들은 관리자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과 부서배치, 승진, 근무성적평가 등에서의 차별해소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이 조직 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20-30대 여성은 조직 내에서 살아남아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차원, 40-50대 여성은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관리자로서의 역량강화와 직장 내 성차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60대는 여성관리자의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해 여성리더 양성 지원 등 연령대별로 필요한 정책이 다르게 나타났다.

〈표 3-25〉 여성이 조직 내에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연령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χ^2
관리자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	24 19.35%	43 27.74%	20 28.17%	34.12**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지원	20 16.13%	25 16.13%	19 26.76%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20 16.13%	26 16.77%	21 29.58%	
여성이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되지 않도록 일·가정양립지원강화	50 40.32%	40 25.81%	9 12.68%	
부서배치, 승진, 근무성적평가 등에서 차별 해소	7 5.65%	17 10.97%	0 0.00%	
기업 내 여성위원회 등 양성평등 촉진 기구 설치·운영	3 2.42%	3 1.94%	2 2.82%	
여성임원비율확대	0 0.00%	1 0.65%	0 0.00%	

3) 여성의 정치적 의사결정권 강화를 위한 과제

여성의 정치적 의사결정권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 20-30대는 국회 비례대표 수 증가를 통한 여성의원 확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여성정치 후보자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40-50대는 여성정치 후보자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국회 비례대표 수 증가와 지역구 선출직 30% 여성후보 할당에 대한 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비교적 젊은 층에서 여성정치 후보자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 정치인을 육성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 문화 확산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6〉 여성의 정치적 의사결정권 강화를 위한 과제

(단위: 명, %)

	연령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χ^2
국회 비례대표 수 증가를 통한 여성의원 확대	38 30.89%	33 21.29%	25 35.71%	18.71*
지역구 선출직 의원의 30% 여성 후보할당에 대한 법적 의무화	22 17.89%	31 20.00%	20 28.57%	
여성의원 후보자 다수 추천 정당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확대	11 8.94%	23 14.84%	10 14.29%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자 공천 확대	23 18.70%	21 13.55%	7 10.00%	
여성정치 후보자 발굴 및 육성	29 23.58%	47 30.32%	8 11.43%	

4) 여성 건강 증진 정책

여성의 건강 증진 정책에 대한 요구를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20-30대는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 생애주기 여성건강관리에 대한 요구, 여성 친화적인 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60대는 공공의료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성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한 건강 연구 및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60대 여성의 공공의료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노후 소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령의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해 노후 빈곤에 처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공적 연금 가입 등의 노후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노후 소득, 경제적 문제가 있어 공공의료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3-27〉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연령별			χ^2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성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한 건강 연구 및 정보제공(온·오프라인)	17 13.71%	21 13.55%	12 16.67%	25.10**
공공의료지원 확대	21 16.94%	46 29.68%	33 45.83%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 및 상담	19 15.32%	24 15.48%	10 13.89%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 지원	36 29.03%	36 23.23%	9 12.50%	
전 생애주기 여성건강 관리	20 16.13%	20 12.90%	5 6.94%	
여성친화적인 의료체계의 구축	9 7.26%	7 4.52%	3 4.17%	
건강자조모임(건강관련정보교환 상부상조를 위한 자발적 모임) 활성화 지원	2 1.61%	1 0.65%	0 0.00%	

5) 10년 후 희망하는 전복의 미래상

10년 후 희망하는 전복의 미래상에 대해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 20-30대는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고, 그 다음으로 인권/존엄, 풍요로움을 중요한 가치로 보았다. 40-50대는 풍요로움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고, 그 다음으로 안전, 인권/존엄을 중요하게 보았다. 60대는 풍요로움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고, 그다음으로 인권/존엄, 소통을 중요하게 보았다. 전 연령대에서 풍요로움과 인권/존엄을 중요한 미래상으로 보았음. 젊은 여성들은 안전을, 고령 여성들은 소통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표 3-28〉 10년 후 희망하는 전북의 미래상

(단위: 명)

	연령대				연령대		
	30대 이하	40-50대	60대 이상		30대 이하	40-50대	60대 이상
소통	11	14	13	신뢰	3	3	2
	8.87%	9.15%	18.84%		2.42%	1.96%	2.90%
풍요 로움	20	38	24	형평성	8	1	1
	16.13%	24.84%	34.78%		6.45%	0.65%	1.45%
인권/ 존엄	20	27	16	조화/ 균형	5	9	2
	16.13%	17.65%	23.19%		4.03%	5.88%	2.90%
안전	32	35	7	성평등	4	0	0
	25.81%	22.88%	10.14%		3.23%	0.00%	0.00%
다양성	8	8	0	공동체	1	3	0
	6.45%	5.23%	0.00%		0.81%	1.96%	0.00%
사회적 돌봄	5	7	2	생태적 환경	5	6	1
	4.03%	4.58%	2.90%		4.03%	3.92%	1.45%
연대/ 통합	2	2	1	χ^2	42.52*		
	1.61%	1.31%	1.45%				

6) 미래 산업 분야의 여성 참여 증진 방안

탄소산업, 재생에너지, 미래형 수소기계산업, 첨단 농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 20-30대 여성들은 여성인력에 대한 성고정 관념의 변화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래산업 관련 직업훈련 강화, 여성 스스로의 역량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40-50대 여성들은 여성 스스로의 역량강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고, 미래 산업 관련 직업훈련 강화, 관련 기업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여성들은 여성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고, 그 다음으로 이공계 여성의 역량강화, 여성인력에 대한 성고정 관념의 변화 순으로 중요하게 보았다.

〈표 3-29〉 미래 산업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단위: 명, %)

	연령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χ^2
이공계 여성의 역량 강화	17	15	17	24.73*
	13.71%	9.74%	24.29%	
여성인력에 대한 성고정 관념의 변화	24	23	12	
	19.35%	14.94%	17.14%	
여성 스스로의 역량 강화 노력	22	36	20	
	17.74%	23.38%	28.57%	
관련 기업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	16	26	10	
	12.90%	16.88%	14.29%	
미래 산업 관련 직업훈련 강화	23	31	10	
	18.55%	20.13%	14.29%	
미래 산업에 여성참여를 장려하는 지역 여론의 형성	5	10	1	
	4.03%	6.49%	1.43%	
미래 산업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여성참여 증진 정책 마련	17	13	0	
	13.71%	8.44%	0.00%	

7) 이상적인 노후 돌봄 환경

이상적인 노후 돌봄 환경에 대해 연령별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는 이웃과 활발한 네트워크가 구성된 마을공동체를 가장 이상적인 노후 돌봄 환경으로 보았으며, 시설 좋은 요양원,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 실버타운 순으로 나타났다. 40-50대도 마찬가지로 이웃과 활발한 네트워크가 구성된 마을공동체를 가장 이상적인 노후 돌봄 환경으로 보았으며,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 실버타운, 조합주택을 매개로 한 돌봄공동체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시설 좋은 요양원을 가장 이상적인 노후 돌봄 환경으로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웃과 활발한 네트워크가 구성된 마을공동체,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 실버타운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에 의한 돌봄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중으로 나타나 더 이상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 의해 부양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일치하였다. 전반적으로 네트워크가 잘 작동하는 마을공동체

나 유사한 사람끼리의 공동체를 이상적인 노후의 돌봄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3-30〉 이상적인 노후 돌봄 환경

(단위: 명, %)

	연령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χ^2
자녀들에 의한 돌봄	6	7	1	34.29**
	4.96%	4.52%	1.43%	
시설 좋은 요양원	22	19	29	
	18.18%	12.26%	41.43%	
이웃과 활발한 네트워크가 구성된 마을공동체	44	58	21	
	36.36%	37.42%	30.00%	
조합주택을 매개로 한 돌봄공동체	13	22	7	
	10.74%	14.19%	10.00%	
다문화, 비혼 가구 등 다양한 가구 형태가 모여 사는 공공주택을 매개로 한 돌봄공동체	11	13	2	
	9.09%	8.39%	2.86%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 실버타운	22	36	10	
	18.18%	23.23%	14.29%	

마. 소결

2030 전라북도 여성가족 비전 수립을 위하여 전라북도 여성가족 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하고, 전라북도의 미래상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14개 시와 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만 75세 미만 전북도민으로 601명이 응답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책환경

전라북도 도민들은 전라북도의 정주 여건에 대해서 일자리/소득 분야를 제외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별로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살기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여성·가족 정책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영역은 일·생활균형(27.4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차별 없는 양성평등의식과 문화 확산(25.12%), 일자리에서의 남녀평등(19.63%) 순으로 나타나 일·생활균형 및 여성 일자리 문제와 성평등 인식 개선에 대한 정책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정책 지원 대상으로는 청년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맞벌이 가족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여성·가족 분야별 정책요구와 과제

여성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 요구를 확인한 결과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강화와 같은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직접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육아휴직, 출산휴가의 확대’, 유연근무제(시차근무제, 재택근무 등) 확대,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 일·생활균형을 위한 제도마련 요구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일자리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은 전라북도에 일자리 자체가 없고,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고, 임금수준이 너무 낮아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일자리 환경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일관되게 일·생활 균형 정책에 대해서도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의무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여성 대표성 증대를 위한 정책 요구를 조사한 결과 여성이 조직 내에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자로서의 역량강화,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과 여성관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정책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의원비례대표 수 증가로 여성의원을 확대하는 적극적 정책과 여성정치 후보자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 돌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자녀를 함께 돌보는 육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전라북도 도민은 자녀돌봄에 대해 공적 역할보다는 가정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대한 정책요구로는 공공의료지원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 및 상담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여성의 건강증진에 대해서는 연령별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라북도 도민들은 안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으나, 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시 지역에 비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전라북도 아동을 위한 정책으로는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과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한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아동의 참여권 및 놀 권리에 대한 보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는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성폭력 등의 폭력과 범죄피해의 예방과 보호정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의 참여활동 및 권리증진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성평등 의식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족 내 성평등 의식 조사 결과 일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시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다. 가사, 아이돌봄, 노인돌봄이 여성의 일이라는 고정된 성역할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는 높게 나타나면서도 양성평등 인식개선이나 가사에 대한 남성의 적극 참여, 가족 문제에서의 의사결정권 증대 등에 대한 요구는 낮게 나타나 농촌지역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정책으로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노후 빈곤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어 노후를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3)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에 대한 인식

전라북도의 미래를 떠올렸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풍요로움’, ‘안전’, ‘인권/존엄’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도민이 바라는 이상적인 지역 사회는 ‘일자리가 풍부’하고, ‘이동이 편리’하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과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로 제시되었다. 인프라 차원의 발전과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제발전에 대한 관심은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세대 리더 양성분야에 대해서도 경제, 교육 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그 외에도 복지, 환경, 문화예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리더 양성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미래에 전라북도가 당면할 문제로는 인구감소를 가장 큰 문제로 보았으며, 저출산/고령화, 환경오염/기후변화, 지방소멸,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이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및 소득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 외에도 의료 및 교통접근권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범죄로부터의 안전 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타파(성평등 문화 확산)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었다.

탄소산업, 재생에너지, 미래형 수소기계 산업(상용차 산업), 첨단 농업 등 과학기술 발전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의 역량 강화 노력이 가장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역량강화와 인식 개선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미래산업 관련 직업 훈련, 이공계여성 역량 강화와 여성인력에 대한 성 고정관념의 변화. 기업의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전라북도에서는 이상적인 노후 돌봄 환경에 대해 이웃과 활발한 네트워크가 구성된 마을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적인 노후 환경에 대해 자신의 지

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거주(Ageing in Place)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으며, 이후 공적 자원의 투입을 통해 시설이 좋은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서의 거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라북도의 미래상에 대한 기대, 즉 안전, 인권, 존엄의 공동체적 가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의 여성·가족 정책현황과 미래상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라북도의 경제 및 일자리 분야의 여성 참여 활성화와 성평등한 인식과 문화 조성의 주요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전라북도 도민은 경제성장과 발전이라는 측면과 함께 사는 공동체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협동과 협력에 기반한 농어촌의 중심 가치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돌봄, 안전에 있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참여하는 것을 통해 전라북도의 주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인다. 전라북도의 여성·가족 정책현황과 미래상에 대한 인식 중 몇몇 분야에서 연령대별 차이,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정책과제를 개발할 때에는 정책 대상자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려하여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좀 더 세밀한 과제 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인구감소와 고령사회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특히 이 문제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사회보장 재원, 공공의료 시스템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반면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노년기에도 생산적인 일을 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농어촌 지역의 분포가 높은 전라북도는 인구감소, 고령사회, 환경과 기후변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노동 가능 인구의 증가와 사회 부양 부담의 감소 등 전라북도의 미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 및 청년세대의 성장과 노년세대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여성가족정책 영역별 전문가 FGI

가. 조사 개요

여성·가족정책 영역별 전라북도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여성·가족 정책 영역별 FGI를 실시했다. FGI는 정책 영역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비전 수립의 방향과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조사는 2020년 6월에 실시했으며, 여성·가족 정책 영역을 5개로 구분하여 영역별 전문가 5~6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총 2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학계, 정치, 여성단체 관계자, 시설장, 활동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섭외했다.

FGI는 회당 2~3시간 이내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내용은 전북 여성·가족 정책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전북 10년 성평등 미래상을 위한 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31〉 전문가 FGI 참가자

조	일자	사례	참석자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여성대표성	2020.6.5	1	전라북도의원, 50대
		2	,전북대학교 교수, 60대
		3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40대
		4	전주 YMCA 관계자, 50대
		5	전주시사회혁신센터 관계자, 50대
		6	전라북도의원, 60대
일생활균형 및 돌봄 분야	2020.6.5	7	00노인복지관 관계자, 40대
		8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 50대
		9	00000협동조합 관계자, 30대
		10	00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40대
		11	00여성교육문화센터 관계자, 50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및 안전	2020.6.5	12	00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계자, 40대
		13	00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40대
		14	00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30대
		15	00여성인권지원센터 관계자, 50대
		16	00장애인인권연대 관계자, 40대
		17	00여성의전화 관계자, 40대
성평등 경제 기반과 여성 일자리 분야	2020.6.18	18	소비자관련단체 관계자, 60대
		19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 50대
		20	00사회적경제네트워크 관계자, 30대
		21	00여성농업인센터 관계자, 50대
		22	노동단체 관계자, 40대
2030 청년여성	2020.6.19	23	서점 관계자, 30대
		24	정당관계자, 20대
		25	000000협동조합 관계자, 30대
		26	문화예술계 활동가 30대
		27	유튜브 활동가, 20대

나. 전문가 FGI 분석 결과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여성대표성

〈표 3-32〉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여성대표성 영역 전문가 FGI 주요 내용

현황 및 문제점	진단과 제언
- 여성정책과 성평등을 총괄할 구심점이 없음 - 5급 여성공무원은 증가했지만 고위직 여성비율은 여전히 낮음 - 위원회의 여성비율 할당이 형식적이고 다양한 통로로 여성을 발탁하는 노력이 부족함 -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도 전국 하위권임 - 남성중심 정당정치와 네트워크로 정치 지망하는 여성 진입이 애초부터 어려움	- 여성공직자 고위직 진출에 적극적조치가 필요 - 사회 각 분야 전문 역량 보유 인재 발굴 노력 - 여성할당제, 가산점 부여제도의 실효성 확보 - 비례대표는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문가 추천이 바람직함 - 여성정치인 양성 및 추천시 보조금 지원제도 필요 - 여성정책 및 성평등 총괄할 구심점 마련 - 여성들의 쉼과 휴식을 위한 공간 창출 - 2030세대 위한 성평등 교육공간 필요 - 2030청년세대 정치지도자 양성이 요구됨 - 청년여성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비전과 꿈 제시 - 도민 대상 성평등전문교육기관과 생애주기에 따른 성평등교육 필요 - 농촌지역 대상 성평등의식제고 - 성평등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과 확산

전문가 FGI 결과, 전북의 남녀평등 의식과 여성 대표성에 대한 현황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여성정책과 성평등을 총괄하는 구심점이 없다는 것과 공공, 정치 영역에서 여성대표성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 전반과 가족 내 성평등 의식 및 문화가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과 종합적이고 힘 있는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구축이 전북의 여성·가족 정책 주요 목표로 도출되었다.

〈정책방향 도출〉

1. 전북지역의 여성정책을 통괄하고 종합적으로 펼쳐나갈 추진력 있는 여성 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한다.

2. 도민대상의 성별, 생애주기별, 도농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성평등 교육과 성평등 문화를 확산한다.
3.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여성들의 일상적인 정치역량 제고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2030세대를 대상으로 미래리더를 육성하는 정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문화예술계 및 관광분야의 성평등 구축 및 성평등 콘텐츠의 개발한다.

2) 일·생활 균형 및 돌봄

〈표 3-33〉 일생활균형 및 돌봄 영역 전문가 FGI 주요 내용

현황 및 문제점	진단과 제언
- 중앙정부의 돌봄정책이 주를 이룬 상태에서 지자체 돌봄사업이 부재한 편 - 기존 바우처사업이 줄어들고 그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한 민간 돌봄시장이 확대되는 현상 - 대부분 여성이 근무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족친화제도 시행은 여건상 거의 불가능함 - 아버지돌봄프로그램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지만 사업비 한계가 아쉬움 - 돌봄 영리조직 플랫폼의 진출로 비영리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지가 어려운 현실 - 취학 전 돌봄기관의 중복서비스 제공으로 경쟁이 불가피한 체계 -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담보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자체 떠넘기기가 되지 말아야 함 - 저출산 위기 속 농촌지역 돌봄서비스 기관의 공급과잉과 경쟁체제가 가속화되고 있음 - 돌봄서비스 확대로 이용자(학부모, 가족, 자녀 등)들의 선택권이 넓어짐 - 농촌지역 특성상 결혼이주여성들의 전일제 취업이 어려운 현실이며 중복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실임	- 농촌지역 돌봄 사각지대 발굴하여 공동체적 돌봄사업 개발 - 민간분야 돌봄시장에 대한 공적 지원과 관리 필요,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 공동육아나눔터, 동네이모, 등 자발적 마을 조직에 대한 지속적 재정 지원 필요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기능 자원사업 강화 필요 - 돌봄서비스 기관간 중복을 없애고 질 제고를 위해 통합체계가 필요함 - 지자체 수준에서 서비스 공급을 재량껏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 돌봄체계 구축 - 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인식교육 제공(돌봄종사자에 대한 존중, 서비스 요구시 매너, 이용자의 자세 등)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의 재설계 필요: 가족친화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필요 - 결혼이주여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혹은 창업으로 연계하는 사업 - 행정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돌봄공동체 구축 - 좋은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공동체 조성 - 돌봄지원 체계의 개편 불가피 - 돌봐주고 도움받는 전생애주기 돌봄시스템 마련 - 전생애주기 돌봄교육으로 돌봄의 선순환체계 구축

전문가 FGI 결과, 돌봄 영역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영역과 공적영역이 혼재되어 있어 돌봄지원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제한이 많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반면에 전북은 공동체적인 정의 문화와 농촌지역에 여전히 마을공동체 문화가 잔존해 있으므로 지역 기반 돌봄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일·생활 균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실행과 지원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이에 일·생활 균형, 연대를 통한 행복한 돌봄, 지역기반 돌봄의 공동체 조성의 주요 목표가 도출되었다.

〈정책방향 도출〉

1. 지역기반의 통합적인 돌봄 공동체의 구축 및 지원 : 돌봄지원체계의 민간영역과 공적 영역의 조화가 필요하다.
2.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행복한 돌봄 사회를 조성한다.
 - ① 권역통합형 독거노인 생활관리와 건강지원
 - ② 거주지에서의 평온한 마침이 가능한 지원체계의 구축
3.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등 수요에 기반을 둔 일·생활 균형 지원을 강화한다.
4.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한 일·생활 균형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3)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안전

〈표 3-34〉 사회적 약자의 권익 및 안전 영역 전문가 FGI 주요 내용

현황 및 문제점	진단과 제언
-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담병원이 없어서 병원 접근이 어렵고 이용 시 불편한 점이 많음 - 가부장적 사회문화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문제를 야기함 - 선미촌과 달리 중고령여성의 집결지 선화촌이 존재하며 혁신도시 유흥시설, 주택가, 오피스텔 등 변형된 성매매업소들이 산재되어 영업 중임.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환경이 초등교육부터 조성되어야 함. - 성매매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서비스는 빈곤, 노동, 성문제 등 총체적 접근이 필요함.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 - 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관점에서 자활, 자립 논의와 통합지원체계 제공

현황 및 문제점	진단과 제언
- 어릴 적 빈곤과 열악한 노동환경 경험을 통해 성매매 유입경로로 이어지고 성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 고리가 존재함 - 청소년의 가까운 미래인 청년들은 지역사회를 떠나고 있으며 불안하고 과도기적 청소년기를 경과하고 있음. 활동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업과 인프라가 부족함. - 청소년은 학생으로만 인식되고, 군단위, 농촌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결국 지역을 떠나므로 정착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함. - 결혼이주여성의 정착 및 교육지원 자원 투자는 풍부하지만 막상 직업훈련을 시켜도 자격증 획득이 쉽지 않고 일자리 연계도 어려움. -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늘고 있음 - 자식이나 이웃에게 폐가될까봐 스스로 고립되는 농촌노인, 언어소통이 어려운 이주여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례발굴이 필요함	-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대응 통합적 시스템 구축 - 청소년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 마련, 주체적 참여를 위한 사업 제공이 확대되어야 함, 청소년 참여활동의 일상화 -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체로 활동하도록 청소년의회, 활동의 장 마련 -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센터 종사자의 다문화·인권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며 한국인 남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 - 대상별 특화서비스나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통합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가폭, 성폭, 성매매, 폭력피해 이주여성, 장애여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제도교육 내 인권, 평화, 젠더 등의 주제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 - 결혼이주여성 대상 서비스 중복 사례를 막고 효율적인 지원방안 마련 - 기술기반 성폭력, 성범죄의 디지털화로 통합적 법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치가 시급함(아동청소년성매매지원센터) -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교육과 인식 개선보다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성매매, 성산업 축소 선도적인 전북, 성매매없는 성평등전북만들기 - 당사자의 목소리로 참여의 장 열 수 있도록 지원 - 농촌지역 돌봄사각지대 찾아가는 이동서비스 필요 - 문화다양성 이해, 이주여성 정책 패러다임 변화 주도

전문가 FGI 결과, 아동·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안전 영역에서는 가부장적 사회문화가 여전히 부정적 영향을 미쳐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은 지역사회를 떠나고, 사회변화 속도에 비해 인식의 변화 속도가 매우 느려 아동·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장애여성, 폭력피해여성, 결혼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부장적이고 성불평등적인 문화와 인식은 더욱 가중되어 나타났다. 자립, 자활이 불가능한 사회적 구조에 빈곤의 여성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복의 미래를 위한 여성 인권 존중, 폭력 예방을 통한 안전한 공동체 조성이라는 주요 목표가 도출되었다.

〈정책방향 도출〉

1. 미래세대 주체인 아동·청소년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 ① 청소년 수당 도입, 청소년 참여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과 청소년 공간 제공
 - ② 청소년 대상 상담센터 확충
2. 안전, 폭력 예방을 위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 ①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대응 통합시스템 구축
 - ② 디지털 성범죄 및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 구축
 - ③ 돌봄노동 사용자 및 영세사업장 대상 성폭력예방 교육 등 성인지 교육과 인식 확대 지원
3. 빈곤의 여성화 완화 :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소수자 인권보호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 ① 장애인,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시설
 - ② 결혼이주여성 통합사례 관리 및 지원 서비스 강화
 - ③ 사회적 약자가 참여, 스스로 제안하고 참여하는 정책 입안 방안 추진
 - ③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취업해 있는 청년 여성, 경력단절 후 취업여성, 간병 등 돌봄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 여성들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와 휴식권 보장

4) 성평등 경제 기반과 여성 일자리

〈표 3-35〉 성평등 경제 기반과 여성 일자리 영역 전문가 FGI 주요 내용

현황 및 문제점	진단과 제언
- 여성노동시장 진출은 비정규직, 보건업종에 치중되어 있고 가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이 대부분 -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이 많은 전북의 열악한 특성 - 코로나 여파로 여성노동자 무급휴가, 해고가 급증 - 도시 외각 지역 근로자들이 다문화여성과의 결혼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고학력 젊은 여성들의 유출, 경력단절 여성들의 부적응으로 취업유지가 어려움 - 완주 로컬푸드,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 기반의 자족적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타 지역의 선진사례가 됨. 코로나 재난상황에서 비교적 타격을 덜 받고 돌봄, 경제가 순환, 유지될 수 있었음. - 일부 지역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서비스는 민간위탁화되어 근로조건과 처우가 악화되었음 -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은 지자체로 이양되어 여성농민 대상 사업 전개가 어려워짐. 여성들은 농가 일손으로 일당을 받을 때 남성보다 낮은 임금. 여성농민의 경제활동참여가 높지만 소득은 평균 미만 - 농가로 결혼해 온 이주여성들은 가사노동과 농사일을 하면서 육아, 허드렛일을 수행함. - 면단위의 생활문화 인프라가 거의 없어 젊은 세대가 떠나고 있음	- 농촌지역 보육 및 돌봄시설을 다기능화해 저출산에 유연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특성에 맞는 직종개발이 이뤄져야 함 - 재직여성과 경력단절여성의 역량강화 필요 - 소규모 영세기업의 출산육아휴직 지원제도가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 -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실질적 이해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농가공동경영제도 등록률을 높이고 실질적 혜택이 여성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 정부부처 농업관련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필요, - 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여성농민 리더십 교육 제공 - 청년, 젊은 부부, 귀농인들이 어우러져 살아갈 정주여건을 마련해가는 공동체 사업이 절실함 - 전북산업특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라이프케어산업, 스마트농생명, 탄소, 첨단융복합산업, 수송기계, 정보통신 분야 일자리가 기대됨. 여성들의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술 습득, 디자인, 회계나 재무, 마케팅 분야 취업역량이 요구됨. - 전북여성인재 DB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각 분야 여성리더 양성, 일자리 연계 - 스마트팜, 치유농장, 6차산업 융합 직종 개발로 일자리 창출 - 창업과 혁신관련 단체, 대학, 기업과의 연계로 플랫폼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 노사상생협약과 산단복합도시 조성시 보육시설, 문화시설 포함 등

전문가 FGI 결과, 성평등 경제 기반과 여성일자리 영역의 문제점은 전북의 경제 및 여성일자리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여성일자리 직종은 돌봄 등 여성 집중적인 일자리로 일자리의 조건과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여성 농민의 경우 무급 가족 종사자로 경제권 없고, 경제력이 취약하다.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여성, 고학력 여성은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성평등하고 미래 지향적인 여성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방향 도출〉

1.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마련한다.
 - ① 안전한 일터 구축 및 사회안전망 강화
 - ② 기업경영 및 관리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 확대
 - ③ 청년 여성의 일자리 안정과 빈곤 탈출에 대한 장기 플랜
2. 여성일자리 대안을 확장한다.
 - ① 전형적인 남성분야 일자리로의 여성진출 확대
 - ② 사회적 경제조직, 중간조직 및 워킹 그룹에의 여성 참여 확대
3. 미래 여성일자리 취업 및 창업 역량을 강화한다.
 - ① 탄소중립, 친환경산업, 미래에너지 산업 등의 여성일자리 확충 담론의 확산과 여성역량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② 재생에너지, 라이프케어산업, 첨단융복합산업, 수송기계 및 정보통신 분야의 여성진출 확대를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4. 여성 농민의 경제역량을 강화한다.
 - ① 농업분야 6차 산업 및 스마트 팜의 여성일자리 및 여성역량강화
 - ② 여성농민, 귀촌 여성들의 정착과 정주여건 증진 위한 지원

5) 성평등 문화와 청년여성

〈표 3-36〉 성평등 문화와 청년여성 영역 전문가 FGI 주요 내용

현황 및 문제점	진단과 제언
- 최근 몇 년간 성평등 관점의 정책 노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미흡해짐. - 청년여성 지역유출이 심각 - 농촌지역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음 - 성평등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구심점 부재 - 문화예술계 성별분리가 심하고 남성 관리자 많음 - 인맥이 좁고 보수적인 지역분위기, 성별감수성 낮아 성평등에 대한 반감이 존재 - 정보도, 인맥도, 가정에서의 기대도 없고, 사회에서의 롤모델도 없는 20대 지역에 사는 여성의 입지가 없다는 것 -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지역사회 인맥문화가 청년여성의 삶을 제한 - 생활이 되어야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것, 결국 취업을 위해 외지로 나가는 것 - 자존감, 꿈, 미래에의 투자 없이 불모지에서 배제되는, 잡초 같다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 정부, 공공기관 지원사업 공모에 남성 문화가 존재, 정보와 네트워크, 심사과정에서 배제당하는 분위기도 있음	-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 - 급증하는 1인 가구, 치매노인 가구, 비혼 가구 지원 - 차세대 리더양성을 위한 세대교체 방안 마련 - 성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한 특단의 노력 강구 - 여성농업인, 귀농귀여가구 지원 - 성평등·성주류화를 위한 기반 체계 마련 - 청년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가 필요 - 성평등 관점의 교육, 문화, 인식개선이 제도 교육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청년들의 문화공간과 문화예술 양성, 문화예술계 여성참여와 작품의 여성서사 작품 개발이 필요 - 시민으로 존중받는 권리, 기본소득 보장 - 문화예술 작품과 공연, 인재양성 교육에 젠더관점 가이드라인 필요 - 급증하는 여성 1인 가구 생활지원 서비스 확대

전문가 FGI 결과, 성평등 문화와 청년여성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전북 지역의 가부장적 가족 문화와 남성 중심적인 사회 문화가 청년여성의 삶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청년여성이 정주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큰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여성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과 청년층 주거복지,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주요 목표로 도출하였다.

〈정책방향 도출〉

1. 전북지역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한다.

- ① 가족 내 성평등 문화 확산, 가부장 문화의 타파
- ② 젊은 여성들의 모임과 연대, 여성정치가 활성화 지원
- ③ 청년 여성들의 권익과 목소리는 낼 수 있는 기회 제공

2. 청년여성의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 ① 청년여성들 대상의 주거대책과 기본소득 부여 필요
- ② 20-30대가 모여서 무언가를 꿈꾸고 논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
- ③ 성평등한 미래 여성일자리 생태계 조성

다. 소결

2030 전라북도 여성·가족 비전 수립을 위하여 여성·가족 정책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FGI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전북 여성·가족 정책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미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FGI를 통해 나타난 분야별 여성·가족 정책 현황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분야별 여성·가족 정책 현황과 과제

전북의 남녀평등 의식과 여성 대표성 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정책과 성평등을 총괄하는 구심점이 없다는 것과 공공, 정치 영역에서 여성대표성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북지역의 여성정책을 통괄하고 종합적으로 펼쳐나갈 추진력 있는 여성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 전반과 가족 내 성평등 의식 및 문화가 매우 열악하다. 이에 성평등의식 및 문화 확산과 종합적이고 힘 있는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북의 돌봄 영역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영역과 공적영역이 혼재되어 돌봄 지원 체계가 너무 복잡하며, 돌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전북은 공동체 문화가 잔존해 있으므로 지역기반 돌봄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생활 균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행과 지원이 부족함. 일·생활 균형, 지역기반 돌봄의 공동체 조성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 및 안전 영역에서 가부장적인 사회문화는 아동·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식의 변화가 매우 느려 아동·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장애여성, 폭력피해여성, 결혼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부장적이고 성불평등적인 문화와 인식은 더욱 가중되어 자립, 자활을 어렵게 하며, 빈곤의 여성화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의 미래를 위하여 여성 인권 존중, 폭력 예방을 통한 안전한 공동체 조성이 필요하다

성평등 경제 기반과 여성일자리영역에서 보면 전북의 경제 및 여성일자리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여성일자리의 직종은 돌봄 등 여성 집중적인 일자리로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농민은 경제권이 없어 경제력이 취약하다. 청년여성고학력 여성은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으며 여성 일자리의 조건과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여성의 일자리 분야의 확대를 위해 신성장 동력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성평등하고 미래 지향적인 여성일자리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성평등 문화와 청년여성 영역에서 보면 전북지역의 가부장적 가족 문화와 남성 중심적인 사회 문화는 청년여성의 삶을 제한하여, 청년여성이 정주하지 못하고 떠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전북의 생산가능인구의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청년여성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성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과 청년층 주거복지,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정책 방향 도출

여성 대표성 향상을 위해 전북지역의 여성정책을 통괄하고 종합적으로 펼쳐 나갈 추진력 있는 여성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과 성별, 생애주기별, 도농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영역별 도출된 정책방향을 보면 2030세대를 대상으로 정치 분야의 미래 리더 육성과 문화예술계 및 관광분야의 성평등 구축 및 성평등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돌봄과 관련해서는 공동체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기반의 통합적인 돌봄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을 중심 정책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 및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 미래세대 주체인 아동·청소년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안전, 폭력 예방을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주요 정책방향이다. 또한 빈곤의 여성화를 예방하고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와 대안적 일자리로 여성일자리 확장을 하는 것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미래 여성일자리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하고 여성 농민의 경제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두어야 한다. 여성의 일자리 참여확대와 관련하여 일·생활 균형이 핵심적인 정책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유연근무제, 육아휴직등과 함께 돌봄의 남성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북지역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가족 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가부장 문화의 타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여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 소득, 연대,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3. 요약 및 시사

가. 일·생활균형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욕구

전북 도민에게 있어 여성·가족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는, ‘일·생활균형’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에서 지배적인 정책 이슈가 전북에서도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차별 없는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과 직장생활 전반에 걸쳐 뿌리 깊은 가부장적, 혹은 남성 중심적 문화가 지배적이며 나아가 농촌지역의 경우 더욱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도민조사와 FGI조사 결과는 전북지역의 가부장적 문화와 성고정관념이 여성의 일자리참여를 제한하고 청년여성들의 전북 정주를 어렵게 만드는 근간임을 보여준다. 미래산업에의 여성참여 증진을 위해서도 여성인력에 대한 성고정 관념변화 및 기업들의 여성인식 변화라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인식의 개선이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지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남성중심적인 사회문화가 청년여성이 정주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큰 이유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여성인력이 기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들의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개선, 가정 내 성평등문화 확산 등으로 지역의 가부장적 문화 및 성고정관념 타파를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건강과 보건의 분야는 대부분 주민이 만족하며 살기 좋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건강 증진 서비스에 대하여 여성들의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한 정책요구가 제시되었다. 60대 이상 여성들은 ‘공공의료 지원 확대’를 젊은 층보다 더 많이 원했으며, 젊은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지원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민들은 전북이 비교적 안전한 지역사회라고 체감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도시 시설물 이용, 등하교 등 일상생활에서 대체로 안전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인구나 정주민구가 적어 불안감이 나타나기도 했다.

나. 비전수립과 정책의 중요한 대상은 청년여성과 아동·청소년

여성·가족정책과 비전수립에 있어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대상으로 청년여성과 아동·청소년 범주가 가장 높았다. 도민들이 미래의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한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청년여성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아동·청소년의 성장기반 구축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정책영역이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균형발달을 위한 지원 대책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꼽았다. 빈곤과 가족갈등으로 인해 요보호아동 발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볼 때 가족단위의 갈등해결 및 심리상담, 아동 균형발달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 증진, 청소년 참여활동 및 권리증진에 관한 사업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년여성들을 위해서는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과 청년층 주거복지,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 차세대 인재 양성 분야는 경제, 교육으로 나타나 이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과 제도 교육, 경력개발계획에 대한 전복 특성을 반영하였다. 조직 내 리더 성장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관리자로서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나 젊은 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여성인재 발굴과 여성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

성인지적 관점을 도정 전반에 확산하고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끌어 나갈 여성정책 컨트롤 타워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성의 정치분야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정치후보자 발굴 및 육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의 발굴과 육성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었다. FGI조사 결과 양성평등 기본계획 6개 영역 전 분야에 걸쳐 여성정치인을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직, 관리직여성 인재를 발굴해 내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인력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교육 제공과 여성 진출을 돕는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었다.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리더, 전문가,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여성인재DB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 추진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성평등 관점의 교육, 문화, 인식개선이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제도교육의 확립이 요청된다. 시민으로서의 권리만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통합적 민주시민 교육 체계를 전북이 선도적으로 개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라. 정책대상별(성별, 연령별 등) 두드러진 욕구와 인식

전반적으로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만족도가 뒤떨어져, 여성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이 필요하며 자녀돌봄과 관련된 지원은 보육시설의 확충, 육아공동체, 자녀양육지원 확대가 많았다. 남성의 경우 자녀와의 놀이, 문화체험에 대한 공간 확충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졌다.

경제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직업훈련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40대 여성의 경우 고용서비스 제공보다 지역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육아출산휴가 요구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40대 자녀양육기의 여성에게는 지역 내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경험한다든가, 자녀양육과 병행할 수 있는 방과 후 교사 등의 일자리 기회 제공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 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경제활동지원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폭력과 관련된 의식에서 대부분 폭력발생시 대응시스템 마련, 피해자 보호 및 지원강화가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성별로 남성은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처벌과 단속강화를, 여성은 가해자 및 재범자처벌 단속강화를 3순위로 꼽아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 FGI 조사결과 폭력과 안전한 지역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심각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성착취) 범죄에 대비한 통합적 법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 앞서 여성과 결혼한 남성 대상 교육과 서비스제공자들의 다문화감수성 강화가 요구되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자립지원을 위한 노력이 전북의 대표적인 성평등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향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의 소득, 일자리 등 경제적 욕구가 도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사와 노인돌봄이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마. 전북 도민이 바라는 미래상

전북 도민은 풍부한 일자리, 이동의 편리, 이웃과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공동체가 살아 있는 지역사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인권과 존엄,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바라는 미래사회의 상으로 여기고 있다.

풍요, 인권과 존엄, 안전이 중요한 가치로 나타났는데, 40-50대와 60대 이상은 풍요로움과 인권존엄, 소통의 순인 반면 20-30대는 ‘안전’을 첫 번째로 꼽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불안정한 처지가 대변되는 결과로 보인다. 청년여성의 경우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 미래에 투자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처지를 토로하였다.

여성이 살기 좋은 농어촌의 조건은 일자리 및 소득과 의료/교통권 강화와 함께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타파로 나타났다. 농촌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농가공동경영제도 등록률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여성 소득 확대를 위한 지역 특화 일자리 전략, 성평등인식개선 교육이 요구된다.

여성일자리 창출은 전북의 지역산업 특성에 따라 성장 동력으로 개발된 신재생 에너지, 라이프케어산업, 스마트농생명 등의 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이 강구되어야 한다.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 고학력여성 일자리 개발로 전북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집중적 노력이 필요하다.

도민들이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노후는 이웃과의 소통이 원활한 마을공동체이다.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20-30대나 40-50대는 이웃과 활발한 네트워크가 구성된 마을공동체를 가장 이상적인 노후 돌봄 환경으로 보았으나 60대 이상은 ‘시설 좋은 요양원’을 더 원했다. 독거하며 돌봄에 직면해 있는 농촌 노인들은 현실적인 대책으로서 의료서비스가 잘 갖춰진 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60대 미만 세대들은 조합주택이나 공공주택을 매개로 하는 돌봄공동체를 희망했으나 노후가 현실로 닥친 60대 이상은 시설 좋은 요양원을 원했다. 공공주택, 조합주택 등 주택정책을 매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고령자를 위한 질 좋은 케어시설 정비가 필요하다.

돌봄 공급의 확대로 인해 농촌지역에 서비스 공급과잉이나 미스매칭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기 때문에 서비스 중복은 막고 사각지대는 발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자발적인 돌봄 제공 조직을 지원하고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좋은 돌봄공동체 조성이 요구된다.

도민 조사 결과,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대와 30대의 경우 살기 좋지 않다는 응답이 살기 좋다는 응답과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 일자리를 구하고 일·생활 양립이 필요한 세대들의 욕구에는 전 북의 정주여건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부장적인 문화와 성고정 관념은 청년여성들의 정주욕구를 떨어뜨리고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를 원하는 30~40대 여성들의 꿈을 힘겹게 만드는 근간이 되고 있다.

4

장

비전과 전략

Jeonbuk Institute

-
1. 비전 및 전략체계
 2. 추진전략별 과제

제4장 비전과 전략

1. 비전 및 전략체계

가. 전북 여성가족 비전 2030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6대 영역의 틀에서 비취 본 전라북도 여성 현실과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여성들의 정책 참여와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여성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여성가족정책을 실현할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전북 지역발전에 핵심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전북의 여성뿐 아니라 도민 모두가 원하는 발전상은 일자리가 풍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안전한 사회, 어려울 때 이웃의 도움을 받고 소통이 잘 되는 공동체적 지역사회이다. 여성 1인가구, 농촌 결혼이주, 독거노인 가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포용적이며 빠짐없는 돌봄이 제공되며 성별 고정관념과 차별의식이 해소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20년 현실에서 향후 10년간 미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주체는 청년여성과 아동·청소년이며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민간부문 리더들이 전북의 여성가족 비전과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전 생애주기에 걸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 도시와 농촌, 가족과 학교, 직장 등 사회 전반에 뿌리박힌 가부장적 문화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성평등한 정책을 기획, 집행할 수 있는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강화가 반드시 실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정책의 구심점이 되는 조직의 위상은 정책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을 타 지자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계층, 지역과 연령을 아우르는 여성의 참여가 도민 모두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여성가족 미래비전 2030’을 실현하는 핵심 요인이 되며 일자리가 풍부하고 안전한 공동체로 이행할 수 있다.

여성이 만들어가는 인권, 존엄, 소통의 풍요로운 전북

〈그림 4-1〉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 2030

전북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상정하였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양성평등기본계획의 주요6개 정책영역을 포괄하면서 전북의 여성정책 특성과 도민이 바라는 지역사회 미래상을 반영하였다.

- 1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 2 인권 존중의 안심 공동체
- 3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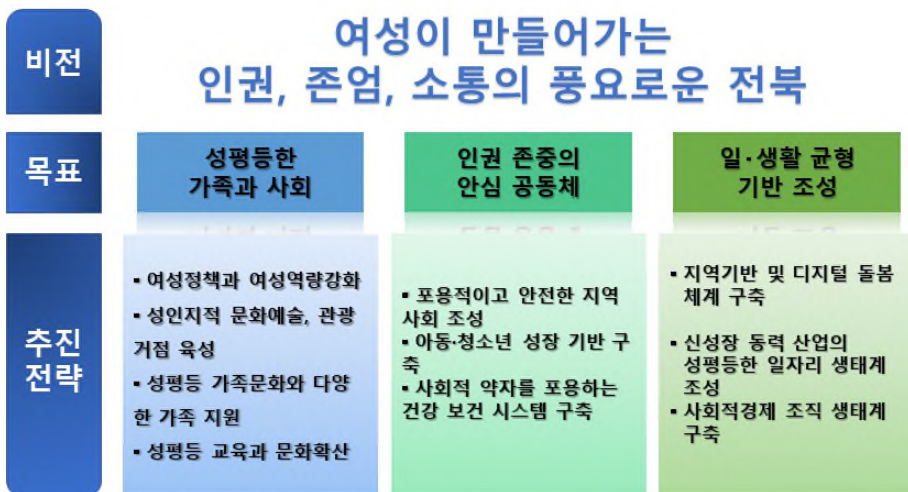
〈그림 4-2〉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 2030 3대 정책목표

나. 목표별 추진전략

‘모든 여성이 만들어가는 풍요로운 전북’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3대 목표별 추진전략은 10개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 3대 목표별 추진전략

목표	추진전략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여성정책과 여성역량 강화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and 다양한 가족지원
	성인지적 문화예술, 관광 거점 육성
	성평등 교육 혁신과 문화 확산
인권 존중의 안심 공동체	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아동·청소년 성장기반 구축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보전 시스템 구축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디지털 돌봄 및 지역 기반 돌봄 체계 구축
	신성장 동력 산업의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사회적 경제 조직 생태계 구축



〈그림 4-3〉 비전 체계도

정책목표 1.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추진 전략은 ‘여성정책과 여성역량 강화’이다. 최근 중하위권으로 하락한 전북 성평등 지수가 보여주듯이 사회 전반 특히 가족 관련 성평등 문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여성정책을 추동해 나갈 강력한 실행 조직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전반적으로 미래 전북의 여성가족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인재 역량강화, 세력화를 위해서도 여성정책 위상을 강화하고 추진해 나갈 구심점의 존재가 절실하다. 여성들의 역량과 위상강화를 위해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이 요청된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과 다양한 가족 지원’이다. 이는 청년여성 및 결혼이주여성들이 강하게 느끼고 있는 가족과 사회의 낮은 성평등 의식을 개선하고 젊은 여성들의 전북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다. 미래트렌드 분석에서도 제시되었듯, 세계화는 전북에 다문화가족의 유입을 가져오고 있으나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는 다문화가족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여성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한다.

세 번째 추진전략인 ‘성인지적인 문화예술, 관광거점 육성’ 전략은 사회 각 분야 중 특히 문화 예술, 관광 분야의 성평등 인식 개선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해 전북을 인권존중의 안전한 공동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성평등 공동체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추진전략은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성평등 교육과 문화 확산’ 전략이다. 전북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식과 문화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초등학교부터 인권과 성인지감수성을 지닐 수 있는 소양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미래 트렌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술 변화는 일상생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데이터 통신의 발달은 생활의 변화를 야기하였는데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열리는 다양한 커뮤니

티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 증대는 여성권리를 신장하고 성별 격차를 감소하게 할 것이다. 다양한 미디어, SNS를 활용한 캠페인, 교육콘텐츠 개발 등으로 전북 특화 성평등 교육, 문화를 제공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목표2. 인권 존중의 안심 공동체

인권존중의 안심 공동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추진전략은 ‘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으로 농촌지역에서 고립되고 배제되기 쉬운 결혼이주여성,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날로 지능화되고 낮은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태세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전북을 여성친화적, 고령자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아동·청소년 성장 기반 구축’으로 청소년의 주체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의 추진체계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 미래 트렌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전북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며 전북은 인구의 도시유출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문제가 중요하게 나타난다. 인구 및 고령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청년인구, 특히 청년여성의 지역 내 정주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청년인구의 정주 환경 개선이라는 차원이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설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보전 시스템 구축’ 전략은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도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정신건강, 출산육아, 섭생 및 체력관리에 이르는 서비스들을 범주화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다. 미래 트렌드는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여, 부의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을 논의하였다. 전북에서도 고령 인구나 사회적 약자의 빈곤과 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제도적 준비가 시급하다

정책목표3.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였다. 일·생활 균형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지역기반 돌봄 체계 및 디지털 돌봄 체계 구축’이다. 지역기반 돌봄은 전북 도민이 원하는 이상적인 지역사회의 모습으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돌봄 수요가 폭증하면서 한편으로는 서비스의 공급과잉이, 한편으로는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실을 타개하는 전략이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소득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성평등한 돌봄 체계와 돌봄의 디지털화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 외에도 이미 제도화되었지만 실효성이 미흡한 육아휴가, 아빠의 육아참여, 노동시간 단축, 기업 문화 개선 등의 실효성 확보 노력이 전북이 앞으로 노력해야 할 첫 번째 주요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은 ‘신성장 동력 산업 분야의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이다. 전북에서 전략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업무관련 전문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평등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동권을 비롯한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취업유지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 사업 확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균형제도 확산 실시가 필요하다. 미래 트렌드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로 다양한 고용형태와 새로운 일자리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미래 트렌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저하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전북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신성장 동력분야의 여성일자리 개발과 유연한 일자리, 여성 일자

리 환경 개선, 성평등한 고용을 주요 전략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전략은 전라북도만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발굴, 확대하여 도농 상생의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참여하는 전북형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확대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2. 추진전략별 과제

가. 추진과제 및 추진부서

3대 목표에 따른 추진전략별 추진과제는 향후 10년간 중점적으로 실시할 정책 사업이라 할 수 있다. 3대 목표별로 10개 추진전략에 대응하는 35개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4-2〉 목표 1.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 전략별 추진과제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추진부서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여성정책과 여성역량강화	■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대표성 적극적 확대 ■ 여성인재 DB구축과 활성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성인지적인 문화예술, 관광거점 육성	■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성평등 환경 조성 ■ 성인지적 생태환경 및 농어촌체험 관광 ■ 성평등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확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총괄과
			환경녹지국 자연생태과,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성평등 가족문화와 다양한 가족지원	■ 농산어촌의 성평등 문화 확산 ■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지원	농축산식품국 농촌활력과, 농촌정책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성평등 교육 혁신과 문화 확산	■ 생애주기에 따른 성평등 교육의 정착 ■ 남성 대상 성평등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성인지적 디지털 인프라구축 및 성평등 콘텐츠 구축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자치행정국 정보화총괄과, 자치행정과,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표 4-3〉 목표 2. 인권 존중의 안심 공동체 - 전략별 추진과제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추진부서
인권존중의 안심 공동체	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안전 증진 ■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폭력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 ■ 여성 친화적, 고령자 친화적 공간 조성 ■ 여성 및 사회적 약자 친화적 디지털 안전시스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관, 사회재난과, 인권담당관, 복지여성보건국의 모든 부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주택건축과,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과, 기획조정실 대도약기획단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관, 기획조정실, 정보화총괄과
	아동·청소년 성장기반 구축	■ 아동·청소년 참여와 권리 실현 기반 조성 ■ 지역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강화 ■ 발달 단계별 맞춤형 심신 건강관리 지원 ■ 지역 차원의 놀이 혁신 정책 추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기획조정실 대도약기획단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기획조정실 대도약기획단,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 보건 시스템 구축	■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신건강 지원 ■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공공 의료 구축 ■ 장애아동이나 치매 노인을 위한 자연 친화적 치유 공간 조성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서비스 제공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보건의료과, 건강안전과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의료과,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관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도로교통과, 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의료과, 건강안전과

〈표 4-4〉 목표 3.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 전략별 추진과제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추진부서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지역기반의 스마트 돌봄공동체	■ 지역 기반의 성평등한 상호 돌봄의 노인 공동체 조성 ■ 독거노인 및 여성고령 노인의 생활 및 여가 지원 ■ 지역기반의 성평등한 아동돌봄 체계구축 ■ 디지털 돌봄의 일상화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대도약기획단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정보화총괄과, 도민안전실 정보화총괄과,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와 제도 조성 ■ 여성 취창업 역량강화와 여성친화적 생태계 조성 ■ 평등한 일터, 능동적 노동권 확보	혁신성장산업국 신사업기획팀, 혁신도시팀,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정책관,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
	사회적 경제 조직 생태계 구축	■ 권역별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조직 마련 ■ 여성의 주체적 참여로 다양한 자조, 자활의 소공동체 육성 ■ 마을 중심 경제 생태계 지원 ■ 전북형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및 확산	일자리경제본부 사회적 경제과
			일자리경제본부 사회적 경제과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정책관, 사회적 경제과
			일자리경제본부 사회적 경제과

나. 과제별 사업 추진 일정

추진 전략별 과제를 다음 그림과 같은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 『전라북도 여성·가족미래비전 전략 수립(I)』은 전라북도의 여성·가족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위한 정책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과 그에 따른 중심과제 곧 추진과제까지를 제시한다. 추진전략에 따른 과제별 세부과제는 당초 연구계획에 의거해 2021년도 연구과제인 『전라북도 여성·가족미래비전 전략 수립(II)』를 통해 작성할 예정이다. 추진과제의 기간은 다른 과제의 기본이 되는 과제를 단기사업으로 하여 2023년을 완료하기로 한다. 2027년까지 실행을 목표로 하는 과제는 15개 과제이고, 2030년까지 완료되는 장기 과제는 7개이다.



〈그림 4-4〉 단계별 로드맵

1)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표 4-5〉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2021-2023	2024-2027	2028-2030
여성정책과 여성역량강화	■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	●		
	■ 여성대표성 적극적 확대		●	
	■ 여성인재 DB구축과 활성화	●		
성인지적인 문화예술, 관광거점 육성	■ 문화예술, 관광분야의 성평등 환경 조성		●	
	■ 성인지적 농어촌체험 관광		●	
	■ 성평등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확산	●		
성평등 가족문화와 다양한 가족 지원	■ 농산어촌의 성평등 문화 확산			●
	■ 다문화 가족, 1인가구, 한부모 가족 지원	●		
성평등 교육 혁신과 문화 확산	■ 생애주기에 따른 성평등 교육의 정착			●
	■ 남성 및 여성 대상 성평등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확대	●		
	■ 성인지적 디지털 인프라구축 및 성평등 콘텐츠 구축		●	

2) 인권 존중의 안심 공동체

〈표 4-6〉 인권 존중의 안심 공동체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2021- 2023	2024- 2027	2028- 2030
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안전의 증진	●		
	■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선제 대응시스템 구축		●	
	■ 여성친화적, 노령친화적 공간 조성			●
	■ 여성 및 사회적 약자 친화적 디지털 안전시스템		●	
아동·청소년 성장기반 구축	■ 아동, 청소년 참여와 권리 실현 기반 조성		●	
	■ 지역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강화	●		
	■ 발달 단계별 맞춤형 심신건강 관리지원 강화			●
	■ 지역차원의 놀이 혁신 정책 추진		●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 보건 시스템	■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신건강 지원	●		
	■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공공 의료 구축			●
	■ 장애아동이나 치매노인을 위한 자연친화적 치유 공간 조성		●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서비스 제공		●	

3)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표 4-7〉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2021-2023	2024-2027	2028-2030
지역기반 돌봄 및 디지털 돌봄 체계 구축	■ 지역 기반 성평등한 상호 돌봄의 노인 공동체 조성			●
	■ 독거노인 및 여성고령 노인의 생활 및 여가 지원	●		
	■ 디지털 돌봄의 일상화		●	
	■ 지역기반의 성평등한 아동돌봄 체계 구축	●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		●	
	■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	
	■ 여성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	●		
	■ 평등한 일터, 능동적 노동권 확보			●
사회적 경제 조직 생태계 구축	■ 권역별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조직 마련	●		
	■ 다양한 자조, 자활의 소공동체 육성	●		
	■ 마을 중심 경제 생태계 지원		●	
	■ 전복형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및 확산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경상북도(2018), 경상북도 양성평등 비전 2030
- 관계부처 합동(2020),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시행계획
- 국제미래학회 공저(2014), 전략적 미래예측방법론, 도서출판 두남
- 박영숙, 제롬글렌(2018), 세계미래보고서 2019, 비즈니스북스
- 박영숙, 제롬글렌(2016), 세계미래보고서 2050, 교보문고
- 박영숙, 제롬글렌 외(2013), 유엔미래보고서 2040, 교보문고
- 박영숙, 제롬글렌 외(2012), 유엔미래보고서 2030, 교보문고
- 박영숙, 제롬글렌 외(2009), 유엔미래보고서 2, 교보문고
- 임혜경, 안승연 외(2019), 경기도 성평등 목표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장은하(2016), 재난과 젠더 ; 취약성과 역량을 주입으로, 젠더리뷰 Vol. 43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전라북도(2020),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시행계획(안)
- 전라북도(2013),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19), 2019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 전라북도
- 조경옥, 정유리(2017), 전북 성인지 통계, 전북연구원
- 주재선, 정성미 외(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재선, 김영란 외(2019),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충청남도(2016), 충청남도 양성평등 비전 2030
- 한국정보통계(2018), 2018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 전라북도
- 홍미영, 강희영 외(2015), 부산 여성비전 2030,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기획연구 2020-03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Ⅰ)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20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12-4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